





| SRI-기본-2021-11 |

# 정부 및 지방재정지출이 소득격차 해소에 미치는 영향

The Effect of Government and Local Government Expenditure on Easing Income Inequality

양은순

연구진

연구책임자 양은순 (수원시정연구원 연구위원)

참여연구원 성수현 (수원시정연구원 위촉연구원)

연구 자문위원

김경훈 (대한상공회의소 SGI 연구위원)

최제민 (하나금융경제연구소 연구원)

© 2021 수원시정연구원

**발행인** 김선희

**발행처** 수원시정연구원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수인로 126

(우편번호) 16429

전화 031-220-8001 팩스 031-220-8000

<http://www.suwon.re.kr>

**인쇄** 2021년 09월 30일

**발행** 2021년 09월 30일

**ISBN** 979-11-6819-007-8 (93320)

---

이 보고서를 인용 및 활용 시 아래와 같이 출처 표시해 주십시오.

양은순. 2021. 「정부 및 지방재정지출이 소득격차 해소에 미치는 영향」. 수원시정연구원.

---

비매품

## 주요 내용 및 정책제안

### ■ 주요 내용

- 다양한 분야에서 다루어질 수 있는 격차의 문제를 소득관점에서 살펴보고 격차해소를 위한 정부 및 지방정부 재정정책의 실효성 분석
- 국내 및 수원시를 비롯한 유사규모 자치단체들의 지니계수를 추정하고 소득원천별 불평등 기여도 및 한계효과를 분석. 이렇게 산출된 지니계수 변화에 정부 및 지방재정지출, 사회복지분야 지출, 총 세수(지방소득세수) 변화 등 재정정책과 경제성장(GDP, GRDP) 변화를 통한 경제정책의 영향을 분석, 개선방향 제시

### ■ 정책제안

- ① (한국 지니계수) 한국 지니계수는 2019년 기준 0.379로 2017년부터 지속적인 상승 추이, 소득원천별 지니계수 분해 결과 한국은 근로소득과 부동산소득 불평등 문제 가장 심각, 이에 따른 노동 및 임금정책, 공적이전 확대 노력 필요
  - 근로소득 불평등의 문제는 성별 임금격차, 교육수준, 연령, 종사상 지위, 업종에 따른 소득격차 등 다양한 원인에 의해 발생할 수 있음을 고려해 세심하고 디테일한 노동 및 임금정책 수립 필요
  - 부동산 소득 불평등 문제는 가격 안정화를 위한 정책, 조세정책 등을 통해 개선방법을 고려할 수 있으나 공급과 수요의 문제, 투기성 자산 성격의 문제, 정책의 파급효과 불확실성, 조세저항 등 고려해야 할 부분에 복합적인 어려움. 때문에 이러한 방법 외에 부동산 분야 소득을 격차 완화에 효과를 보이고 있는 금융소득으로 전환시킬 수 있는 방안 고민
  - 또한 저소득층에 대한 공적부조, 사회보장제도와 같은 이전소득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소득재분배 효과를 극대화할 필요
- ② (정부재정지출) 한국 지니계수와 정부지출, 사회복지분야 지출, 총 세수, GDP 변수로 구성된 SVAR분석 결과 장기적으로 국내총생산(GDP) 확대만이 소득격차를 완화시키는 궁

## 정적 역할 확인

국내 재정지출 및 사회복지분야 지출 확대는 장기적으로 소득격차 완화에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못하고 있으며 세수 증대는 지니계수를 높여 소득격차를 확대시키는 부정적 역할

③ (수원시 및 기초자치단체 지니계수) 수원시를 비롯한 유사규모 자치단체 지니계수는 한국보다 낮은 수준, 한국 지니계수가 최근 증가 추이를 보이는데 반해 전반적으로 하락하며 소득 불평등이 개선되는 추이, 소득원천별 지니계수 분해 결과 수원시와 성남시의 경우 한국 데이터와 유사하게 근로소득과 부동산소득 불평등도가 높으며 소득 격차를 악화시키는 요인으로 확인

기초자치단체 차원에서 대처할 수 있는 근로 및 노동정책, 임금정책, 관련사업 등을 고민할 필요

- 2019년 기준 수원시 지니계수는 0.338로 성남시, 고양시 대비 소득격차가 낮은 것으로 확인되며 화성시, 용인시 보다는 높음
- 부동산소득 불평등 해소의 문제는 국가차원의 정책에 의존하는 한계가 있으나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정부정책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자체 방안 마련 필요
- 이전소득 확대 방안을 통해 소득 불평등 일정수준 완화 가능

④ (지방재정지출) 패널 ARDL 분석결과 지방재정지출과 사회복지분야 지출이 단기에는 소득격차를 줄이는데 유의미한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반면 장기적으로 지니계수를 높여 지역 소득격차를 악화시키는 부정적 역할 확인

지방재정 지출 및 사회복지분야 지출을 단기적인 격차 해소를 위한 사업에 치중하기보다 장/단기 균형을 고려한 장기적 관점에서 추진하여야 하며 사업 방향성에 점진적인 전환 필요, 새로운 사업의 추진 역시 장기적 관점에서 소득 불균형을 해소할 수 있는 방향을 고려하는 등 지방재정 및 사회복지분야 지출의 구성과 성격에 변화 필요

- 단기 횡단면 분석을 통해 각 자치단체별 지니계수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한 결과 수원시의 경우 사회복지분야 지출만이 긍정적인 영향을, 지방재정지출과 지방세수, GRDP 변수의 경우 오히려 지역 소득격차를 확대, 성남시의 경우 수원시와 달리 지방재정지출, 사회복지분야 지출, GRDP가 증가할 경우 지니계수를 낮춰 성남시 지역 소득격차를 완화, 용인시는 규모의 차이는 있으나 성남시와 동일한 방향성 확인, 고양시의 경우 지방재정지출과 사회복지분야 지출이 지역 소득격차를 줄이는데 긍정적 역할, 결과에 따른 자치단체별 재정정책 방향 수립 필요

## 국문요약

### ■ 서론

#### ○ 연구의 배경

- 수원시를 비롯한 우리나라는 저출산과 고령화 등 사회적 문제와 더불어 노동시장 분절화가 심해지면서 경제 양극화와 소득분배 악화 현상을 극복하기 위해 지속 노력
- 최근 코로나19 등 경제 불확실성으로 소득재분배 정책에 대한 중요성 부각
- 소득재분배 정책을 통한 격차 해소의 문제는 경제 및 사회 전반에 걸쳐 중요한 영향을 미치게 되며 이러한 정책의 적절성을 분석할 필요

#### ○ 연구의 목적

- 현재 국내 연구에서는 기초자치단체 수준의 소득현황 분석, 지니계수 추정 연구가 거의 전무한 상황으로 본 연구에서는 국내 및 수원시를 비롯한 기초자치단체 지니계수 추정을 통해 해당지역 소득격차 현황을 분석하고 소득원천별 불평등 기여도 및 한계효과 분석을 시도
- 또한 이렇게 산출된 지니계수 변화에 정부 및 지방재정지출, 사회복지분야 지출, 총 세수(지방소득세수) 변화 등 재정정책과 경제성장(GDP, GRDP) 변화를 통한 경제정책의 영향을 분석함으로써 국가 및 지방재정의 소득분배 효과를 분석하고 정책의 실효성 검증은 목표

#### ○ 연구의 범위 및 방법

- 선행연구, 정부 및 지방재정지출 현황분석을 기본으로 일차적으로 지니계수를 산출하고 SVAR분석과 패널 ARDL분석을 수행, 활용된 데이터는 각 지역별로 추정된 지니계수와 (지방)정부 지출, 사회복지분야 지출, (지방소득) 세수, GDP(GRDP) 5개 변수
- 모든 분석은 전국 데이터와 기초자치단체 데이터로 구분지어 진행하며 전국 데이터는

- 시계열 데이터, 기초 자치단체 데이터는 각 데이터 추출 후 패널데이터를 구축해 분석
- 지니계수의 산출은 한국노동패널(KLPS) 9차~22차년도(2006년~2019년) 전국소득자료 및 수원시, 성남시, 고양시, 화성시, 용인시 소득자료를 활용, 소득격차 요인 분석을 위해 각 소득원천별 불평등 기여도 분석과 한계효과 분석을 수행
  - 전국 데이터의 경우 SVAR 분석을 통해 상관계수분석, 충격반응분석, 예측오차분산분해 분석을 진행, 기초자치단체 데이터의 경우 패널 ARDL 분석을 통해 기초자치단체 패널 데이터의 장·단기영향을 분석하고 각 지자체별 단기 횡단면 분석을 통해 지역별 특징을 확인

## ■ 분석 데이터

### ○ 전국 데이터

- 2006년부터 2019년까지 지니계수 추정치와 중앙정부 총 지출(재정지출), 사회복지분야 지출, 총 세수, GDP의 연간 데이터를 활용, 물가변동을 반영하기 위해 지니계수를 제외한 각 변수는 소비자물가지수(CPI, 2015=100)로 실질화
- 지니계수 추정은 한국노동패널 9차~22차 년도(2006년~2019년) 데이터 활용, 가구소득은 근로소득과 배당금 및 이자로 구성된 금융소득, 부동산소득, 사적·공적이전소득을 모두 합산한 총 시장소득을 기준, 총 소득은 세후 가처분 소득 기준이며 가구원수에 따른 균등화 가구소득으로 환산해 분석, 총 세수데이터는 일반회계 결산 세입데이터
- 데이터별 단위근 검정결과 모든 변수에서 단위근이 확인되어 로그차분한 증가분 데이터 이용

### ○ 수원시 및 유사규모 자치단체 데이터

- 지니계수 추정을 위한 데이터는 국내 데이터와 마찬가지로 한국노동패널 9차~22차년도(2006년~2019년) 데이터를 활용
- 대상지역은 수원시를 포함해 수원시와 유사한 규모 지방자치단체인 성남시, 용인시, 화성시, 고양시 총 5개 지역으로 각 지역 가구소득 데이터를 추출해 분석
- 가구소득 기준은 근로소득과 배당금 및 이자로 구성된 금융소득, 부동산소득, 사적·공적이전소득을 모두 합산한 총 시장소득을 기준으로 하였으며 가구원수에 따른 균등화 가구소득으로 환산하여 분석에 활용
- 지역별 지니계수(GINI\_COEF) 추정자료 외에 각 지자체별 세입결산액 총계 기준 일반

회계 지방세 수입(LOCALTAX\_REV), 일반회계 세출결산액(G\_EXPEN), 사회복지분야 세출 결산액(G\_SOCIAL), GRDP 데이터 활용, 통계수집방법에 변화가 있기 전 2006년과 2007년 사회복지분야 지출규모는 사회개발비 항목을 적용해 추정

- 각각의 데이터는 2006년부터 2019년까지 연간데이터를 활용하였으며 GRDP의 경우 발표지연으로 2018년까지 데이터를 이용
- 지역별 물가 데이터 확보의 어려움으로 지방자치단체 데이터는 명목데이터를 활용
- 화성시 데이터의 경우 지니계수 수치가 비현실적인 값이 확인됨에 따라 현황분석에는 사용하지 않으나 실증분석시 제외해 4개 지역 데이터만을 기준으로 분석
- 상수항과 추세를 포함하지 않는 ADF-Fisher (Augmented Dickey-Fuller Fisher) 테스트 결과 모든 변수에서 단위근이 확인되어 각 변수들을 로그차분 후 활용

## ■ 연구 모형

○ 패널 시차분포 모형(패널 ARDL; Auto Regressive Distributed Lag)

- 변수간 상관관계의 장·단기의 영향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이 특징으로 기본 OLS모형의 설명변수에 종속변수와 설명변수의 이전기(t-1) 변수를 포함해 추정
- 기본 패널 OLS모형에 1차 시차를 부가한 ARDL(1,1,1,1,1) 추정을 수행
- 본 연구에 이용된 패널 ARDL 모형

$$\Delta Y_{it} = \alpha + \underbrace{\sum_{i,j=1}^{k,n} \beta_1 \Delta Y_{it-j}}_{\text{[단기]}} + \underbrace{\sum_{i,j=1}^{k,n} \beta_2 \Delta X_{it-j}}_{\text{[장기]}} + \phi_1 Y_{t-1} + \phi_2 X_{t-1} + u_{it} \quad \dots(1)$$

$Y_{it}$  = 지역별 지니계수 변화

$X_{it}$  = 지방재정지출 변화, 사회복지분야지출 변화, 지방소득세율변화, GRDP 성장

$i$  = 4개 유사규모 자치단체(수원시, 성남시, 용인시, 고양시)

$\beta_{1,2}$  = 단기동태영향,  $\phi_{1,2}$  = 장기동태영향

$u_{it}$  = 오차항

- 사용 중인 기본 변수가 이미 차분이 이루어져 있어 본 모형의 레벨변수 자체가 차분변수로 단기 동태성 부분은 증가율의 변화, 장기 동태성 부분은 각 변수의 이전기(t-1) 증가율이 변수로 반영되는 차분 ARDL 형태

○ SVAR(Structural VAR)모형

- 전국 데이터 분석에 이용한 SVAR모형은 다음과 같은 일반화된 형태를 적용

$$AX_t = BX_{t-1} + u_{it} \tag{2}$$

$X_{it}$  = 각 지자체별 지니계수 변화, 지방재정지출 변화, 사회복지분야지출 변화, 지방소득세 수 변화, GRDP 성장

- 적용 시차는 LR test(sequential modified LR test statistic), AIC 테스트 등의 결과를 반영해 1차 시차 적용
- 변수순서(order)는 Granger Causality 검증결과 및 연구의 방향성을 고려해 총 세수, 정부지출, GDP, 사회복지분야 지출, 지니계수 순 적용
- 장기 제로(0) 제약은 상방삼각 장기 제약을 부가하여 장기적으로 해당 변수의 영향이 제로(0)로 수렴하도록 설정.. 이러한 제약을 통해 한 변수의 변화(충격)가 각 변수에 단기, 중기, 장기에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누적하여 확인

$$\lim_{s \rightarrow \infty} \begin{pmatrix} \Delta \text{총 세수}_{t+s} \\ \Delta \text{정부지출}_{t+s} \\ \Delta \text{GDP}_{t+s} \\ \Delta \text{사회복지분야지출}_{t+s} \\ \Delta \text{지니계수}_{t+s} \end{pmatrix} = D\varepsilon_t = \begin{pmatrix} d_{11} & 0 & 0 & 0 & 0 \\ d_{21} & d_{22} & 0 & 0 & 0 \\ d_{31} & d_{32} & d_{33} & 0 & 0 \\ d_{41} & d_{42} & d_{43} & d_{44} & 0 \\ d_{51} & d_{52} & d_{53} & d_{54} & d_{55} \end{pmatrix} \begin{pmatrix} \varepsilon_t^g \\ \varepsilon_t^s \\ \varepsilon_t^t \\ \varepsilon_t^s \\ \varepsilon_t^{gn} \end{pmatrix}$$

■ 지니계수 추정 및 소득격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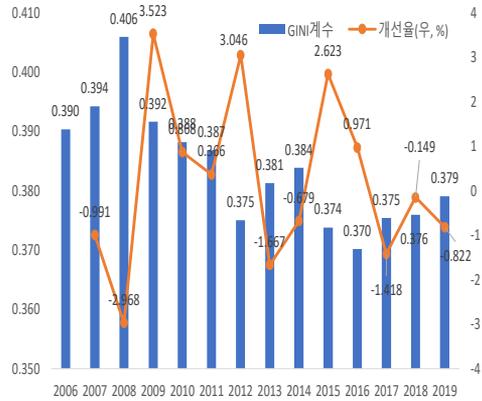
○ 한국 지니계수

- 지니계수
  - 한국 지니계수는 2019년 기준 0.379로 전년대비 0.003p 증가하며 0.822% 악화
  - 전 기간 평균 0.384 보다 개선되었으나 2017년 이후 최근 3년래 지속적인 증가 추이

〈표 5-1〉 한국 지니계수 및 개선율

구분	한국 GINI계수	개선율(우, %)
2006	0.390	
2007	0.394	-0.991
2008	0.406	-2.968
2009	0.392	3.523
2010	0.388	0.868
2011	0.387	0.366
2012	0.375	3.046
2013	0.381	-1.667
2014	0.384	-0.679
2015	0.374	2.623
2016	0.370	0.971
2017	0.375	-1.418
2018	0.376	-0.149
2019	0.379	-0.822

〈그림 5-1〉 한국 지니계수 및 개선율



■ 소득원천별 지니계수분해

- 전체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Sk)은 근로소득이 93%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이전소득(0.04%), 부동산소득(0.02%), 금융소득(0.004%) 순
- 해당소득이 소득 불평등에 기여하는 정도(share)를 중심으로 살펴보면 근로소득을 제외할 경우 부동산 소득이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이전소득 기여도가 가장 낮음, 이전소득 기여도는 음(-)의 방향성을 보이고 있어 소득불평등을 낮추는데 기여
- 소득원천별 한계 효과를 나타내는 % change는 양(+)의 부호일 경우 해당 소득의 변화가 지니계수를 높이는 부정적인 역할을, 음(-)의 부호일 경우 해당 소득의 변화가 지니계수를 낮추는 긍정적인 역할 의미, 한국 근로소득과 부동산소득의 경우 지니계수를 높여 국내 소득 불평등을 확대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는 반면 금융소득과 이전소득은 국내 소득격차를 낮추는 긍정적인 역할 확인

〈표 5-2〉 한국 소득원천별 지니계수 분해

Source	Sk	Gk	Rk	share	% Change
inc_labor	0.9296	0.3839	0.9795	0.9614	0.0318
inc_fin	0.0037	0.9515	0.3062	0.003	-0.0007
inc_est	0.023	0.9751	0.6088	0.0376	0.0146
inc_tran	0.0437	0.7842	-0.0206	-0.0019	-0.0457

Sk : 소득원천별 전체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

Gk : 해당 소득 지니

Rk : 총 소득 내 해당 소득 지니상관계수

Share : 해당 소득의 불평등 기여도 (합= 1)

% Change 각 소득이 1%증가할 때 지니계수의 % 변화, 한계효과

2019년 기준, 이하 동일하게 적용

## ○ 수원시 및 유사규모 자치단체 지니계수

### ■ 지니계수

- 수원시를 비롯한 유사규모 자치단체 지니계수는 한국지니계수보다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으며 전반적으로 불평등 정도가 개선되는 추이
- 수원시 지니계수는 2019년 기준 0.338로 2018년 0.379 대비 0.041p 하락, 전기간 평균 0.360 ‘소득격차 보통’ 수준 대비로도 0.022p 하락하는 등 전반적으로 소득 불평등 정도 개선
- 화성시를 제외한 4개 지역 중 전 기간 평균 소득격차가 가장 크게 나타나는 지역은 고양시(0.375)이며 가장 낮은 지역은 용인시(0.323), 2019년 기준으로는 성남시(0.361)가 가장 높게 확인
- 용인시의 경우 등락 폭에 급격한 변화를 보이고 있어 지역 소득 격차가 정책변화 및 대·내외 환경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지역인 것으로 판단

〈표 5-3〉 주요 자치단체 GINI 계수 추정 결과

구분	수원시	성남시	고양시	화성시	용인시
2006	0.36556	0.36030	0.38893	0.22721	0.36289
2007	0.40742	0.38649	0.36750	0.19585	0.39000
2008	0.38686	0.41301	0.38105	0.17875	0.39945
2009	0.35475	0.42016	0.35786	0.20252	0.38788
2010	0.37257	0.35793	0.40845	0.27351	0.31325
2011	0.37399	0.36528	0.40352	0.23454	0.29914
2012	0.31721	0.35897	0.37741	0.17356	0.31531
2013	0.35576	0.34836	0.37290	0.22957	0.36265
2014	0.36163	0.36644	0.38984	0.24162	0.36405
2015	0.35681	0.34819	0.37312	0.25863	0.45218
2016	0.32179	0.35097	0.37638	0.22586	0.36685
2017	0.35148	0.38163	0.36479	0.22058	0.35266
2018	0.37898	0.36429	0.35290	0.20397	0.33687
2019	0.33823	0.36076	0.34021	0.21782	0.32332
평균	0.36022	0.3702	0.37535	0.22029	0.35904

## ■ 소득원천별 지니계수 분해

### 1) 수원시

- 해당소득이 소득 불평등에 기여하는 정도(Share)를 중심으로 살펴보면 수원시의 경우 근로소득을 제외할 경우 부동산 소득이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금융소득 기여도 최소
- % change(한계효과)를 통해서도 동일한 결과가 확인되는데 수원시의 경우 근로소득과 부동산 소득이 높아질 경우 지역 소득격차가 확대되는 반면 금융소득 및 이전소득의 증가는 지역 소득격차를 낮추는 긍정적인 역할 확인

〈표 5-4〉 수원시 소득원천별 지니계수 분해

Source	Sk	Gk	Rk	share	% Change
inc_labor	0.935	0.3748	0.981	0.9645	0.0294
inc_fin	0.0043	0.9489	0.1986	0.0023	-0.0020
inc_est	0.0192	0.9686	0.4996	0.0261	0.0069
inc_tran	0.0414	0.8146	0.075	0.0071	-0.0343

### 2) 성남시

- 수원시와 유사한 소득구조로 근로소득 외에 부동산소득이 소득 불평등 기여도가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이전소득의 경우는 음(-)의 값으로 불평등 해소에 기여
- % change(한계효과)를 통해서도 근로소득과 부동산 소득은 성남시 소득 불평등을 높이고 있는 반면 금융소득과 이전소득은 낮추는 긍정적인 역할 확인

〈표 5-5〉 성남시 소득원천별 지니계수 분해

Source	Sk	Gk	Rk	share	% Change
inc_labor	0.9307	0.4306	0.9851	0.9729	0.0421
inc_fin	0.0049	0.9564	0.321	0.0037	-0.0012
inc_est	0.0238	0.9573	0.491	0.0276	0.0038
inc_tran	0.0406	0.8059	-0.0514	-0.0041	-0.0447

### 3) 고양시

- 고양시 부동산 소득의 경우 소득 불평등(share) 기여도 비중이 높게 나타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계효과는 음(-)의 방향성
- 금융소득 역시 소득불평등 기여도 자체는 부동산 소득 대비 상대적으로 낮으나 한계효과는 양(+의 방향성
- 이는 고양시 부동산 소득의 경우 소득 불평등을 낮추는 역할을 하고 있으나 2019년 현재 소득불평등 기여도가 높아 향후 불평등을 악화시킬 여지가 있음을 시사
- 금융소득은 비중은 낮으나 소득 불평등 기여도가 양(+의 규모를 보이고 있으며 한계효과 역시 양(+의 방향성을 보이고 있어 금융소득의 증가는 지역 소득격차를 확대
- 이전소득은 수원시와 성남시와 동일하게 지역 소득 불평등을 낮추는 역할

〈표 5-6〉 고양시 소득원천별 지니계수 분해

Source	Sk	Gk	Rk	share	% Change
inc_labor	0.937	0.3666	0.9721	0.9797	0.0427
inc_fin	0.0035	0.955	0.3746	0.0037	0.0002
inc_est	0.018	0.963	0.331	0.0168	-0.0012
inc_tran	0.0415	0.7888	-0.0021	-0.0002	-0.0417

### 4) 용인시

- 용인시는 4개시 대비 구분되는 결과, 용인시의 경우 근로소득만이 지역 소득격차를 확대시키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며 금융소득 및 부동산소득, 이전소득 모두 지니계수를 낮춰 지역 소득격차 완화에 긍정적

〈표 5-7〉 용인시 소득원천별 지니계수 분해

Source	Sk	Gk	Rk	share	% Change
inc_labor	0.9857	0.3146	0.9972	1.0248	0.039
inc_fin	0.0001	0.9909	-0.0836	0	-0.0001
inc_est	0.0021	0.9899	-0.3724	-0.0026	-0.0047
inc_tran	0.0121	0.9065	-0.6105	-0.0222	-0.0343

## ■ 실증분석 결과1(전국 데이터, SVAR분석 결과)

### ○ 상관계수 분석

- 국내 재정지출 및 사회복지분야 지출의 확대는 장기적으로 소득격차 완화에 어떠한 영향도 없음을 확인
- 반면 세수 증대는 지니계수를 높여 소득격차를 확대시키는 부정적 역할
- 이러한 결과는 국내 재정지출의 정책 방향성이 소득격차 완화에 적절히 전달되지 못하고 있음을 시사
- 국내 변수의 경우 국내총생산(GDP) 확대만이 소득격차를 완화시키는 긍정적 역할에 기여

〈표 6-1〉 전국데이터 SVAR 상관계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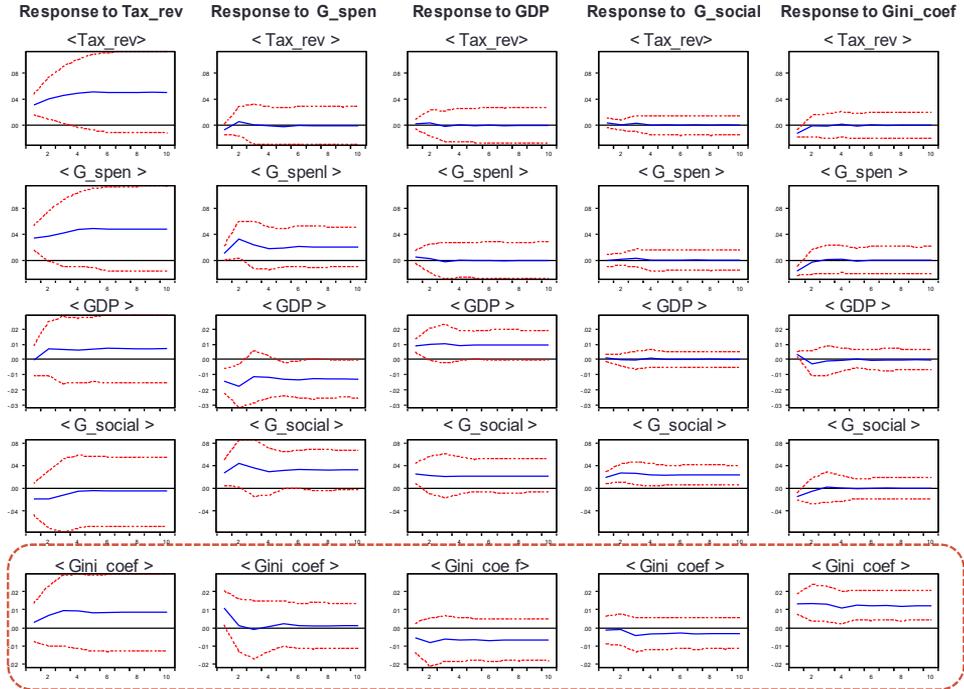
Type of shocks		Coefficient	Std. Error	z-Statistic	Prob.
Tax_rev (총세수)	To Tax_rev	0.050005	0.010207	4.898957	0.0000
	To G_spen	0.048497	0.011535	4.204270	0.0000
	To GDP	0.006865	0.004821	1.423912	0.1545
	To G_social	-0.005193	0.013363	-0.388619	0.6976
	To Gini_coef	0.008358	0.004489	1.861697	0.0626
G_spen (재정지출)	To G_spen	0.020511	0.004187	4.898978	0.0000
	To GDP	-0.012854	0.003794	-3.387675	0.0007
	To G_social	0.032530	0.011548	2.816960	0.0048
	To Gini_coef	0.001165	0.004146	0.281091	0.7786
GDP	To GDP	0.009495	0.001938	4.898979	0.0000
	To G_sicial	0.022456	0.008262	2.718124	0.0066
	To Gini_coef	-0.006680	0.003908	-1.709283	0.0874
G_social (사회복지분야 지출)	To G_social	0.023810	0.004860	4.898979	0.0000
	To Gini_coef	-0.003096	0.003607	-0.858157	0.3908
Gini_coef (지니계수)	To Gini_coef	0.012303	0.002511	4.898979	0.0000

### ○ 충격반응 분석

- 두 번째 칼럼의 총 지출 확대의 경우 전 기간 유의성을 보이며 GDP를 낮추고 있으며 사회복지분야 지출을 확대, 지니계수에 대한 영향은 초기 지니계수를 높이고 있으나 다음 기부터 감소하며 점차 그 영향이 소멸
- 사회복지분야 지출 확대의 경우 장기적으로 지니계수에만 영향이 확인되는데 단기에는 크게 영향을 미치지 못하나 중기에 하락하며 소득격차를 완화
- 총 지출(재정지출)이 충격 초기 지니계수를 높이는 영향을 나타낸데 반해 사회복지분야

지출은 중, 장기로 갈수록 지니계수를 낮추고 있어 GDP 이외에 사회복지분야 지출 분야에서 소득격차 완화를 확대시킬 수 있는 여지가 있음을 시사

〈그림 6-1〉 전국 데이터 누적 충격반응함수



○ 예측오차분산분해 분석(FEVD: Forecast Error Variance Decomposition)

- 전국 지니계수의 경우 단기적(1기)으로 지니계수 자체의 영향이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치고 있으나 2기(2년) 이후부터는 재정지출 변화의 영향을 가장 크게 받는 것으로 확인
- 흥미로운 점은 일반적으로 자체 변화가 그 변수의 변화에 가장 큰 요인이 되는데 반해 한국 지니계수는 2기부터 자체 변화보다도 재정지출의 변화가 지니계수 변화의 더 큰 요인으로 작용
- 상관계수 및 충격반응분석 결과 국내 재정지출은 소득격차 완화에 아무런 역할을 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나 향후 지니계수의 변화에는 가장 큰 요인으로 작용할 것의 의미
- 따라서 국내 재정정책의 내용과 방향성을 장기적으로 소득격차를 해소할 수 있도록 변화시킬 필요가 있으며 그러한 변화가 이루어질 경우 소득격차 해소에 유의성 있는 현격한 변화를 가져올 것 전망

■ 실증분석 결과2(지방자치단체 데이터, ARDL 분석결과)

○ 단기영향

- 단기적으로 지역 소득격차 변화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는 4가지 변수 중 지방재정지출과 사회복지 분야 지출로 확인되며 두 변수 모두 단기적으로 지역 소득격차를 완화
- 지방세수의 증가는 지역소득 격차를 확대시키고 GRDP 증가는 지역소득 격차를 줄이는 방향성을 나타내고 있으나 통계적 유의성은 없음

○ 장기영향

- 지방재정지출 및 사회복지분야 지출은 단기에는 지역 소득격차를 완화시키는 긍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으나 장기로 갈수록 지역 소득격차를 악화시키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
- 이는 재정 및 사회복지분야 지출에 포함된 사업의 성격, 방향성 등이 성장을 통한 분배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데 따른 결과 가능
- 지방재정 지출 및 사회복지분야 지출을 단기적인 격차 해소를 위한 사업에 치중하기보다 장/단기 균형을 고려한 장기적 관점에서 추진할 필요가 있으며 사업 방향성에 점진적인 전환이 필요하다는 점을 시사
- 새로운 사업의 추진 역시 장기적 관점에서 소득 불균형을 해소할 수 있는 방향을 고려하는 등 지방재정 및 사회복지분야 지출의 구성과 성격에 변화를 가져올 필요

〈표 6-2〉 지방자치단체 데이터 시차분포모형 추정 결과

Variable	Coefficient	Std. Error	t-Statistic	Prob.*
<b>Short Run Equation</b>				
D(DLNG_EXPEN)	-0.251262	0.124730	-2.014440	0.0576
D(DLNG_SOCIAL)	-0.130824	0.034692	-3.771003	0.0012
D(DLNLOCALTAX_REV)	0.355595	0.213729	1.663770	0.1117
D(DLNGRDP)	-0.154003	0.246356	-0.625125	0.5390
C	-0.037548	0.007498	-5.007516	0.0001
<b>Long Run Equation</b>				
DLNG_EXPEN	0.688798	0.227536	3.027203	0.0067
DLNG_SOCIAL	0.211587	0.060649	3.488691	0.0023
DLNLOCALTAX_REV	-0.397392	0.252753	-1.572254	0.1316
DLNGRDP	-0.091857	0.153958	-0.596637	0.5574

## ○ 단기 횡단면 상관관계수 분석

### 1) 수원시

- 4개 지역 통합 패널 결과와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단기적으로 지역 소득격차를 낮추는데 사회복지분야 지출만이 긍정적인 영향, 그 외 지방재정지출과 지방세수, GRDP 변수의 경우 오히려 지역 소득격차를 확대시키는 요인으로 작용
- 특히 수원시 GRDP가 증가할 경우 지역소득격차가 증가하고 있어 수원시의 경우 경제 성장이 고르게 이루어지지 못하고 불균형한 성장과 분배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시사
- 이러한 요인의 하나로 소득원천별 지니계수분해에서 확인된 바와 같이 지역 경제성장 과정에서 근로소득과 부동산소득의 불균형이 확대되며 전반적인 소득격차로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추정
- 수원시 지방재정 지출이 단기적으로 지역 소득 불균형을 확대시키는 반면 사회복지분야 지출이 소득 불균형을 완화시키고 있는 결과와 관련해서는 사회복지분야 지출 증 기초생활보장 등 저소득층을 위한 지원 및 이전사업의 규모가 격차를 완화시키는 수준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판단. 반면 사회복지분야 지출 이외의 재정지출은 일부 계층의 소득 증대에 더 크게 영향을 미치는 구조로 구성되어 있을 가능성을 시사
- 재정지출의 방향이 분배보다 성장과 효율성에 방향성이 있는 경우, 성장을 통한 분배에 방향성이 맞춰져 있는 경우 이러한 결과 도출
- 또한 높은 사회복지분야 지출 비중에도 불구하고 소득격차를 낮출 정도로 충분하지 못해 사회복지분야 지출 비중을 확대할 여지가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로 해석
- 지방소득세수 확대가 수원시 소득격차를 확대시키는 원인은 많은 연구에서 지적하고 있는 것처럼 소득세의 누진도가 낮은 데 따른 결과로 예상. 그러나 성명재(2015) 등이 주장하는 것처럼 누진도는 높지만 세수가 작아 세수가 충분히 지방재정지출 및 사회복지분야 지출을 통해 소득재분배에 효과를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경우로 고려 가능
- 따라서 수원시 소득격차 완화를 위해 이러한 결과와 원인을 고려한 수원시 경제 및 재정정책의 내용과 방향을 재정립할 필요

### 2) 성남시

- 성남시의 경우 수원시와 달리 지방재정지출, 사회복지분야 지출, GRDP가 증가할 경우 각각 지니계수를 낮춰 성남시 지역 소득격차를 낮추는 긍정적 영향
- 이는 성남시 재정정책 및 경제정책의 영향이 단기적으로는 지역의 소득격차를 완화시키는데 일정 규모 이상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음을 의미

- 또한 지방세수의 경우 지니계수 변화에 아무런 영향이 없어 아직 지방세를 통한 정책 활용의 범위가 클 수 있음을 시사

3) 용인시

- 용인시의 경우 규모의 차이는 있으나 성남시와 동일한 방향성, 즉 지방세수를 제외한 모든 변수들이 용인시 지역 소득격차를 낮추는데 유의미한 긍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확인

4) 고양시

- 고양시의 경우 지방세수 및 GRDP의 변화는 지역 소득격차 완화에 아무런 영향이 없는 반면 지방재정지출 및 사회복지분야 지출은 지역 소득격차를 줄이는데 긍정적인 역할

〈표 6-3〉 수원·성남·용인·고양시 단기 횡단면 상관분석

Variable	수원시		성남시		용인시		고양시	
	Coefficient	Prob. *						
D(DLNG_EXPEN)	0.115	0.0131	-0.425	0.0007	-0.305	0.0118	-0.391	0.0051
D(DLNG_SOCIAL)	-0.080	0.0000	-0.098	0.0001	-0.113	0.0001	-0.233	0.0000
D(DLNLOCALTAX_REV)	0.903	0.0000	-0.062	0.2771	0.472	0.4395	0.109	0.2815
D(DLNGRDP)	0.416	0.0013	-0.594	0.0003	-0.536	0.0086	0.098	0.1828
C	-0.046	0.0000	-0.020	0.0000	-0.030	0.0002	-0.053	0.0000

○ 예측오차분산분해 분석(FEVD: Forecast Error Variance Decomposition)

- 지방자치단체 소득격차 변화에 단기(1기)에는 사회복지분야 지출, 중·장기적으로는 지방소득세수의 영향 최대
- 패널ARDL 분석에서 확인된 각 변수와 소득격차 간 영향의 방향성을 고려할 때 단기적으로 사회복지분야 지출을 늘리는 것이 소득격차를 낮추는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 중장기적으로는 세수증대가 소득격차를 완화(또는 악화)시킬 가능성 시사, 장기영향에서는 사회복지분야 지출 및 지방재정지출이 지역 소득격차를 오히려 확대시키는 결과로 확인되었던 점을 고려할 때 중·장기적인 사회복지분야 지출 및 지방재정지출의 영향이 격차 확대로 이어질 가능성
- 따라서 사업의 내용과 방향성이 중·장기적으로 소득격차 해소에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정책적 전환 필요

## ■ 결론 및 향후과제

### ○ 결론

- 본 연구는 한국 및 수원시를 비롯한 유사자치단체의 소득격차를 확인하고 정부 및 지방 재정지출이 소득격차 해소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

### ○ 향후과제

- 연구결과를 통한 시사점이 세부적이고 적용 가능한 정책이 될 수 있도록 정부지출 및 지방재정지출 사업별 세부 내용 분석 등 후속 연구 필요
- 코로나 영향이 반영된 2020년도 및 2021년도 데이터로 확장한 후속 연구 필요

주제어: 소득격차, 지니계수, 지방재정지출, 패널ARDL, 패널 SVAR

---

## 차례

---

<b>제1장 서론</b> .....	<b>1</b>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3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	4
<b>제2장 선행연구</b> .....	<b>7</b>
제1절 주요 선행연구 .....	9
1. 지니계수와 소득재분배 .....	9
2. 중앙재정지출과 소득재분배 .....	11
3. 지방재정지출과 소득재분배 .....	13
제2절 지니계수의 이해 .....	16
1. 지니계수 .....	16
2. 지니계수 추정방법 .....	17
<b>제3장 국가 및 지방재정 현황</b> .....	<b>19</b>
제1절 국가 재정 현황 .....	21
1. 2020 회계연도 코로나 지원 및 추가경정예산 분석 .....	22
2. 2021년 예산안 및 2022년 예산안 .....	25
제2절 수원시 및 유사 규모 자치단체 지방재정 현황 .....	29
1. 총계기준 예산 현황 .....	29
2. 세입재원별 예산 추이 .....	30
3. 일반회계기준 결산 현황 .....	32
<b>제4장 데이터 및 연구 모형</b> .....	<b>35</b>
제1절 실증분석 데이터 .....	37
1. 전국 데이터 .....	37
2. 수원시 및 유사규모 자치단체 데이터 .....	39
3. 한국노동패널조사(KLIPS) .....	42
제2절 연구 모형 .....	44

1. 패널 시차분포 모형(ARDL) .....	44
2. SVAR(Structural VAR) 모형 .....	45
<b>제5장 지니계수 추정 및 소득격차 .....</b>	<b>49</b>
제1절 한국 지니계수 .....	52
1. 지니계수 .....	52
2. 소득원천별 지니계수 분해 .....	52
제2절 수원시 및 유사규모 자치단체 지니계수 .....	54
1. 지니계수 .....	54
2. 소득원천별 지니계수 분해 .....	56
<b>제6장 실증분석 결과 .....</b>	<b>59</b>
제1절 전국 데이터 .....	61
1. 상관계수 분석 .....	61
2. 충격반응 분석 .....	62
3. 예측오차분산분해 분석(FEVD) .....	64
제2절 지방자치단체 데이터 .....	65
1. 시차분포모형 추정결과 .....	65
2. 예측오차분산분해 분석(FEVD) .....	69
<b>제7장 종합 및 시사점 .....</b>	<b>71</b>
<b>참고문헌 .....</b>	<b>75</b>

---

## 표 차례

---

〈표 2-1〉 지니계수와 소득격차 .....	16
〈표 3-1〉 2020회계연도 기능별 세출 실적(일반회계) .....	22
〈표 3-2〉 2021년 예산안 총지출 .....	25
〈표 3-3〉 2021년 예산안 총수입 .....	25
〈표 3-4〉 2020-2022년 예산안 총지출·총수입 .....	26
〈표 3-5〉 2022년 예산안 12대 중점 프로젝트(250조원 수준, 중복포함) .....	28
〈표 3-6〉 최근 4년간 수원시 예산 추이 .....	30
〈표 3-7〉 유사 자치단체 자원별 세입 예산(2021년) .....	31
〈표 3-8〉 수원시 자원별 세입 예산 추이 .....	31
〈표 3-9〉 유사 자치단체 사회복지비 지출 현황(2019) .....	31
〈표 3-10〉 수원시 일반회계 세출결산 분야별 추이 .....	34
〈표 4-1〉 전국 데이터 단위근 검정 결과 .....	38
〈표 4-2〉 지방자치단체 데이터 단위근 검정 결과 .....	40
〈표 4-3〉 Granger Causality 검증 결과 .....	46
〈표 5-1〉 한국 지니계수 및 개선율 .....	52
〈표 5-2〉 한국 소득원천별 지니계수 분해 .....	53
〈표 5-3〉 주요 자치단체 GINI 계수 추정 결과 .....	54
〈표 5-4〉 수원시 소득원천별 지니계수 분해 .....	57
〈표 5-5〉 성남시 소득원천별 지니계수 분해 .....	57
〈표 5-6〉 고양시 소득원천별 지니계수 분해 .....	58
〈표 5-7〉 용인시 소득원천별 지니계수 분해 .....	58
〈표 6-1〉 전국 데이터 SVAR 상관계수 .....	62
〈표 6-2〉 지방자치단체 데이터 시차분포모형 추정 결과 .....	66
〈표 6-3〉 수원·성남·용인·고양시 단기 횡단면 상관분석 .....	68

〈표 7-1〉 4개 자치단체 단기 개별 영향 요약 ..... 76

---

## 그림 차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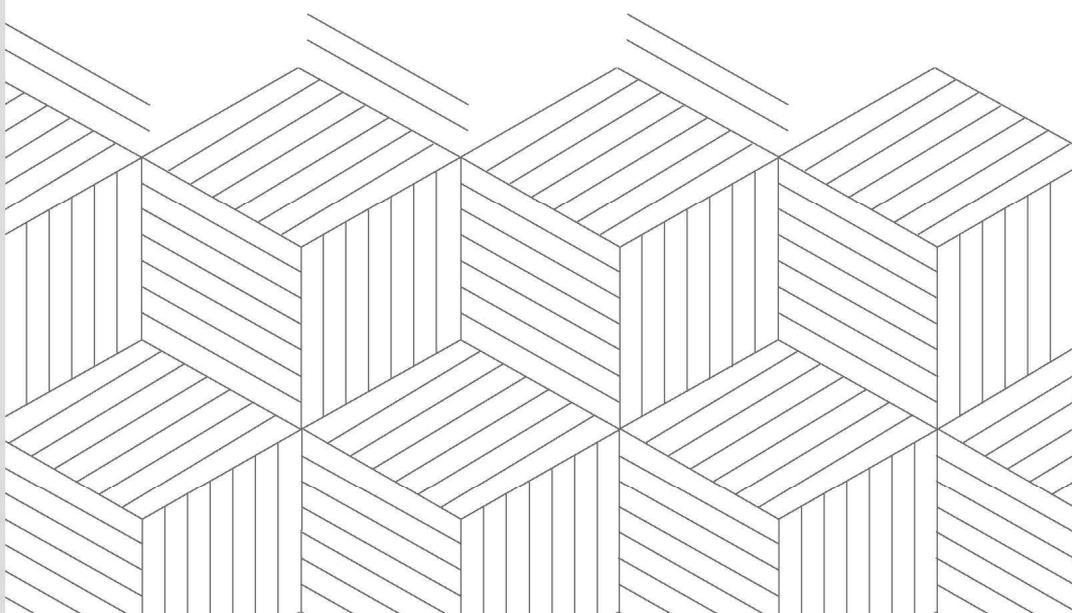
---

〈그림 1-1〉 연구 방법 및 내용 .....	5
〈그림 2-1〉 우리나라 연도별 지니계수 .....	9
〈그림 2-2〉 연령별 빈곤율_노인빈곤율 .....	10
〈그림 2-3〉 로렌츠 곡선을 이용한 지니계수 도출 .....	17
〈그림 3-1〉 최근 5년간 주요 기능별(5개 기능) 세출 결산 추이 .....	21
〈그림 3-2〉 수원시 및 유사규모 자치단체 예산 추이 .....	29
〈그림 3-3〉 수원시 재원별 세입 예산 추이 .....	32
〈그림 3-4〉 수원시 재정지출 추이 .....	33
〈그림 3-5〉 성남시 재정지출 추이 .....	33
〈그림 3-6〉 고양시 재정지출 추이 .....	33
〈그림 3-7〉 용인시 재정지출 추이 .....	33
〈그림 3-8〉 화성시 재정지출 추이 .....	33
〈그림 4-1〉 전국 레벨(좌) 및 차분(우) 데이터 시계열 추이 .....	39
〈그림 4-2〉 지방자치단체 레벨(좌) 및 차분(우) 데이터 시계열 추이 .....	41
〈그림 5-1〉 한국 지니계수 및 개선율 .....	52
〈그림 5-2〉 주요 자치단체 GINI 계수 추이 .....	55
〈그림 5-3〉 주요 자치단체 GINI 계수 추이 및 개선율 .....	56
〈그림 6-1〉 전국 데이터 누적 충격반응함수 .....	63
〈그림 6-2〉 전국 지니계수 분산분해(FEVD) .....	64
〈그림 6-3〉 지방자치단체 지니계수 분산분해 .....	69



#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 제1장 서론

##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우리나라는 저출산과 고령화 등 사회적 문제와 더불어 노동시장의 분절화가 심해지면서 경제 양극화와 소득분배 악화 현상을 극복하기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 왔다. 특히 최근 코로나19 등 경제 불확실성으로 소득재분배 정책에 대한 중요성이 재차 강조되고 있다.

우리 사회의 지속적인 경제, 사회적 격차 확대는 사회통합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지적되고 있으며 다양한 파급효과를 내포하고 있다. 그 중 소득분배 악화로 인해 발생하는 빈곤과 양극화 심화는 경제성장 및 경제적 효율성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 예를 들면 실업자 증가와 비정규직 문제, 최저임금 대폭 인상 등 고용을 저해시키는 요인이 발생하게 되면 인건비 부담 가중으로 인해 기업 생산이 위축되고 투자 감소와 내수경제가 위축되게 된다. 이는 또 다시 기업의 구조조정으로 이어져 일자리가 줄어들게 되고 실업인구의 증가는 가구의 생계유지와 자녀교육 등과 같은 기본적인 지출감소를 유발하면서 경제성장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 따라서 소득재분배 정책을 통한 격차 해소의 문제는 경제 및 사회 전반에 걸쳐 중요한 영향을 미치게 되며 이러한 정책의 적절성을 분석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다양한 분야에서 다루어질 수 있는 격차해소의 문제를 소득관점에서 살펴보고 격차해소를 위한 정부 정책의 실효성을 분석하고자 한다. 이미 많은 연구들이 소득격차 문제를 다루고 있으나 기초자치단체 수준에서 소득 현황을 분석하고 정책 효율성을 분석한 연구는 거의 찾아보기 힘든 상황이다. 따라서 일차적으로 지니계수 추정을 통해 국내 소득격차 및 수원시를 비롯한 기초자치단체의 소득격차 현황을 분석하고 소득원천별 불평등 기여도 및 한계효과를 분석한다. 또한 이렇게 산출된 지니계수 변화에 정부 및 지방재정지출, 사회복지분야 지출, 총 세수(지방소득세수) 변화 등 재정정책과 경제성장(GDP, GRDP) 변화를 통한 정부정책의 영향을 분석한다. 이를 통해 국가 및 지방재정의 소득분배 효과를 분석하고 소득격차 해소에 대한 영향력을 분석함으로써 정책의 실효성을 검증해 보고자 한다.

##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연구방법은 선행연구, 정부 및 지방재정지출 현황분석을 기본으로 일차적으로 지니계수를 산출하고 SVAR분석과 패널 ARDL분석을 수행한다.

모든 분석은 전국 데이터와 기초자치단체 데이터로 구분지어 진행한다. 전국 데이터는 시계열 자료 자체를 활용하였으며 기초 자치단체 데이터는 각 데이터 추출 후 패널데이터를 구축해 분석한다.

지니계수의 산출은 한국노동패널(KLPS) 9차~22차년도(2006년~2019년) 전국소득자료 및 수원시, 성남시, 고양시, 화성시, 용인시 소득자료가 활용되었다. 소득격차 요인 분석을 위해 각 소득원천별 불평등 기여도 분석과 한계효과 분석을 수행하였다.

정부 및 지방재정지출이 소득격차 해소에 미치는 영향 분석을 위해 전국 데이터의 경우 SVAR 분석을, 기초자치단체 데이터의 경우 패널 ARDL 분석을 수행한다. 기초자치단체 데이터 역시 패널 SVAR 분석을 수행하였으나 결과의 일관성 있는 분석을 위해 결과 보고는 패널 ARDL 분석 결과로 제한하였다. 다만 SVAR분석 과정에서 도출된 구조적 제약이 부가된 지니계수의 예측오차분산분해(FEVD) 결과는 분석에 활용한다. 활용된 데이터는 각 지역 별로 추정된 지니계수와 (지방)정부 지출, 사회복지분야 지출, (지방소득) 세수, GDP(GRDP) 5개 변수로 구성된다.

SVAR분석에서는 한국변수의 상관계수분석과, 충격반응분석, 예측오차분산분해 분석을 진행하여 상호 변수간 장·단기 영향을 분석한다. 패널 시차분포모형(ARDL)을 통해서는 기초자치단체 패널 데이터의 장·단기영향을 분석하고 각 지자체별 단기 횡단면 분석을 통해 지역별 특징을 살펴본다.

연구의 구성은 2장에서는 선행연구를 분석하고 3장 국가 및 지방재정 현황, 4장 데이터 및 연구모형, 5장 지니계수 추정 및 소득격차, 6장 실증분석 결과와 7장 종합 및 시사점으로 구성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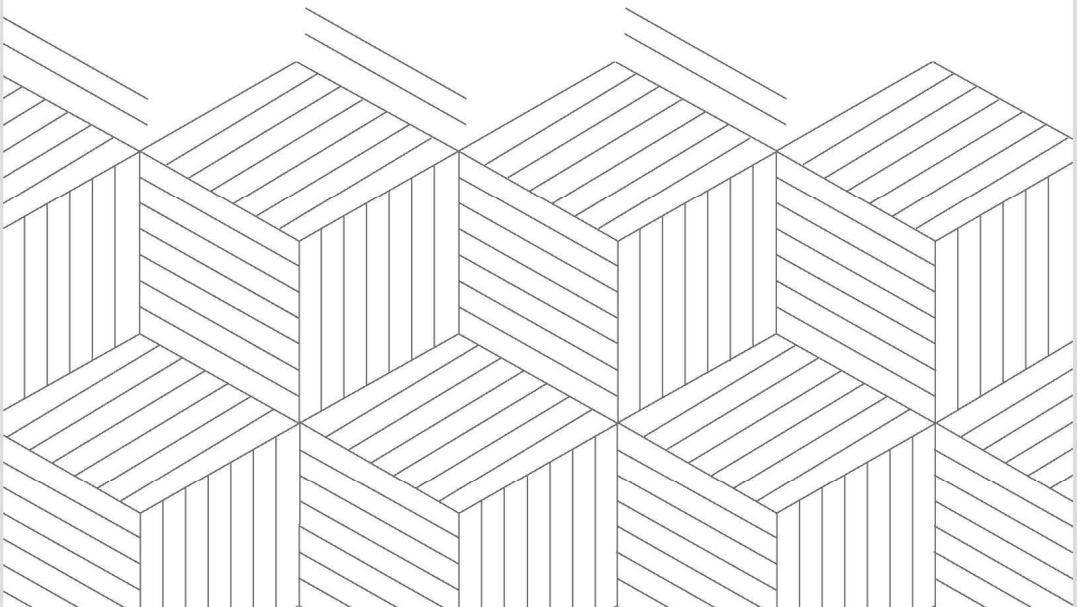
〈그림 1-1〉 연구 방법 및 내용

연구 단계	연구방법	연구내용
1단계	선행연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니계수를 활용한 소득격차 관련 선행연구 분석</li> <li>■ 국내 재정지출과 소득격차 관련 선행연구 분석</li> <li>■ 지방재정지출과 소득격차 관련 선행연구 분석</li> </ul>
2단계	지니계수 추정 및 소득격차 분석 (한국노동패널 소득데이터 활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내 지니계수 추정</li> <li>■ 경기도 유사규모 기초자치단체 지니계수 추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수원시, 성남시, 고양시, 화성시, 용인시</li> </ul> </li> <li>■ 소득원천별 불평등 기여도, 한계효과 분석</li> </ul>
3단계	전국 및 수원시, 유사규모 자치단체 재정지출 현황 분석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국 데이터 재정 현황 분석</li> <li>■ 수원시, 경기도 내 유사규모 자치단체 재정 현황 분석</li> </ul>
4단계	SVAR 실증분석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국데이터 실증분석</li> <li>■ 상관계수분석, 충격반응분석, 분산분해분석(예측오차분산분해) 수행</li> <li>■ 변수: 지니계수, 재정지출, 사회복지분야지출, 총 세수, GDP</li> </ul>
5단계	패널 ARDL 실증분석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방자치단체 데이터 실증분석</li> <li>■ 장기, 단기 상관계수분석, 단기 횡단면 분석</li> <li>■ 변수: 지니계수, 지방재정지출, 사회복지분야지출, 지방소득세수, GRDP</li> </ul>
6단계	실증분석을 통한 정책시사점 도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국</li> <li>■ 수원시 및 기초자치단체</li> </ul>



# 제2장 선행연구

제1절 주요 선행연구  
제2절 지니계수의 이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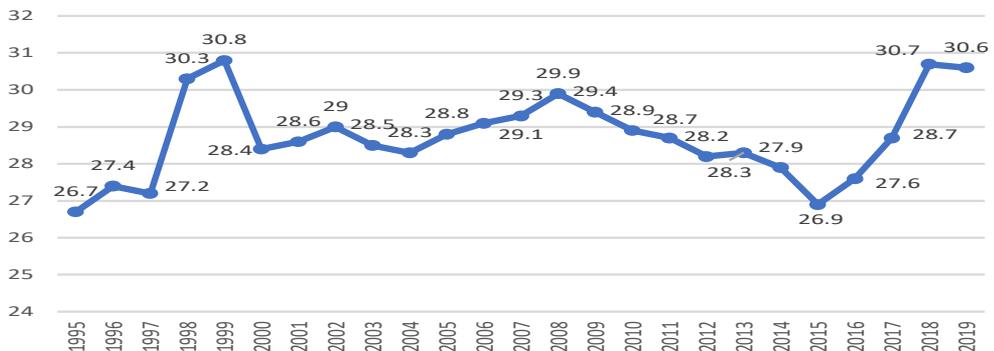
## 제2장 선행연구

### 제1절 주요 선행연구

#### 1. 지니계수와 소득재분배

소득분배 수준을 측정하는 대표적인 지니계수<sup>1)</sup>를 통해 우리나라의 연도별 소득불평등의 특성을 살펴보면 몇 가지 특징을 발견할 수 있다. 우리나라는 1980년대까지 급격하게 빠른 경제성장을 달성하며 꾸준히 성장해왔다. 그러나 1998년 외환위기 당시 대량 실업사태가 발생하면서 노동수요나 근로소득 감소로 인해 지니계수가 급격하게 높아져 1999년 기준 0.308까지 상승하였다. 이후 2008년 금융위기 이전까지 28-29 사이에 머물다가 금융위기로 인해 0.299까지 높아지고 다시 진정되는 추세를 보였다. 2015년에는 0.2693으로 IMF 직전 수준까지 떨어졌다가 2018년 최저임금 인상(전년 대비 16.4% 인상)으로 인해 다시 0.30선을 넘어 0.3069까지 상승하였다. 국내 2019년 0.306수준으로 9%가량 떨어지면서 소폭 개선되었지만 여전히 30선에 머물고 있다.

〈그림 2-1〉 우리나라 연도별 지니계수



주) 2인 이상 도시거주 가구의 시장소득 2분기 지니계수 기준

자료)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자체계산 결과 재인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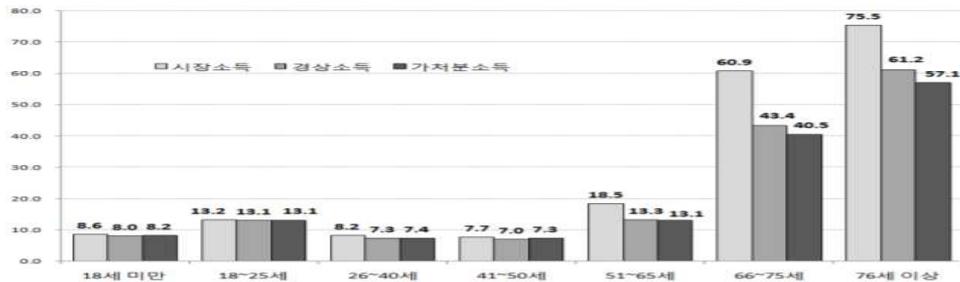
1) 지니계수는 인구분포와 소득분포의 관계를 설명하는 지표로 0과 1 사이 수치로 나타난다. 0에 근접할수록 평등한 분배이고 1에 가까울수록 불평등함을 의미한다. 즉 지니계수가 높을수록 불평등 정도가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소득불평등 변화의 원인으로 몇 가지를 지목할 수 있다. 먼저 개인의 능력, 교육수준, 상속재산의 유무와 같은 개인적인 요인과 고용형태별, 성별 등으로 분리된 노동시장의 계층적 구조이다. 예를 들면, 노동집약적 산업에서 생산기술의 변화를 동반한 기술집약적 경제구조로의 전환이 본격화되면서 지식에 대한 보상이 증가하고 이에 지식근로자와 비지식근로자 사이의 소득격차가 확대되기 시작하였다. 다수 학자들은 소득불평등의 원인을 ‘교육과 기술 간의 경주(race between education and technology)’를 통해 설명하고 있으며, 빠른 속도로 발전하는 기술진보에 대응할 수 있는 교육과 훈련 투자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Goldin and Katz, 2008). 성별·연령별·학력별·거주지별 등으로 세분화하여 소득불평등의 원인을 분석한 박상우 외(2013)는 남성에 비해 여성가구주의 소득불평등이 더욱 심각하고, 학력별로는 중졸이하와 전문대졸 이상의 소득분포가 더욱 불평등화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별의 경우 60세 이상과 40-49세 가구주의 소득불평등도가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거주지별로는 특별시·광역시 가구가 심화되어 있다는 결과를 보였다. 이강국(2014) 연구에서는 피케티의 ‘21세기 자본’에 관한 이론에 기초하여 자본소득 분배율이 높을수록 불평등도가 악화된다는 결론을 도출하였다. 노동소득과 달리 자본소득은 상대적으로 부유한 소수인원에게 집중되어 있고, 축적된 자본을 상속받는 자녀 세대는 자신의 능력이나 노력과는 상관없이 대를 이어 부유함을 이어갈 수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하였다.

두 번째는 OECD 국가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노인빈곤율 및 인구고령화와 핵가족화에 따른 가구구조의 변화이다. 인구고령화가 소득불평등의 주요 원인이라고 주장하는 선행연구들은 비교적 많은 편이다. 고령자들은 대다수가 젊은 연령층보다 체력 및 정신적으로 생산성이 낮기 때문에 인구고령화가 진전될수록 노인 가구를 중심으로 빈곤율과 저소득층이 두터워지고, 더 나아가 경제활동연령인구로 구성된 가구와의 상대소득격차가 점차 크게 나타나게 된다(김경아, 2008; 전병목 외, 2017).

〈그림 2-2〉 연령별 빈곤율\_노인빈곤율

(단위: %)



자료)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원자료, 이현주 외. “2018년 빈곤통계연보” 재인용

이창근(2013), 홍석철 외(2013)는 가구소득 불평등의 증가는 인구구조의 변화로 설명될 수 있다고 하였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연령이 소득불평등에 미치는 한계효과가 상승함에 따라 인구고령화에 의한 소득불균등 역시 더욱 악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구고령화의 낮은 취업비중이 소득불평등을 악화시키는 주요 원인으로 시간경과와 취업여부에 의한 소득격차는 더욱 벌어지게 된다고 주장하였다. 통계청의 추계가구 전망치를 기반으로 2045년까지 지니계수의 변화를 추정한 박종서 외(2017) 연구에서도 인구고령화가 진전될수록 소득불균등도가 심화된다는 결론을 뒷받침하였다.

## 2. 중앙재정지출과 소득재분배

정부의 소득재분배 수단은 재정을 집행하는 방식과 여러 유형에 따라 구분이 가능하며, 그 유형별로 사회경제적 효과를 유발한다. 우선 재정체계를 기준으로 재정사업을 통한 직접적인 재정지출과 조세제도를 통한 간접지출로 구분된다. 재정지출은 사회보장 관점에서 보조금 지원,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복지서비스 유형으로 분류되고, 조세를 통한 재분배 정책에는 누진적 조세정책이 존재한다. 누진적 조세를 통한 재분배 효과는 고소득층과 저소득층 사이에 존재하는 처분가능소득의 격차를 이전(transfer)을 통해 줄이는 효과로 나타난다. 이 두 가지 정책수단들의 활용 정도로 인해 한 국가의 전반적 소득재분배 정도가 결정되게 된다. 정부지출은 자원배분의 효율성 증대, 소득분배 공평성 증대, 경제의 안정화 등 정부의 3대 기능이 정당화될 수 있고 수혜집단이 명시적인 반면, 세액공제 등 조세지출은 특정집단의 경제활동 독려를 위한 조세유인의 기능이 있고 수혜집단은 확인이 쉽지 않아 묵시적이다. 이처럼 조세지출의 사회후생분석이 쉽지 않기 때문에 우리나라 조세정책의 소득재분배 기능은 선진국에 비해 아직 높게 평가되지 않고, 조세정책의 소득재분배 효과에 대한 체계적·종합적 분석 역시 부족하다. 예를 들어, 임병인(2010) 연구에서 간접적인 조세정책으로 보험료 소득 공제의 소득재분배 효과를 분석한 결과에 의하면 보험료 공제제도가 상대적으로 고소득층에게 유리하고 세후소득의 불평등을 악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한다고 주장한다. 김미경(2013)은 총조세수준, 노동조세수준, 자본조세의 가시성, 조세구조의 역진성을 사용하여 우리나라와 OECD 국가들의 조세체제를 비교분석하였다. 그 결과 조세의 역진성은 일정하지 않고 시간에 민감한 동태적인 특성을 나타냈다.

한편 재정지출 정책과 관련한 국내문헌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재정정책이 경제성장과 소득분배에 미치는 영향을 중심으로 분석한 연구는 김홍균 외(2012), 한종석 외(2018), 김성순(2014) 등이 있다. 김홍균 외(2012)는 구조적 벡터수정(SVEC)모형을 이용해 재정지출과 감세 중 어느 것이 더 효율적인 경기부양정책 수단인지를 비교분석하였다. 국민소득,

재정수입, 재정지출 등을 포함한 3변수 모형과 물가와 이자율 변수를 추가해서 분석한 5변수 모형에서 모두 재정지출 충격만이 국민소득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감세정책에 비해 재정지출 정책이 보다 효과적인 경기부양정책 수단이라고 주장하였다. 한종석 외(2018)는 재정정책을 크게 (1) 소득 1분위에 속하는 이전지출 대상자에 대한 지출 규모 증가, (2) 소득 1분위에서 소득 1.5분위로 이전지출 대상자를 증가시키는 정책으로 분류하여 소득재분배와 거시경제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하였다. 이전지출 대상자에 대한 지출 규모를 증가시키거나 대상을 확대하는 정책을 도입하는 경우 모두 가처분소득 GINI 계수를 크게 변화시키지 않지만, 시장소득 GINI 계수는 증가하면서 소득분배를 개선시켰다. 그러나 두 정책 모두 총자본과 총노동을 감소시켜 총생산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이전지출 규모를 증가시키면 정책 수혜대상자의 자산축적을 감소시키고, 이전지출 수혜대상을 확대하면 새롭게 지원받는 대상자들의 자산축적까지 저해시키면서 총자본을 감소시키고 이는 총생산의 감소로 이어진다.

1982년-2010년 연간 자료를 이용하여 벡터오차수정(VEC)모형으로 조세수입 증대와 재정정책이 경제성장과 소득분배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김성순(2014)은 재정지출과 조세수입의 증대는 소득분배 개선에 기여한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재정지출 확대만이 경제성장을 높이고 소득불평등을 비교적 크게 개선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므로 경제성장 촉진과 소득분배 개선 등 두 가지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재정지출 확대 정책이 필요하다고 언급하였다.

한편 패널 및 시계열 실증분석을 통해 조세 및 재정지출이 소득재분배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전규식 외(2016)는 OECD 주요 국가에 비해 우리나라의 재정정책은 소극적이며 소득분배효과를 개선시키지 못한다고 제시하였다. 1980-2012년 기간의 OECD 패널 자료를 사용하여 분석한 결과에서는 재정지출이 소득재분배에 있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개선효과를 미치는 반면, 조세의 경우 오히려 개선효과를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우리나라를 대상으로 시계열 분석을 수행한 결과, 조세의 소득재분배 효과에 있어 부정적인 효과가 나타났지만 재정지출의 효과는 유의하지 않은 결과를 보였다. 이에 대한 원인으로 재분배 효과가 큰 사회복지지출 수준이 주요 국가에 비해 우리나라는 상대적으로 부족하기 때문에 재정의 소득재분배 기능이 취약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하였다.

정부지출을 부문별로 구분하여 소득재분배 및 경제전반에 미치는 실질적인 효과를 분석한 연구도 다양하게 존재한다. 김승래 외(2009)는 시계열 실증분석 및 일반균형 모의실험을 통해 세입과 각 지출 항목들 중에서 어느 것이 경기 안정화나 소득재분배에 효과적인 정책수단 인지를 모색하였다. 먼저, 세입 변화보다 재정지출 변화가 소득에 미치는 영향이 훨씬 긍정적

으로 나타났다. 정부지출을 재화 및 용역에 대한 경상지출, 경상이전지출, 자본지출로 구분하여 소득효과를 분석한 결과에서는 재화 및 용역에 대한 경상지출, 자본지출, 그리고 이전지출의 순으로 나타났지만, 가계후생에 미치는 영향으로는 경상지출은 유효소비를 높여주는 반면 자본지출은 유효소비를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재정재출의 소득계층별 귀착을 파악하기 위해 조경엽(2008)은 재정지출을 순수공공재와 비순수공공재(이전소득, SOC, 주택건설, 교육, R&D)로 세분화하여 경제에 미치는 직·간접적인 효과를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주택건설 투자의 증가가 소득분배를 가장 크게 개선시키고, 그 다음으로는 SOC 투자와 이전소득 순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GDP 감소를 최소화하면서 소득분배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사회보장 및 복지지출(이전소득) 확대보다는 SOC 투자를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고제이 외(2014) 연구에서는 사회보장지출의 유형을 현금급여와 현물급여로 구분하여 이론적 분석과 정책 모의실험을 통해 정책 효율성을 비교분석하였다. 분석결과에서 현금급여가 상대적으로 높은 사회후생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 재정 효율성 측면에서도 더욱 효과적으로 나타났다. 다시 말해, 60-77% 정도의 현금급여 수준으로 현물급여가 제공하는 사회후생을 달성할 수 있음을 보이며 보다 적은 금액으로 동일한 사회후생을 충족시킬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조경엽 외(2013)는 무상급식, 무상보육, 반값등록금 등 무상복지 정책을 상정하여 선별적 복지와의 소득재분배 효과를 비교하였다. 실증분석 결과, 전 가구를 대상으로 무상복지 정책을 시행할 경우 정책시행 전보다 지니계수가 0.0076-0.0084 포인트 하락하지만 하위 70%로 지원대상을 한정할 경우에는 지니계수가 0.0110-0.00113 포인트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정책의 비용-편익 측면을 고려하여 전면적 무상복지 정책보다는 선별적 무상복지를 통해 재정지출의 효율성을 높여야한다고 설명하였다.

### 3. 지방재정지출과 소득재분배

지방재정지출과 지역경제 간 인과관계를 사회개발비적 성격을 갖는 지출과 경제개발비적 성격을 갖는 지출로 구분하여 분석한 연구는 다수 있다. 먼저, 사회개발비적 성격을 갖는 지출에는 크게 교육·문화와 사회복지 부문으로 분류할 수 있다. 교육·문화 부문의 재정지출은 인적자본 형성 및 개발과 사회적 환경을 개선시키는 지출로 정의되고, 사회복지 부문은 기초생활보장 및 취약계층을 지원하는 지출을 의미한다. 경제개발비적 성격을 갖는 지출에는 지역경제와 교통·수자원 부문이다. 지역경제 부문은 산업금융, 산업기술, 산업과 중소기업, 기술개발 등 산업 및 기업의 생산에 직접적인 생산요소 제공과 간접적인 생산을 지원한다. 교

통·수자원 부문의 지출은 도로, 도시철도, 대중교통, 수자원 관련 분야에 지원하여 생산기반 시설과 환경을 개선시킨다.

오병기(2006)는 패널·시계열 자료를 이용하여 사회개발비와 경제개발비 등 지방세출과 지역소득 간의 관계를 서울지역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서울의 경우 지역 소득과 경제개발비는 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사회개발비는 지역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장기적으로는 서울지역의 소득 증가가 사회개발비의 증가를 더욱 촉진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사하게, 이영성(2009)은 2001년부터 2005년까지 강원도, 경기도 경상남도, 경상북도 그리고 대전광역시의 시·군·구 자료를 토대로, SUR(Seemingly Unrelated Regression)방법을 적용하여 사회개발비가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그 결과 사회개발비의 지출이 소외계층의 복지 및 생활의 개선에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쳐 저성장 지역의 경제성장률을 높이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기동 외(2016)는 1986-2014년 16개 시도별 4개 부문(교육 및 문화, 사회복지, 지역경제, 교통 및 수자원) 부문의 재정증수를 산출하여 지역 간 재정지출의 효과를 파악하고, 베타수렴 검정을 통해 지방재정지출이 지역경제 성장에 미치는 영향을 정량적으로 분석하였다. 고정효과와 GMM 모형을 통해 4개 부문 지방재정지출의 산출탄력성을 추정한 결과에서는 교육 및 문화와 교통 및 수자원 부문의 재정지출은 분석방법론과 별개로 항상 지역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지만, 사회복지 및 지역경제 부문의 경우 유의하지 않거나 긍정적이지 않다는 결과가 도출되었다. 또한, 지역소득격차의 수렴여부를 살펴본 결과에서는 우리나라 16개 시도의 1인당 GRDP 격차가 점차 축소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00년 이전에는 지역경제 부문의 재정지출이, 2000년 이후에는 교육 및 문화 그리고 사회복지 부문 지출이 지역 간 소득격차를 감소시키고 지역 경제발전에 기여한다고 제시하였다.

지방재정지출을 부문별로 구분하여 분석한 대표적인 선행연구는 다음과 같다. 먼저, 김군수 외(2013)는 경기도 차원에서 일자리 창출, 소득재분배 개선을 목표로 수행된 사회복지정책, 교육정책, 교통정책, 환경정책 등 주요 정책들의 효과를 비교 분석하여 정책의 효율성을 평가하였다. 경기도가 수행한 (1) 복지정책 중 국민기초생활보장, 취약계층지원, 기초연금, 보육지원정책을 선별하고, (2) 교육정책의 고교무상교육과 반값 등록금, (3) 보건정책의 4대 중증질환과 노인장기요양보험, (4) 주택정책의 취득세 인하정책, (5) 교통정책의 GTX사업을 선정하였다. 이러한 정책들이 경기도 지역경제와 소득분배에 미치는 효과 등을 분석하고 정책들의 단위당 효과를 도출하여 우선순위를 산정하였다. 도입된 정책 중 지역경제(GRDP 감소)에 미치는 영향이 가장 적은 정책으로는 노인장기요양보험, 고교무상교육, 4대중증질환, 반값 등록금, 보육정책, 기초연금, 취약계층지원, 기초생활보장 순으로 나타났으며, 고용 측

면으로는 반값 등록금, 고교무상교육, 노인장기요양보험, 4대중증질환, 기초생활보장, 보육정책, 기초연금, 취약계층지원 순이다. 그리고 지역 간 소득재분배 개선효과에서는 기초생활보장이 가장 효율적인 정책으로 나타났으며, 반값 등록금, 4대 중증질환, 노인장기요양보험, 고교무상교육, 취약계층지원, 기초연금, 보육정책 순으로 뒤를 이었다. 이러한 결과는 한정된 정책예산 하에서 지방정부는 정책목표의 방향성을 체계적으로 수립하여 재정효율성을 높여야 한다는 것을 보이고 있다.

이외에도 지방정부는 지역의 소득불평등도 구조를 고려하여 차별적인 정책수단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총소득 지니계수와 소득방정식을 이용하여 지역별 가구소득불평등도를 산출한 장연주 외(2011)는 광역시, 도 등 지역별 가구소득불평등도에 대한 원천별 소득 및 가구주 개인특성의 기여도 차이를 분석하였다. 근로소득은 가구소득불평등도를 결정짓는 주요 요인이라는 결과를 제시하며, 가구주 근로소득 격차를 줄이는 것이 지역별 소득재분배 효과를 가장 크게 개선시키는 수단이라고 주장하였다. 동시에 부동산 소득의 한계적 증가가 가구소득불평등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가구소득 중 높은 부동산소득을 차지하고 있는 지역에 초점을 맞추어 부동산대책이 필요하다고 언급하였다. 이상은 외(2010) 역시 서울복지패널자료를 사용하여 강남지역과 비강남 지역 간 소득 및 재산격차와 관련된 요인을 분석하였다. 그 결과, 고소득과 관련된 인적자본, 노동시장 특성의 지역간 상이한 분포로 인해 강남 가구들의 소득수준이 비강남 지역 가구들보다 77만원(25%) 가량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두 지역간 순자산격차(주택 이외의 부동산을 제외한 순자산)는 약 1억3천만원 정도의 큰 차이를 보이며 소득격차가 더욱 심각하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그러나 소득격차와는 다르게 순자산격차는 가구의 인적자본과 그에 따른 소득의 축적이 아니라 관찰되지 않은 다른 요인에 의해 유발될 수 있다는 점도 언급하고 있다. 이외에도 지역간 소득불평등을 인적자본의 형성 및 개발격차로 인해 유발된다고 주장하는 연구로 강병구 외(2008), 허식 외(2008), 여유진 외(2005) 등이 있다.

## 제2절 지니계수의 이해

### 1. 지니계수

국민의 소득불평등 정도를 나타내는 대표지표로 사용되고 있는 지니계수는 0~1 사이의 값으로 표현된다. 0은 완전히 평등한 분배 수준을 의미하고 1에 가까울수록 불평등 수준이 높아져 1은 완전히 불평등한 수준을 의미한다.

일반적인 수준에서 지니계수가 0.4 이상으로 증가하면 배분이 불평등하게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며 0.4 이하의 계수는 불평등 수준이 양호한 것으로 평가한다. 2021년 9월 기준 통계청에서 공개된 한국의 지니계수는 2019년 소득까지를 발표하고 있다. 2019년 가계금융복지조사 시장소득을 기준으로 산출한 지니계수는 0.404로 확인되면 처분가능소득(세후 소득)을 기준으로 산출한 지니계수는 0.339를 기록하고 있다.

〈표 2-1〉 지니계수와 소득격차

GINI 계수	소득격차	사례지역
~0.2	거의 완전 평등	존재하지 않음
0.2~0.25	소득격차가 대단히 적다	슬로바키아(0.236), 슬로베니아(0.249), 화성시(0.217) 등
0.25~0.3	소득격차가 상당히 적다	벨라루스(0.253), 노르웨이(0.262), 스웨덴(0.275), 독일(0.289) 등
0.3~0.35	소득격차가 적은 편이다	프랑스(0.301), 캐나다(0.303), 러시아(0.331), 이탈리아(0.334), 한국(0.339, 가계금융복지조사 기준), 일본(0.340), 수원시(0.338), 고양시(0.340), 용인시(0.323) 등
0.35~0.4	소득격차가 보통이다	영국(0.366), 미국(0.390), 한국(노동패널기준 0.379), 성남시(0.360) 등
0.4~0.5	소득격차가 높은 편이다	중국(0.495), 터키(0.400), 멕시코(0.458), 칠레(0.460), 싱가포르(0.459) 등
0.5~0.6	소득격차가 대단히 높다	콜롬비아(0.504), 브라질(0.539) 등
0.6~0.7	소득격차가 심각할 정도로 높다	남아프리카공화국(0.630) 등
0.7~	심각한 사회적 혼란이 발생해도 이상하지 않을 수준이다	존재하지 않음

주: 각각 2019년 세후 처분가능소득 기준, 통계청 지니계수, 한국(통계청 자료 포함) 및 국내 자치단체의 경우 노동패널 기준 저자 산출,

통계청에서 제공하는 지니계수는 균등화 처분가능소득을 기준으로 계산되는데 가구원의 수를 고려하여 가구소득을 개인소득으로 변환한 것을 균등화 개인소득이라고 한다. 이때 OECD에서 제시한 방식으로 가구소득을 각 가구원 수의 제곱근으로 나누어 산출한다. 201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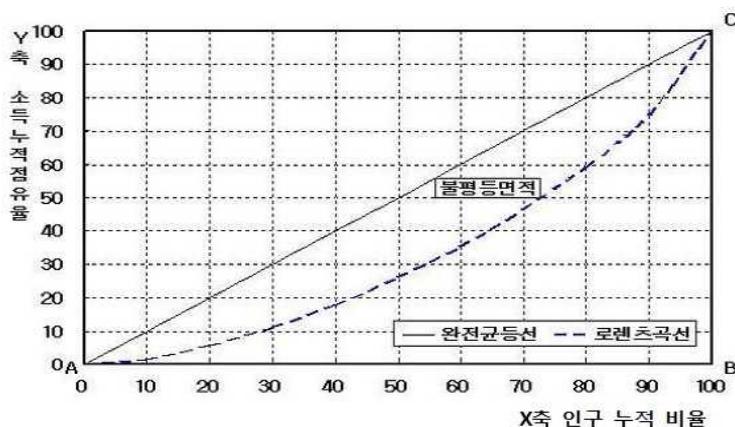
년 처분가능소득을 기준으로 한 지니계수를 국가별로 비교해보면 한국은 0.379, 미국은 0.390, 영국은 0.3666으로 수준을 보인다. 스웨덴(0.275), 폴란드(0.281), 독일(0.289), 프랑스(0.301), 캐나다(0.303), 일본(0.340) 등은 한국보다 상대적으로 낮은 소득격차 수준을 나타내고 있다.

지니계수는 국가별로 소득 불평등의 추이를 비교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소득 계층별로 지니계수를 비교함으로써 다양한 소득 계층간의 분배 변동을 비교할 수도 있다. 이를 통해 비슷한 소득이나 지니계수를 갖는 국가라도 소득분배 구성이 다르게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지니계수를 통한 비교가 중요한 의미를 가질 수 있다. 또한, 세전소득(시장소득)과 세후소득(처분가능소득)을 기준으로 각각 지니계수를 산출하여 비교하면, 정부의 소득재분배 정책을 통한 불평등 개선효과를 볼 수 있다. 예를 들면 2011년과 2019년 시장소득 지니계수는 각각 0.418, 0.404였는데, 처분가능소득을 기준으로 산출한 지니계수는 0.388에서 0.339로 하락하게 나타난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 정부의 소득재분배 정책이 소득 불평등을 다소 개선시키는데 영향을 미쳤음을 확인할 수 있다.

## 2. 지니계수 추정방법

전통적 지니계수는 로렌츠 곡선을 기초로 도출되는데 Y축에 소득누적점유율을 표시하고 X축에 인구누적비율로 표시하여 X축과 Y축의 점들을 각각 대응시킨 꺾적이 로렌츠 곡선이다. X축과 Y축의 45도 대각선은 완전균등선을 의미한다. 전통적인 지니계수는 로렌츠곡선과 완전균등선 사이의 면적을 완전균등선 아래의 면적( $\triangle ABC$ )으로 나눈 값을 의미한다.

〈그림 2-3〉 로렌츠 곡선을 이용한 지니계수 도출



자료: 통계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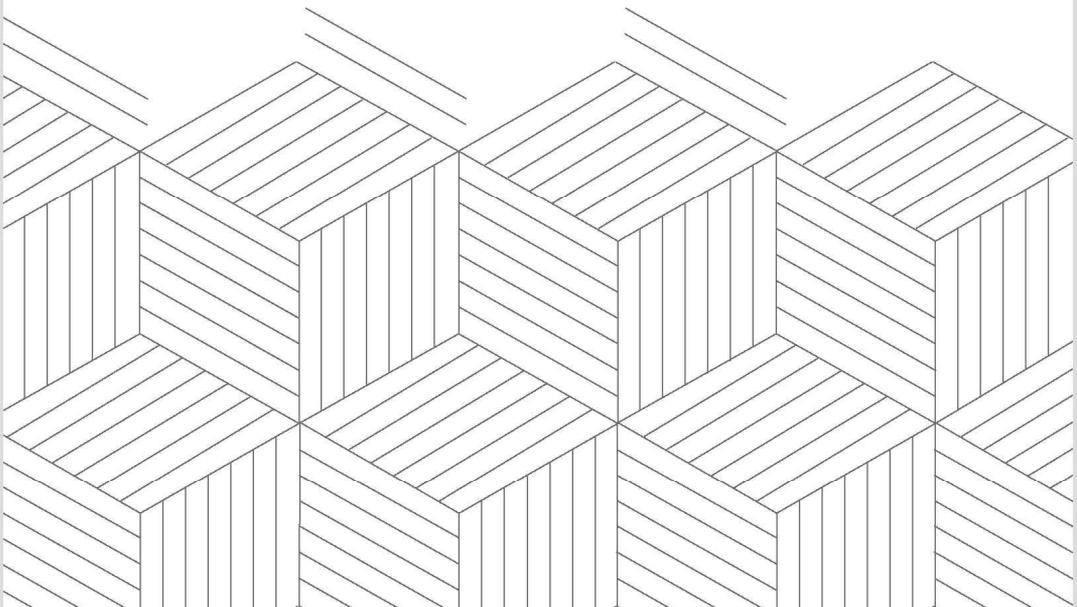
이렇게 로렌츠 곡선을 통한 지니계수 추정은 초고소득층의 소득점유율 증가를 빠르게 반영하지 못한다는 한계점이 있다. 또한, 일반적으로 소득에 대한 데이터에서 고소득층의 소득이 과소 보고되는 경향이 있다. 따라서 최근에는 다양한 소득추정방법을 고안하고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감으로써 소득의 불평등도 정도를 산출하는데 정확도를 높이고자 노력하고 있다.

이에 따라 한국에서는 2014년까지 소득분배 지표로 「가계동향지표」를 사용하였으나 2015년 이후에는 고소득층의 표본 대표성이 더 높고 연간 행정자료 활용이 가능한 「가계금융복지조사」 자료를 병행해 사용하고 있다. 이외에도 고소득층 소득자료를 보완하기 위해 다양한 연구들이 이뤄졌는데 주로 가계조사자료에서 가중치를 조정하거나 초고소득층의 가구 표본을 추가하는 방식으로 행해지고 있다. 예를 들면 가중치의 기준이 되는 개인 소득분포에 조세자료를 결합하여 사용하거나 가구원 수나 소득에 대해 수집된 자료를 보정하는데 베이지안 자료 확대방법을 사용하여 통계적으로 접근한 연구들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한계점을 보완하고 기초자치단체 단위 소득 정보를 포함하고 있는 한국노동패널(KLPS) 소득자료를 활용해 지니계수를 추정한다.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제5장 지니계수 추정과 소득격차에서 확인할 수 있다.

# 제3장 국가 및 지방재정 현황

제1절 국가 재정 현황  
제2절 수원시 및 유사규모 자치단체 지방재정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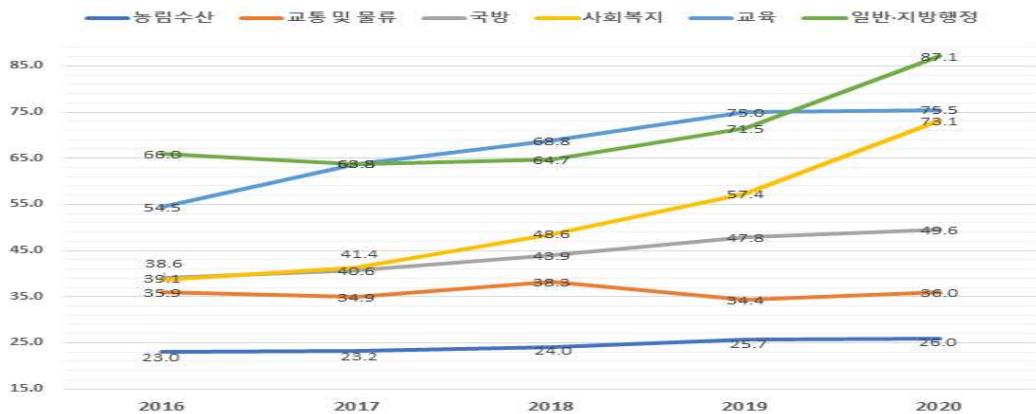


## 제3장 국가 및 지방재정 현황

### 제1절 국가재정 현황

『국가재정법』 제21조 제3항 등에 따라 정부의 세출예산의 기능별 분류는 총 16개 분야로 나뉘어진다. 중앙정부 총 세출 결산 기준 비중이 큰 순서대로 나열해보면 일반·지방행정분야 87.1조원, 교육분야 75.2조원, 사회복지분야 73.1조원, 국방 49.6조원, 교통 및 물류 36.0조원, 기업 및 에너지 26.4조원, 농림수산 26조원, 공공질서 및 안전관리 20.5조원, 환경 13.9조원, 보건 13.5조원, 국토 및 지역개발 8.7조원, 통신 7.9조원, 과학기술 7.8조원, 문화 및 관광 4.5조원, 통일·외교분야 2.7조원, 예비비에 0.6조원 순을 보인다. 이 중 사회복지분야 지출은 2017년 이후 가장 가파른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데 2017년 대비 76.6% 증가한 것으로 확인된다.

〈그림 3-1〉 최근 5년간 주요 기능별(5개 기능) 세출 결산 추이



자료: 2020회계연도 국가결산보고서, 대한민국정부

기능별 일반회계 전체 지출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0% 이상인 분야는 16개 분야 중 4개 분야로 일반·지방행정(86조1,700억 원, 22.4%) 분야 이외에 사회복지분야 지출이 18.8%(72조 2,622억 원)로 가장 높은 비중을 보이고 있으며 다음으로 교육분야 18.3%(70

조 5,631억 원), 국방분야 12.5%(48조 1,096억 원 순)을 보인다. 이들 4개 분야가 일반회계 전체 지출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약 72%에 해당한다. 이외 5~10% 비중을 차지하는 분야는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분야로 총 지출액 중 20조 3,421억 원(5.3%)에 해당하며, 다음으로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가 20조 811억 원으로 5.2% 해당한다.

〈표 3-1〉 2020회계연도 기능별 세출 실적(일반회계)

(단위: 조원, %)

기능별	예산액	예산현액(A)	지출액(B)	집행률	구성비
합계	389.1	390.4	385.2	98.7	100
1. 일반지방행정	87.8	88.2	86.2	97.7	22.4
2. 공공질서 및 안전	19.7	20.5	20.1	98	5.2
3. 통일·외교	2.8	2.9	2.7	95.1	0.7
4. 국방	48.6	49.4	48.1	97.4	12.5
5. 교육	70.6	70.7	70.6	99.8	18.3
6. 문화 및 관광	3.8	3.8	3.7	95.9	1
7. 환경	5.1	5.3	5.3	99.9	1.4
8. 사회복지	71.2	72.5	72.3	99.6	18.8
9. 보건	11.8	13.5	13.2	97.7	3.4
10. 농림수산	10.2	10.4	10.3	99.2	2.7
11.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20	20.4	20.3	99.8	5.3
12. 교통 및 물류	18.4	18.4	18.3	99.7	4.8
13. 통신	0.4	0.4	0.4	97.8	0.1
14. 국토 및 지역개발	6	6.6	6.4	97.7	1.7
15. 과학기술	6.9	6.9	6.8	98.5	1.8
16. 예비비	5.6	0.6	0.6	90.1	0.1

자료: 2020회계연도 국가결산보고서, 대한민국정부

## 1. 2020회계연도 코로나 지원 및 추가경정예산 분석

2020회계연도에 신규 재정사업의 배정은 총 41개 부처에 610개 사업이 배정되었으며 이에 대한 예산은 총 31조 2,550억 원이다. 신규 재정사업 예산은 정부예산 554.7조원(통합예산 기준)의 약 5.6%를 차지하는 규모이다. 2019년 대비 2020회계연도에는 신규 재정사업의 수가 106개가 증가했으며 예산은 821.7% 인상된 27조 8,641억 원이, 집행액은 866.7% 인상된 27조 5,571억 원 증가하였다. 이렇게 신규 재정사업이 큰 폭으로 증가한 원인으로 긴급

재난지원금, 일자리 및 사회안전망 확충과 같은 코로나19 관련 사업들이 꼽힌다. 이로 인해 지난 2015년부터 2019년까지 신규 재정사업 예산이 정부 총지출 대비 약 1% 남짓의 비중을 차지했던 것과 달리 2020년에는 5% 이상으로 대폭 인상되었다.

한편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고용 및 사회안전망 확충, 감염병 대응역량 강화 등을 위해 2020년 한 해 동안 총 4차례의 추가경정예산이 편성되었다. 추경 규모는 제1회 추경 △0.8조원, 제3회 추경 △11.4조원으로, 총 △12.2조원이 이루어졌고, 세출 규모는 제1회 추경 10.9조원, 제2회 추경 12.2조원, 제3회 추경 23.7조원, 제4회 추경 7.8조원으로, 총 54.6조원이 확대되었다.

### 1) 코로나19로 대응한 신규 재정사업

신규 재정사업에 포함되는 유형은 본예산의 신규 사업, 추가경정예산에 포함된 신규 사업, 기금운용계획 변경에 따른 신규 사업, 예비비에 속한 신규 사업, 이·전용에 따른 신규 사업 등으로 구분된다. 16개 기능별로 분류한 신규 재정사업 비중을 확인해 보면 31조 2,550억 원 총 예산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분야인 일반지방행정분야 예산이 15조 7,104억 원(50.3%)으로 가장 많으며 그 다음으로 사회복지분야 예산이 8조 7,155억 원으로 27.8%를 차지한다. 그 외에 보건분야 예산 1조 7,292억 원,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분야 예산 1조 2,280억 원, 교육 분야 예산 1조 1,432억 원 등으로 나뉘어진다.

주요 10개 신규 재정사업에 대해 예산 규모별로 나열해보면, (1) 행정안전부의 ‘코로나19 관련 긴급재난지원금 지원’ 사업이 예산 12조 3,959억 원 중 12조 3,958억 원이 집행되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2) 고용노동부의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사업에 예산 2조 6,352억 원 중 2조 6,129억 원을 집행하였으며, (3) 보건복지부의 ‘아동양육 한시 지원’ 사업에 예산 2조 3,049억 원 중 100%를 집행하였다. (4) 금융위원회의 ‘산업은행 출자(금융시장안정화)’ 사업에 예산 1조 6,521억 원 중 100%를 집행하였고, (5) 보건복지부의 ‘감염병 대응 지원체계 구축 및 운영’ 사업에 예산 1조 3,506억 원 중 1조 3,122억 원을 집행했다. (6) 행정안전부의 ‘희망근로지원’ 사업에 예산 1조 2,865억 원 중 100%를 집행했고, (7) 보건복지부의 ‘저소득층 한시생계지원’ 사업에 예산 1조 614억 원 중 100%를 집행했다. (8) 고용노동부의 ‘청년일자리창출지원’ 사업에 예산 7,963억 원 중 7,573억 원을 집행했으며, (9) 교육부의 ‘고등학교 무상교육’ 사업에 예산 6,460억 원 중 100%를 집행하고, (10) 행정안전부의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 사업에 예산 6,298억 원 중 100%를 집행했다. 위의 예산은 2020년에 행해진 4차례의 추가경정예산과 이·전용을 거쳐 증감된 내역을 포함한 것이다. 2020회계연도 신규 재정사업의 전체 예산에서 상위 10개 신규 재정사업 예산이 차지하는 비중은 79.2%에 이른다.

## 2)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통한 코로나19 재난지원 사업

2020년 동안 코로나19에 대응하여 총 4차례의 추가경정예산안이 편성되었다. 제1회 추경은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을 지원하고 방역체계를 보강하기 위한 목적으로 추진되었다. 제1회 추경안의 규모는 총 11.7조원(세출확대 8.5조원, 세입경정 3.2조원)으로 이뤄졌는데, 추경안의 재원은 10.3조원의 국채발행을 통해 대부분이 조달되었으며 한국은행 잉여금을 통해 0.7조원, 그리고 기금여유자금으로부터 0.7조원이 조달되었다.

코로나19가 장기화되고 본격적인 경제 위축이 진행됨에 따라, 총 7.6조원 규모의 제2회 추경안이 편성되었다. 이는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에 놓인 국민들의 생계보장 및 소비진작을 목적으로 한 것으로, 구체적으로는 긴급재난지원금 사업의 예산이 추경을 통해 편성된 것이다. 제2회 추경안 예산인 7.6조원의 재원조달은 국채 발행 없는 6.4조원 규모의 지출 구조조정, 1.2조원 규모의 기금 여유자금 활용으로 이뤄졌다.

제3차 추경안은 코로나로 인한 경제위기 극복을 지원하고, 고용충격에 대응하는 한편, 하반기 경기회복을 위한 재정지원을 위해 편성되었다. 2020년 제3회 추경안이 6월 3일 국무회의를 거쳐 6월 4일 국회에 제출되었다. 제3회 추경예산 규모는 35.3조원으로, 재원은 국채발행을 통해 23.8조원, 지출 구조조정을 통해 10.1조원, 기금 자체재원을 통해 1.4조원이 조달되었다.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경기·민생 어려움에 대응하여, 정부는 맞춤형 긴급 재난지원 패키지 지원을 위한 2020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여 9월 10일 국무회의 심의·의결 후 9월 11일 국회에 제출하였다. 제4회 추경안 총 규모는 7.8조원으로, 기금 자체재원(0.3조원), 국채발행(7.5조원)으로 재원을 조달하였다.

제4회 추경안은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인해 타격을 입은 소상공인·중소기업, 양육아동 가정 및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목표로 편성되었다. 제4차 추경안 예산인 7.8조원은 전액 국채발행을 통해 조달되었으며, 소상공인·중소기업 피해지원에 3.9조원, 긴급돌봄지원 1.8조원, 긴급방역 0.2조원을 지출하도록 예정되었다.

2020년 동안 네 차례의 추경예산을 거쳐 총예산은 본예산 대비 42.5조원이 증가했으며, 총지출은 554.7조원을 기록했다. GDP대비 통합재정수지는 4.4% 증가해 2020년 본예산 대비 2.8%p 줄어들었고, GDP대비 국가채무비율은 44.0%로 2019년 대비 6.3%p 증가하였다.

## 2. 2021년 예산안 및 2022년 예산안

### 1) 2021년 예산안

2021년 예산안 총지출은 2020년 본예산 대비 8.5%인 43.5조원이 증액된 555.8조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이는 코로나19 피해 이후의 경기회복, 한국판 뉴딜정책 지원을 위한 것이며 동시에 『2020-2024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따른 확장적 재정기조 계획 때문이다. 한편 2021년도 예산안 총수입은 483조원으로 이중 282.8조원이 국세구입, 28.6조원이 세외수입, 171.6조원이 기금수입으로 편성되었다.

〈표 3-2〉 2021년 예산안 총지출

(단위: 조원, %)

구분	2020		2021 예산안 (전망)
	본예산	추경	
총지출	512.3	554.7	555.8
-예산	351.1	377.5	370.9
-기금	161.2	177.2	184.9

자료: 2021년도 예산안 총괄분석

〈표 3-3〉 2021년 예산안 총수입

(단위: 조원, %)

구분	2020		2021 예산안 (전망)
	본예산	추경	
총수입	481.8	470.7	483.0
-예산	319.9	308.8	311.4
(국세수입)	(292.0)	(279.7)	(282.8)
(세외수입)	(27.9)	(29.1)	(28.6)
-기금	161.2	161.2	171.6

자료: 2021년도 예산안 총괄분석

2021년 예산안을 주요기능 분야별로 분류해보았을 때<sup>2)</sup> 비중이 큰 분야별로 보건·복지·고용 분야 비중이 199.9조원으로 가장 크며 일반·지방행정 비중이 86.5조원, 교육이 71.0조원, 국방이 52.9조원을 구성한다. 5개 비중이 전체 예산안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73%에 이른다.

2) 국가재정은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dBrain)을 바탕으로 한 프로그램예산 운용에서는 16개 기능(분야)으로 분류되며, 국가재정운용계획에서는 12개 기능(분야)로 나뉘어진다. 차이점은 16개 기능에 포함되는 통신, 예비비 등이 12개 기능에서 제외되며, R&D 기능이 12개 기능에서는 별도로 집계된다는 점이다.

한편 2020년 본예산 대비 증감이 큰 분야는 보건·복지·고용 분야로 전년대비 19.4조원 증가했으며(전년예산 대비 10.7% 증가), 일반·지방행정 분야는 7.5조원 증가(전년예산 대비 9.5% 증가), 산업·중소기업·에너지 분야는 5.4조원(전년예산 대비 22.9% 증가), 환경 분야 1.5조원(전년예산 대비 16.7% 증가), R&D 분야 3조원 증가(전년예산 대비 12.3% 증가) 등이 있다.

## 2) 2022년 예산안

2022년 예산안 총지출은 2021년 본예산 대비 8.3%인 46.4조원이 증액된 604.4조원으로 편성되었다. 이는 2021년 예산안과 마찬가지로 『2020-2024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따른 확장적 재정기조 계획의 일환이다. 4대 투자중점에 초점을 맞춘 것으로 코로나 이후의 빠른 경제회복, 포용적 회복 및 지역균형 발전을 통한 양극화 대응, 탄소중립·디지털전환 등 미래형 경제구조로의 대전환, 국민보호 강화와 삶의 질 강화로 나뉜다. 2022년도 예산안 총수입은 548.8조원으로 전망된다. 경기 회복에 따른 주요 세목 세수 증가로 국세가 증가함에 따라 국세수입을 통한 자원 338.7조원, 국세 외의 세외수입 및 기금수입으로 210.2조원 편성되었다.

〈표 3-4〉 2020-2022년 예산안 총지출·총수입

(단위: 조원)

구분	2020		2021		2022 예산안
	본예산	추경	본예산	추경	
총지출	512.3	554.7	558.0	604.9	604.4
총수입	481.8	470.7	482.6	514.67	548.8
통합재정수지 (GDP대비%)	△30.5 (△1.5)	△76.2 (△3.9)	△75.4 (△3.7)	△90.3 (△34.4)	△55.6 (△2.6)
국가채무 (GDP대비%)	805.2 (39.8)	846.9 (43.9)	956.0 (47.3)	965.3 (47.3)	1,068.3 (50.2)

자료: 2021년도 예산안 총괄분석, 기획재정부

2022년 예산안을 주요기능 분야별로 분류해보았을 때<sup>3)</sup> 특징은 한국판 뉴딜 2.0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탄소중립 및 사회 안전망 확충에 중점적으로 지원하며 지방재정을 확대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환경 분야에 예산이 11.9조원으로 1.3조원(12.4%) 증가하였으며 이는

3) 각주 1)의 기능별 분야와 같이, 2022년 예산안의 주요기능별 분류도 12개 기능(분야)로 구성된다.

2050탄소중립, 대기·물·폐기물과 같은 생활환경 개선에 투자하기 위함이다. R&D 분야 예산은 29.8조원으로 2021년 대비 2.4조원 증가하였으며 여기에는 한국판 뉴딜 2.0을 기반으로 한 미래주력 산업 육성 확대 등이 포함된다.

한편, 보건·복지·고용 분야 비중이 2021년 199.9조원에서 216.7조원으로 8.5% 증가하는데 여기에는 전 국민 고용보험 추진, 전국민 접종을 위한 백신 1.7억회분, 병상 확보, 기준중위소득 인상과 같은 내용이 포함된다. 산업·중소기업·에너지 분야에서는 소상공인 손실보상을 지원하기 위해 예산을 확대하였으며 이를 위해 2021년의 28.6조원 대비 6.0% 증가한 30.4조원을 배정하였다. 이외에 교육 분야도 2021년 대비 12조원(16.8%) 증가한 83.2조원 배정되었으며 일반·지방행정 분야에서는 2021년 대비 12.1조원(14.3%) 증가한 96.8조원이 편성되었다.

2022년 예산안의 중점 투자 방향을 나뉘보면 크게 1) 코로나19 이후의 빠른 경제회복, 2) 포용적 회복과 지역균형발전으로 양극화 대응, 3) 탄소중립·디지털 전환 등 미래형 경제구조 대전환, 4) 국민보호 강화와 삶의 질 제고로 분류된다. 이러한 방향성을 가지고 12대 중점 프로젝트를 추진할 계획에 있다.

〈표 3-5〉는 12대 중점사업별 투자계획을 나타내고 있다. 주요 사업들에 배정된 예산안은 약 250조원 규모로 대표적으로 양극화에 대응한 중층적 사회안전망 강화에 총 83.4조원이 배정되었으며 지역균형발전 4대 패키지 사업에 52.6조원, 한국판 뉴딜 2.0에 33.7조원, 청년 희망사다리 패키지사업에 23.5조원, 국민안전 3-3-3 프로젝트에 21.8조원, 탄소중립경제 프로젝트에 11.9조원 등이 편성되었다.

〈표 3-5〉 2022년 예산안 12대 중점 프로젝트(250조원 수준, 중복포함)

(단위: 조원)

경제회복, 양극화 대응		
新양극화 대응 중층적 사회안전망 강화	소득(16.9조원) + 고용(1.9조원) + 생활(41.3조원) + 취약계층(23.3조원)	83.4조원
청년 희망사다리 패키지	일자리(5.5조원) + 자산형성(1.9조원) + 주거(6.3조원) + 교육·복지·문화(9.7조원)	23.5조원
소상공인·전통시장 위기극복·활력회복	안전망(1.9조원) + 금융(1.4조원) + 구조전환(0.6조원) + 지역상권(0.6조원)	4.5조원
SOC 고도화·첨단화 프로젝트	교통망 확충(1.7조원) + 첨단화(1.5조원) + 스마트 시티(0.2조원)	3.4조원
뉴딜 등 미래대비 투자		
한국판 뉴딜 2.0	디지털 뉴딜(9.3조원) + 그린 뉴딜(13.3조원) + 휴먼 뉴딜(11.1조원)	33.7조원
미래산업 전략 R&D 투자	뉴딜(3.6조원) + 미래주력산업(2.8조원) + 프론티어형 전략기술(0.7조원)	6.2조원
미래 경제구조 선도 혁신형 인재양성	AI·SW 등 핵심분야 + 실전인재 교육 + 직업훈련	2.0조원
탄소중립경제 선도	경제구조 저탄소화(8.3조원) + 저탄소 생태계(0.8조원) + 공정한 전환(0.5조원) + 제도적 기반(2.3조원)	11.9조원
지역균형발전 및 삶의 질		
지역균형발전 4대 패키지	재정분권·재정보강 등(24.7조원) + 균형발전 인프라(12.1조원) + 지역균형뉴딜(13.1조원) + 지방소멸대응(2.7조원)	52.6조원
국민안전 3·3·3 프로젝트	(자연재해 5.3조원) 풍수해 + 산림재해 + 지진 (생명보호 14.1조원) 자살 + 교통사고 + 산업재해·화재 (생활환경 2.4조원) 수질 + 대기 + 자원순환	21.8조원
가족 행복·육아 친화 5+3 지원	친(親)가족 5대 패키지(4.1조원) + 아동수당(2.4조원) + 모자건강관리 + 일·가정 균형	6.6조원
장병 사기진작 토달 패키지	봉급 + 급식 + 자기개발 + 사회복귀준비금 + 주거여건	4.7조원

자료: 강한경제 민생버팀목 「2022년 예산안」, 「2021~2025 국가재정운용계획」, 2022년 예산, 604.4조원으로 확장재정 편성, 강한 경제·민생 버팀목 2022년 예산안을 한눈에!, 정책브리핑(www.korea.kr)

## 제2절 수원시 및 유사규모 자치단체 지방재정 현황

### 1. 총계기준 예산 현황

당초 예산 총계 기준, 통합회계기준 경기도 본청 총 예산은 2018년 26조 8,046억 원에서 2021년 32조 6,256억 원으로 15조 8천억 원 이상 증가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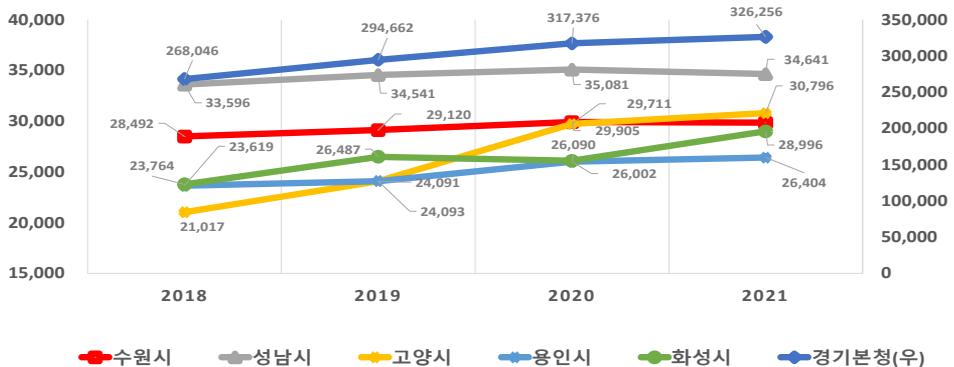
경기도 내 유사 재정규모를 보이고 있는 5개 자치단체인 수원시, 성남시, 용인시, 고양시, 화성시 중 예산 규모가 가장 큰 지역은 성남시로 2021년 기준 3조 4,641억 원 규모를 보이고 있다.

수원시는 2조 9,839억 원으로 성남시, 고양시에 이어 세 번째 큰 규모를 보이고 있으며 성남시와는 4,802억 원 정도의 차이를 보이고 있다.

5개 유사 자치단체 중 가장 가파른 증가세를 보이는 지역은 고양시로 2018년 가장 낮은 예산규모를 보이고 있었으나 최근 3년 연속 가파른 증가세를 보이며 2021년 수원시(2조 9,839억 원) 보다 957억 원 이상 확대된 규모를 나타내고 있다.

〈그림 3-2〉 수원시 및 유사규모 자치단체 예산 추이

(단위: 억 원)



주: 당초예산 총계 기준, 통합회계기준(일반회계+특별회계+기금)

수원시 예산의 경우 2021년 당초 (총계 기준) 세입 총계는 2조 9,839억 원이며 이중 재정 지출 및 운영에 이용되는 일반회계 예산은 2조 3,553억 원으로 전체 예산의 78.9%를 차지하고 있다. 그 외 상·하수도 사업 등 공기업 특별회계 2,404억 원(8.1%), 도시교통사업, 의료급여기금, 대지보상, 도시개발, 폐기물처리시설 등에 쓰이는 기타 특별회계 669억 원(2.2%),

재난관리기금, 옥외광고발전기금, 사회복지기금, 양성평등기금 등 기금 3,212억 원(10.8%) 등으로 구성된다.

총 예산은 최근 4년간 연 평균 2.77%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으며 기금부문과 일반회계부문은 전반적으로 증가 추이를 나타내고 있으나 공기업 및 기타 특별회계 예산 부문은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특히 기금부문은 2020년 대비 50% 가까이 증가하며 최근 4년 평균 35.95% 증가율을 보이고 있다. 공기업 특별회계는 9.89% 감소, 기타 특별회계는 18.52% 감소하였다.

〈표 3-6〉 최근 4년간 수원시 예산 추이

(단위: 억 원, %)

구분	2018	2019	2020	2021	연평균증가율	비중
세입총계	28,492	29,121	29,905	29,839	2.77	100
일반회계	20,256	22,795	23,849	23,553	4.70	78.9
공기업 특별회계	4,163	3,010	2,525	2,404	-9.89	8.1
기타 특별회계	2,874	1,963	1,888	669	-18.52	2.2
기금	1,200	1,353	1,642	3,212	35.95	10.8

주: 당초예산 총계기준

## 2. 세입재원별 예산 추이

2021년 기준 유사 자치단체별 세입 재원별 예산 추이를 보면 지방세수입 및 세외수입을 통한 자체수입의 비중이 가장 낮은 지역은 고양시로 34.1%의 비중을 보이고 있으며 가장 높은 지역은 화성시로 53.9%의 규모를 보이고 있다. 수원시는 47.8%로 고양시 다음으로 높은 자체세입 구조를 보인다.

수원시, 성남시, 용인시의 경우 지방세 수입 비중이 전체 세입 재원 중 가장 큰 규모를 차지하고 있으나 고양시의 경우 지방세 수입이 2021년 전체 세입예산의 22.7%인데 반해 보조금을 통한 세입 비중이 33.3%로 나타나 보조금 비중이 높은 지역인 것으로 확인된다. 지방세를 통한 세입 규모는 성남시가 가장 많은 1조 1,424억 원 규모를 보이고 있으며 다음으로 화성시, 용인시, 수원시 고양시 순을 보인다. 전체 예산대비 비중으로 전환해 확인할 경우에는 화성시가 40.5%로 지방세 수입 비중이 높게 확인된다.

〈표 3-7〉 유사 자치단체 자원별 세입 예산(2021년)

(단위: 억 원, %)

구분	수원시		성남시		고양시		용인시		화성시	
	금액	비중								
합계	26,627	100.0	30,056	100.0	26,975	100.0	25,503	100.0	26,525	100.0
지방세수입	8,950	33.6	11,424	38.0	6,128	22.7	9,305	36.5	10,752	40.5
세외수입	3,777	14.2	4,191	13.9	3,072	11.4	3,284	12.9	3,560	13.4
지방교부세	427	1.6	283	0.9	2,503	9.3	363	1.4	177	0.7
조정교부금 등	1,940	7.3	1,915	6.4	2,187	8.1	1,990	7.8	1,705	6.4
보조금	9,000	33.8	6,699	22.3	8,977	33.3	8,030	31.5	7,039	26.5
지방채	254	1.0	0	0.0	0	0.0	0	0.0	0	0.0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2,276	8.5	5,542	18.4	4,105	15.2	2,529	9.9	3,290	12.4

주: 자원별 단체별 세입예산, 총계기준

수원시 자원별 세입 예산 추이를 보면 최근 5년 동안 보조금 규모가 꾸준히 증가하는 특징을 보이고 있다. 특히 2021년 전체 예산의 33.8%를 차지하며 지방세수입(33.6%)을 통한 자원보다 더 큰 비중을 보이고 있다. 이는 전반적인 증가세와 2020년 코로나19의 영향이 반영된 결과로 보여진다. 지방세 비중은 전체 예산의 30%대에서 등락세를 보이고 있으며 2020년 전년도 34.7%에서 31.5%로 하락한 후 2021년 33.6%로 전환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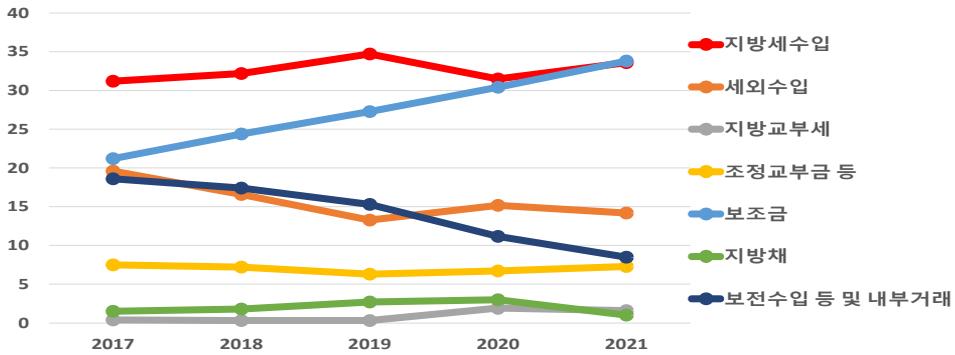
〈표 3-8〉 수원시 자원별 세입 예산 추이

(단위: 억 원, %)

구분	2017		2018		2019		2020		2021	
	금액	비중								
합계	24,052	100.0	27,289	100.0	27,765	100.0	28,260	100.0	26,627	100.0
지방세수입	7,516	31.2	8,796	32.2	9,621	34.7	8,907	31.5	8,950	33.6
세외수입	4,723	19.6	4,533	16.6	3,703	13.3	4,305	15.2	3,777	14.2
지방교부세	90	0.4	90	0.3	90	0.3	543	1.9	427	1.6
조정교부금 등	1,800	7.5	1,970	7.2	1,750	6.3	1,887	6.7	1,940	7.3
보조금	5,100	21.2	6,646	24.4	7,588	27.3	8,596	30.4	9,000	33.8
지방채	350	1.5	497	1.8	755	2.7	844	3.0	254	1.0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4,473	18.6	4,757	17.4	4,258	15.3	3,178	11.2	2,276	8.5

〈그림 3-3〉 수원시 자원별 세입 예산 추이

(단위: 억 원)



주: 세입예산 총계기준

### 3. 일반회계기준 결산 현황<sup>4)</sup>

5개 유사규모 자치단체 결산액 규모는 사회복지분야 지출을 중심으로 지속적인 증가 추이를 보이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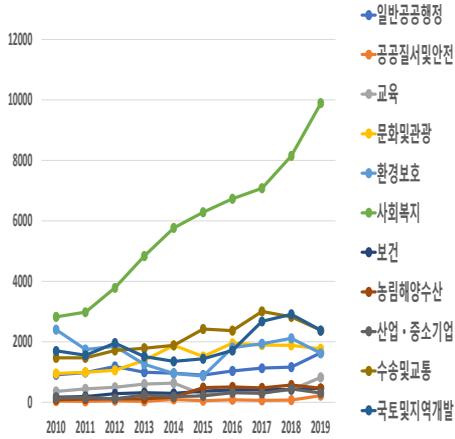
2019년 기준 수원시 일반회계 결산액은 2조 4,842억 원으로 유사자치단체 대비 가장 큰 규모를 보이고 있으며 이 중 사회복지분야 지출액은 세출결산액의 39.84%인 9,896억 원 규모를 차지하고 있다. 성남시 일반회계 결산액은 2조 3,432억 원 규모이며 이 중 사회복지분야 지출에 38.47%인 9,013억 원 규모를 보인다.

5개 유사규모 자치단체 중 2019년 기준 일반회계 세출 결산액 대비 사회복지비 지출 비율이 가장 높은 지역은 고양시로 전체 결산액의 41.56% 규모를 보이고 있으며, 가장 작은 지역은 화성시로 32.09%로 나타난다. 화성시 사회복지분야 지출은 일반회계 총 지출의 32.09%로 상대적으로 낮은 반면 수송 및 교통분야는 15.71%로 타 지역대비 상대적으로 높은 비중의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용인시 일반회계 총 지출 대비 사회복지분야 지출은 34.2%이며, 수송 및 교통분야 지출은 총 지출의 17.43% 규모를 차지하고 있어 화성시와 유사한 특성을 띠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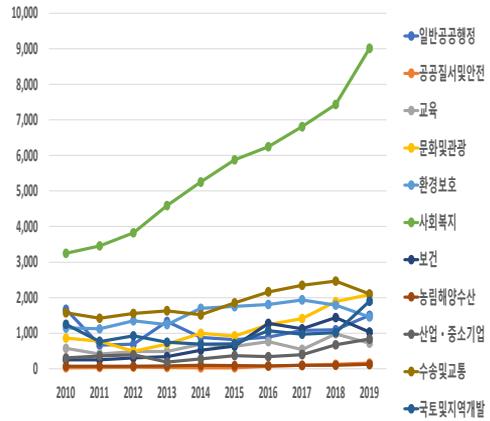
수원시의 경우 사회복지분야지출이 전체 세출의 39.84%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다음으로 기타 11.54%, 수송 및 교통 9.57%, 국토 및 지역개발 9.57%, 문화 및 관광 7.13%, 환경보호 6.54%, 일반공공행정 6.60%, 교육 3.33%, 보건 1.88%, 농림해양수산 1.86%, 산업·중소기업 1.23%, 공공질서 및 안전 0.91% 순을 보인다.

4) 가장 최근 자료인 2019년까지 데이터를 추출하였으며 그래프에서는 예비비, 기타 항목을 제외하였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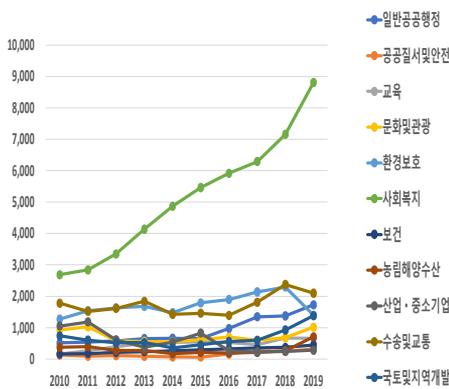
〈그림 3-4〉 수원시 재정지출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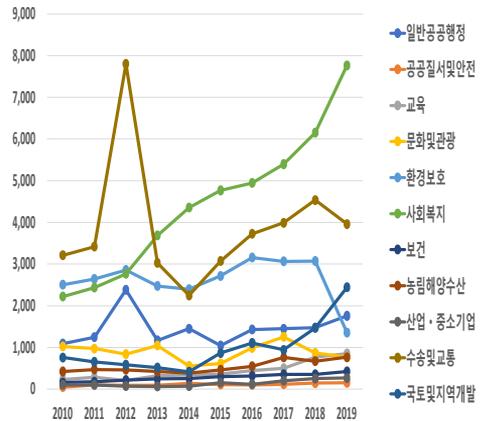
〈그림 3-5〉 성남시 재정지출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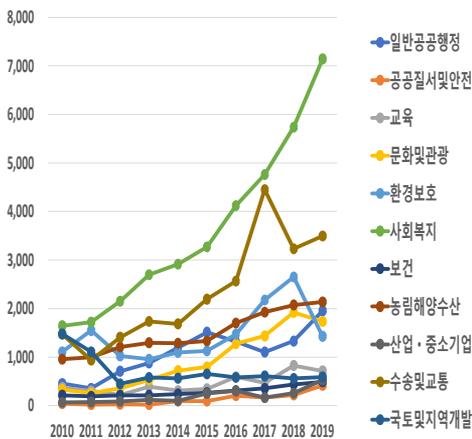
〈그림 3-6〉 고양시 재정지출 추이



〈그림 3-7〉 용인시 재정지출 추이



〈그림 3-8〉 화성시 재정지출 추이



주: 일반회계 결산 기준, 예비비 및 기타 분야 제외

〈표 3-9〉 유사 자치단체 사회복지비 지출 현황(2019)

자치단체 (백만원)	사회복지분야결산액	세출결산액	사회복지비 비율
	(A)	(B)	(A/B)x100
경기분청	8,600,459	23,912,432	35.97
수원시	989,683	2,484,249	39.84
성남시	901,379	2,343,280	38.47
고양시	881,244	2,120,290	41.56
용인시	776,516	2,270,270	34.2
화성시	714,148	2,225,600	32.09

주: 일반회계 세출결산액 기준, 유사 5개 자치단체 비교

수원시 일반회계 세출결산 추이는 2019년 기준 2016년 이후 근 4년래 연평균 10.02% 규모의 증가 추이를 나타내고 있다.

교육분야 지출의 경우 전년대비 두 배 가량 지출 규모가 증가하며 최근 4년래 연평균 36.81% 증가하였다. 동일 기간 지출 규모가 확대된 분야는 교육분야 외에 국토·지역개발분야에서 연간 22.44% 증가하였으며 사회복지분야 13.93%, 환경보호분야 13.24%, 공공질서·안전 11.13% 순으로 나타난다.

수원시 재정분야 중 지출규모가 가장 크게 감소한 분야는 문화 및 관광분야로 행사, 축제 등에서의 예산 감축으로 동일기간 연 평균 3.25% 감소하였다. 농림해양수산분야에서도 2.2% 감소한 것으로 확인된다.

〈표 3-10〉 수원시 일반회계 세출결산 분야별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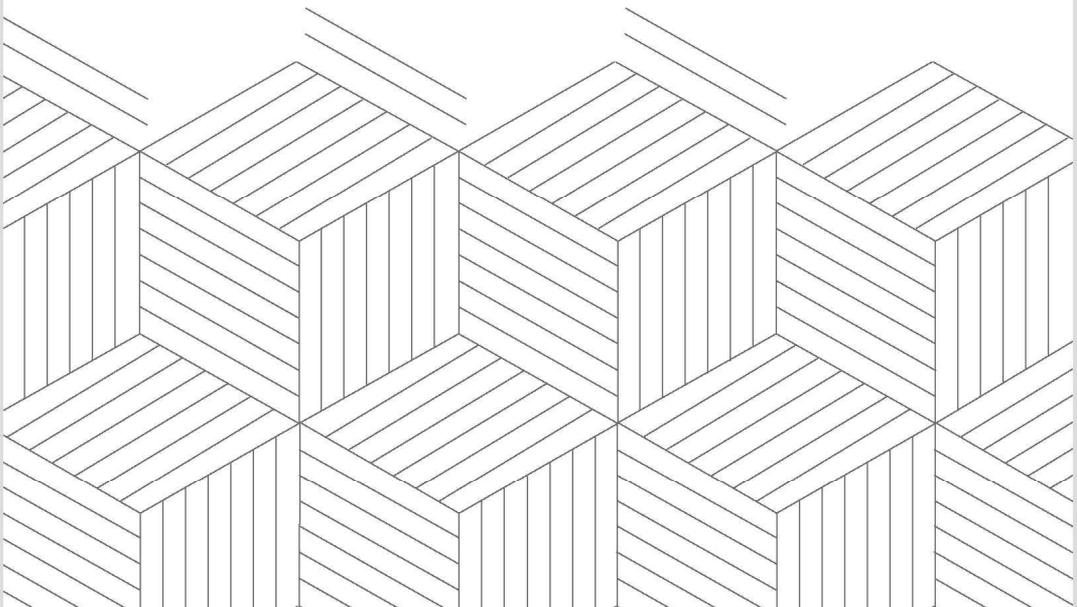
(단위 : 백만 원, %)

연도 분야별	2016		2017		2018		2019		연평균 증가율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합 계	1,873,215	100	1,938,421	100	2,113,739	100.00	2,484,249	100	10.02
일반공공행정	149,380	7.97	128,116	6.61	130,094	6.15	163,931	6.6	4.44
공공질서·안전	18,469	0.99	20,383	1.05	15,379	0.73	22,698	0.9	11.13
교육	38,437	2.05	33,592	1.73	41,390	1.96	82,710	3.3	36.81
문화 및 관광	195,820	10.45	190,459	9.83	189,178	8.95	177,157	7.1	-3.25
환경보호	113,470	6.06	114,206	5.89	126,889	6.00	162,375	6.5	13.24
사회복지	672,877	35.92	707,153	36.48	814,009	38.51	989,683	39.8	13.93
보건	41,367	2.21	41,827	2.16	42,198	2.00	46,754	1.9	4.27
농림해양수산	51,093	2.73	48,028	2.48	57,712	2.73	46,272	1.9	-1.89
산업·중소기업	35,396	1.89	29,468	1.52	44,736	2.12	30,471	1.2	1.06
수송 및 교통	201,018	10.73	247,594	12.77	234,908	11.11	237,743	9.6	6.42
국토·지역개발	136,838	7.30	136,205	7.03	152,762	7.23	237,719	9.6	22.44
과학기술	0	0	0	0	0	0	0	0	0
예비비	0	0	0	0	0	0	0	0	0
기타	219,051	11.69	241,390	12.45	264,487	12.51	286,730	11.5	9.39

자료: 일반회계 세출결산액기준

# 제4장 데이터 및 연구 모형

제1절 실증분석 데이터  
제2절 연구 모형





## 제4장 데이터 및 연구 모형

### 제1절 실증분석 데이터

실증분석은 전국 데이터와 수원시 및 주요 지방자치단체 데이터 두 가지 샘플로 구분지어 진행한다. 연구의 방향성을 고려해 유사한 데이터 그룹을 활용하였으며 데이터의 규모와 레벨, 상대적 유사성을 감안해 전국과 지방자치단체를 구분해 실증분석하였다. 전국 데이터는 시계열 자료를, 수원시 및 주요 지방자치단체 데이터는 동일기간 패널자료를 구축해 활용하였다.

#### 1. 전국 데이터

전국데이터는 2006년부터 2019년까지 지니계수 추정치와 중앙정부 총 지출(재정지출), 사회복지분야 지출, 총 세수, GDP의 연간 데이터를 활용하였다. 물가변동을 반영하기 위해 지니계수를 제외한 각 변수는 소비자물가지수(CPI, 2015=100)로 실질화 해 활용하였다.

지니계수 추정은 한국노동패널 9차~22차 년도(2006년~2019년) 데이터를 활용해 추정하였으며 추정을 위한 가구소득은 근로소득과 배당금 및 이자로 구성된 금융소득, 부동산소득, 사적·공적이전소득을 모두 합산한 총 시장소득을 기준으로 하였다. 총 소득은 세후 가치분 소득 기준이며 가구원수에 따른 균등화 가구소득으로 환산해 분석을 진행하였다. 지니계수 추정에 관련한 세부적인 내용 및 결과는 다음 장에 설명되어 있다.

총 세수데이터는 일반회계 결산세입데이터를 활용하였다.

각 데이터별 단위근 검정결과 모든 변수에서 단위근이 확인되어 로그차분한 증가분 데이터를 이용하였다. 단위근 검정을 위해 ADF-test(Augmented Dickey-Fuller 검정)를 실시하였다.

〈표 4-1〉 전국 데이터 단위근 검정 결과

HO	Statistic	Prob.*
GDP has a unit root	-0.213023	0.9143
G_SPEN has a unit root	0.671433	0.9857
TAX_REV has a unit root	0.137064	0.9556
G_SOCIAL has a unit root	-1.189962	0.6443
GINI_COEF has a unit root	-1.402355	0.548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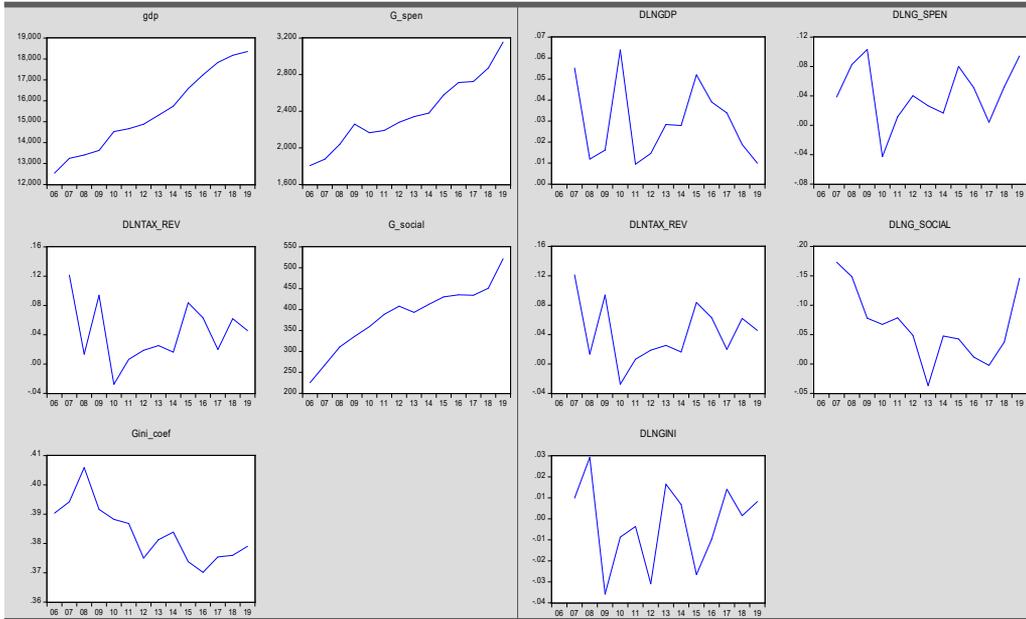
주: 레벨 변수의 단위근 검정결과로 GDP는 총생산, G\_SPEN은 재정지출(중앙정부 총 지출), TAX\_REV는 총 세수(일반회계 결산세입), G\_SOCIAL은 사회복지분야 총지출, GINI\_COEF는 지니계수 의미

〈그림 4-1〉은 각 변수별 레벨 및 차분 시계열데이터 추이를 나타내고 있다. 레벨그래프인 경우 실질화 처리 이후의 추세이다. 레벨 데이터 기준 지니계수를 제외하고 단기간 조정은 있으나 전반적인 증가 추이를 보이고 있다. 특히 최근 2년 동안 완만한 GDP 증가 추이 대비 정부지출 및 사회복지분야 지출, 총 세수의 가파른 증가 추이가 확인된다. 지니계수의 경우 2016년 최저점을 기록한 이후 최근 3년간 증가 추이가 나타나고 있다.

오른쪽 칼럼의 차분 추이를 보면 GDP 성장률은 2016년 이후 하락 추이를 나타내고 있으며 정부지출 및 사회복지분야 지출부분은 급격한 증가세가 확인된다. 총세수 증가율은 등락을 거듭하고 있으나 일정 규모 선에서 유지되고 있으며 지출 증가 추이에도 불구하고 2019년 증가율은 하락한 것으로 나타난다. 지니계수 증가율은 최근 증가세를 보이며 소득격차 확대 추이를 나타내고 있다.

〈그림 4-1〉 전국 레벨(좌) 및 차분(우) 데이터 시계열 추이

(단위: 백만원, %)



주1: GDP는 총생산, G\_SPEN은 재정지출(중앙정부 총 지출), TAX\_REV는 총 세수(일반회계 결산세입), G\_SOCIAL은 사회복지분야 총지출, GINI\_COEF는 지니계수 의미, 지니계수 외 실질데이터

주2: DLNGDP는 총생산 변화율, DLNG\_SPEN은 재정지출(중앙정부 총 지출) 증가율, DLNTAX\_REV는 총 세수(일반회계 결산세입) 변화율, DLNG\_SOCIAL은 사회복지분야 총지출 변화율, GINI\_COEF는 지니계수 변화율을 의미

## 2. 수원시 및 유사규모 자치단체 데이터

지니계수 추정을 위한 데이터는 국내 데이터와 마찬가지로 한국노동패널 9차~22차년도(2006년~2019년) 데이터를 활용하였다. 대상지역은 수원시를 포함해 수원시와 유사한 규모 지방자치단체인 성남시, 용인시, 화성시, 고양시 총 5개 지역으로 각 지역 가구소득 데이터를 추출해 분석하였다.

가구소득 기준은 근로소득과 배당금 및 이자로 구성된 금융소득, 부동산소득, 사적·공적이전소득을 모두 합산한 총 시장소득을 기준으로 하였으며 가구원수에 따른 균등화 가구소득으로 환산하여 분석에 활용한다.

지역별 지니계수(GINI\_COEF) 추정자료 외에 각 지자체별 세입결산액 총계 기준 일반회계 지방세 수입(LOCALTAX\_REV), 일반회계 세출결산액(G\_EXPEN), 사회복지분야 세출결산액(G\_SOCIAL), GRDP 데이터를 활용하였다. 통계수집방법에 변화가 있기 전 2006년과 2007년 사회복지분야 지출규모는 사회개발비 항목을 적용해 추정하였다. 각각의 데이터는 2006년부터 2019년까지 연간데이터를 활용하였으며 GRDP의 경우 발표지연으로 2018

년까지 데이터가 이용되었다. 지역별 물가 데이터 확보의 어려움으로 지방자치단체 데이터는 명목데이터를 활용하였다.

화성시 데이터의 경우 지니계수 수치가 비현실적인 값이 확인됨에 따라 현황분석에는 사용하였으나 추정의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 실증분석시 제외해 4개 지역 데이터만을 기준으로 분석을 진행한다.

상수항과 추세를 포함하지 않는 ADF-Fisher (Augmented Dickey-Fuller Fisher) 테스트 결과 모든 변수에서 단위근이 확인되어 각 변수들을 로그차분 후 활용하였다.

〈표 4-2〉 지방자치단체 데이터 단위근 검정 결과

HO	Statistic	Prob.*
G_EXPEN has a unit root	0.08278	1.0000
G_SOCIAL has a unit root	0.98947	0.9983
GINI_COEF has a unit root	6.51721	0.5895
GRDP has a unit root	0.14040	1.0000
LOCALTAX_REV has a unit root	0.14040	1.0000

주: 레벨 변수의 단위근 검정결과로 G\_EXPEN은 지방정부 총지출, G\_SOCIAL은 사회복지분야 총지출, GINI\_COEF는 지니계수, GRDP는 지역총생산, LOCALTAX\_REV는 지방세수입 의미

〈그림 4-2〉는 지방자치단체별 각 변수의 레벨(좌) 및 차분변수(우)의 시간 변화별 추이를 나타내고 있다.

먼저 각 지역 지니계수의 경우 2019년 기준 용인시가 가장 낮게 나타나고 있으나 레벨 및 차분 변수 모두에서 연간 변화가 가장 크게 나타나고 있어 소득 불평등 정도가 외부 환경 변화 등에 따라 급격히 변화한다는 것을 시사하고 있다.

지방정부 총 지출의 경우 전 지역에서 전반적으로 상승추이를 나타내고 있으며 2019년 기준 수원시가 가장 많은 2조 4,842억 원, 나머지 지역의 경우 2조 3천~1천억 원 규모를 보이고 있다. 시계열 전체적으로 총 지출 규모가 가장 낮은 지역은 고양시로 확인된다.

사회복지분야 지출의 경우 2008년 통계기준이 변화된 이후 4개 지역 모두에서 꾸준한 상승 추이를 보이고 있으며 변화 추이 역시 4개 지역에서 유사한 변동성을 보이고 있다. 2019년 기준 사회복지분야 지출액이 가장 큰 지역은 수원시로 9,897억 원을 기록하고 있으며 다음으로 성남시, 고양시, 용인시 순을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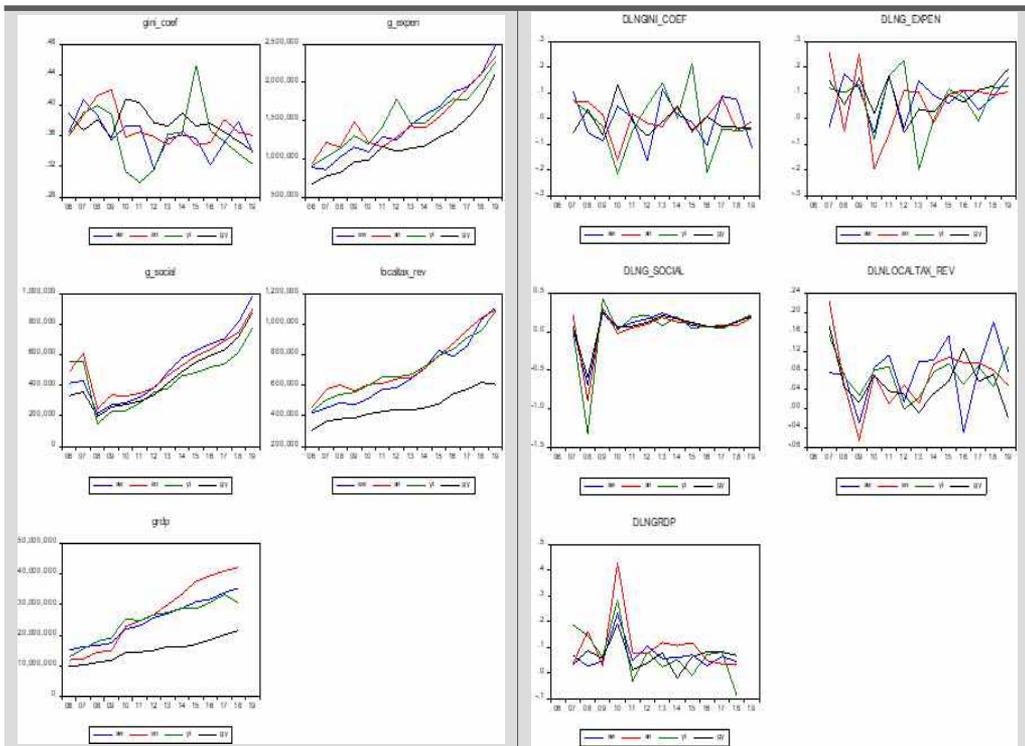
지방세수는 고양시를 제외한 3개 지역에서 유사한 추이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2019년 규모 역시 유사한 수준을 보이고 있는 반면 고양시의 경우 증가 추이가 3개 지역 대비 낮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2019년 타 지역 대비 절반 수준 규모를 나타낸다.

GRDP 역시 전반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가장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는 지역은 성남시로 2018년 42조 3천억 원을 기록하고 있다.<sup>5)</sup> 다음으로 수원시(35조 4천억 원), 용인시(30조 5천억 원), 고양시(21조 5천억 원) 순을 보인다. 고양시는 대상 기간 전체적으로 4개 지역 중 가장 낮은 규모를 유지하고 있으며 2019년 기준 성남시의 50% 수준에 그치고 있다.

고양시의 경우 낮은 지방세수입, GRDP 규모에도 불구하고 총 지출 및 사회복지분야 지출이 상대적으로 높은 특징을 보이고 있다.

〈그림 4-2〉 지방자치단체 레벨(좌) 및 차분(우) 데이터 시계열 추이

(단위: 백만원, %)



주1: G\_EXPEN은 지방정부 총지출, G\_SOCIAL은 사회복지분야 총지출, GINI\_COEF는 지니계수, GRDP는 지역총생산, LOCALTAX\_REV는 지방세수입 의미, 명목데이터 활용

주2: DLNG\_EXPEN은 지방정부 총지출 변화율, DLNG\_SOCIAL은 사회복지분야 총지출 변화율, DLNGINI\_COEF는 지니계수 변화율, DLNGRDP는 지역총생산 증가율, DLNLOCALTAX\_REV는 지방세수입 변화율을 의미

5) 화성시를 포함한 5개 시 기준의 경우 화성시가 2018년 77조 7천억 원으로 기타 4개 지역 대비 월등히 높은 수준을 보인다.

### 3. 한국노동패널조사(Korean Labor & Income Panel Study, 이하 KLIPS)

우리나라 노동시장 전국조사로는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조사, 고용 구조 특별조사, 노동부의 노동력유동실태조사, 임금구조 기본통계조사를 들 수 있다. 이러한 조사들은 일정시점 수준의 횡단면적(cross-sectional)조사로 동태적 측면의 개인의 경제활동참여나 노동시장 이동, 소득과 소비패턴의 변화를 분석하는데 한계가 있었다. 정책의 수립과 실행 및 평가를 위한 대표성 있는 각종 노동시장 관련 기초자료의 조사가 부재하고 개별수준보다는 기업수준의 조사가 많은 편이었으며, 개인의 특성과 의사결정에 바탕을 둔 미시적이고 동태적인 차원의 노동시장의 이해가 부족하고 정책결정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한계가 발견되었다. 또한 다른 나라들과의 비교분석이 가능한 노동시장 자료가 부재하였다.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일환으로 1998년 노동시장과 고용정책의 수립과 평가에 기여하기 위해 한국노동패널조사를 실시하게 되었다. 한국의 약 5,000 가구에 거주하는 가구원을 대상으로 1년 1회 경제활동을 비롯하여 노동시장의 이동과 소득과 소비, 교육 및 직업 훈련, 사회생활 등을 종단면 조사(longitudinal survey)한다. 개인의 장기간 변화 및 상태, 이동과정을 파악할 수 있어 횡단면에서 불가능한 정책연구나 평가가 가능한 장점이 있다. 또한 청소년들의 노동시장 진입이나 이동, 실업자들의 재취업, 장기실업, 실업급여의 재취업효과, 개인 의식의 변화, 노사관계, 육아장려금, 주부의 경제활동 등 노동시장에 관련된 패널데이터 분석이 가능한 자료이다.

표본 형태는 1998년 첫 조사시 구축한 98표본, 2009년, 2018년에 표본을 추가한 09통합표본, 18통합표본 3가지 형태로 구성되어 있다.

98표본은 1998년 최초 패널구축 당시 응답한 가구인 5,000가구이며 모집단은 도시에서 거주하는 가구와 15세 이상 개인을 대상으로 하였다. 제주도와 병역의무이행자, 시설거주가구(원)은 조사대상에서 제외되었다.

2009년 추가표본 추출은 패널 이탈로 인한 표본 마모와 도시 가구 표집에 의한 대표성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전국 가구로 확장하여 추가하였다. 따라서 모집단을 2009년 3월 현재 대한민국(제주도 포함) 내의 일반 가구에 거주하고 있는 가구원으로 확장하였다. 표본추출결과 09통합표본은 총 6,721가구가 구축되었는데 2009년(12차년도) 기존 조사대상가구(98원표본+98표본분가가구) 중 당해연도 응답가구인 5,306가구와 2009년 추가 표집된 가구인 1,415가구가 추가되었다.

2018년 20년 동안 진행된 조사기간 동안 표본이탈의 문제 등으로 표본이 모집단을 반영하지 못하는 한계를 극복하고자 2017년과 2018년에 걸쳐 표본 추가가 이루어졌다. 이에 따라 18통합표본은 총 12,134가구로 구축되었다. 모집단은 2016년 11월 현재 대한민국 영토(제

주도 포함) 내의 일반 가구에 거주하고 있는 가구원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기존 조사대상가구 (09통합원표본+09통합분가가구+09통합표본에 포함되지 않는 98표본) 중 당해연도 응답가구인 7,090가구와 2018년 추가 표집된 가구인 5,044가구를 추가해 구성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09통합표본과 18통합표본이 활용되었다.

## 제2절 연구 모형

정부 및 지방재정지출이 소득격차 해소에 미치는 영향 분석의 기본 틀은 한국노동패널 데이터를 활용해 산출한 지역별 지니계수 변화에 지방정부지출, 사회복지분야 지출, 지방세수입, GRDP 변화가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가를 확인하기에 적합한 모형의 선택에 있다. 특히 장기, 단기영향을 비롯해 각 변수별 상호간의 영향이 반영된 동태분석을 통해 분석의 정확도를 높이고자 노력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패널데이터를 구축해 패널의 특성과 장·단기 영향을 확인할 수 있는 패널시차분포모형(패널 ARDL) 및 변수간 영향을 반영해 분석할 수 있는 (패널)SVAR 모형을 활용해 분석하였다. 한국 데이터의 경우 패널 SVAR분석을 수행하였으며 수원시를 비롯한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패널시차분포모형 분석을 수행하였다. 지자체 데이터 역시 한국 데이터와 동일하게 패널 SVAR분석을 수행하였으나 결과 리포트는 예측오차분산분해(FEVD) 부분을 중심으로 작성하였다.

### 1. 패널 시차분포 모형(패널 ARDL; Auto Regressive Distributed Lag)

패널 ARDL 모형은 변수간 상관관계의 장·단기 영향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이 특징으로 기본 OLS모형의 설명변수에 종속변수와 설명변수의 이전기(t-1) 변수를 포함해 추정이 이루어진다.

시차결정과정(AIC 및 SC 방식을 통해)에서 1차 래그가 최적인 것으로 확인되어 기본 패널 OLS모형에 1차 시차를 부가한 ARDL(1,1,1,1,1) 추정을 수행하였다. Durbin-Watson 검증 결과 2에 가까운 2.341로 확인되어 오차항에 자기상관성 없음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에 이용된 패널 ARDL 모형은 다음과 같이 구성된다

$$\Delta Y_{it} = \alpha + \underbrace{\sum_{i,j=1}^{k,n} \beta_1 \Delta Y_{it-j}}_{\text{[단기]}} + \underbrace{\sum_{i,j=1}^{k,n} \beta_2 \Delta X_{it-j} + \phi_1 Y_{t-1} + \phi_2 X_{t-1}}_{\text{[장기]}} + u_{it} \quad \dots(1)$$

$Y_{it}$  = 지역별 지니계수 변화

$X_{it}$  = 지방재정지출 변화, 사회복지분야지출 변화, 지방소득세율변화, GRDP 성장

$i$  = 4개 유사규모 자치단체(수원시, 성남시, 용인시, 고양시)

$\beta_{1,2}$  = 단기동태영향,  $\phi_{1,2}$  = 장기동태영향

$u_{it}$  = 오차항

이때 사용 중인 기본 변수가 이미 차분이 이루어져 있어 본 모형의 레벨변수 자체가 차분 변수다. 즉 단기 동태성 부분은 증가율의 변화, 장기 동태성 부분은 각 변수의 이전기(t-1) 증가율이 변수로 반영되는 차분 ARDL 형태로 분석이 이루어졌다.

## 2. SVAR(Structural VAR) 모형

전국 데이터 분석에 이용한 SVAR모형은 다음과 같은 일반화된 형태를 적용한다.

$$AX_t = BX_{t-1} + u_{it} \quad (2)$$

$X_{it}$  = 각 지자체별 지니계수 변화, 지방재정지출 변화, 사회복지분야지출 변화, 지방소득세 수 변화, GRDP 성장

VAR분석은 각 변수가 종속변수와 설명변수에 포함되어 변수 상호간 미치는 동태적 영향이 반영된 분석이 이루어지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기본 VAR분석에 부호제약, 제로(0) 제약 등을 부가해 비선형 모형의 음(-)의 충격에 따른 동태적 영향, 장기 동태 영향 등을 분석할 수 있는 모형이 SVAR모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변수간 영향과 장기적인 영향을 확인하기 위해 0제약을 부가한 SVAR모형을 통한 분석을 수행한다.

적용 시차는 LR test(sequential modified LR test statistic), AIC 테스트 등의 결과 95% 유의수준 하에서 1차 시차가 최적 차수로 확인됨으로써 1차 시차를 적용하였다.

변수순서(order)는 Granger Causality 검증결과 및 연구의 방향성을 고려해 총 세수, 정부지출, GDP, 사회복지분야 지출, 지니계수 순으로 적용하였다. 변수순서와 장기 제약에 따라 각 변수별 상호 영향성에 차이가 발생하게 되는데 이에 대한 설명은 장기 제로(0) 제약 부분에서 설명하고자 한다.

변수명은 이하 각각 총 세수(변화율)을 DLNTAX\_REV, 정부지출 (변화율)을 DLNG\_EXPEN, 총생산 (증가율)을 DLNGDP로, 사회복지분야 지출 (변화율)을 DLNG\_SOCIAL, 지니계수 (변화율)을 DLNGINI\_COEF로 표기한다.

〈표 4-3〉 Granger Causality 검증 결과

Pairwise Granger Causality Tests			
Null Hypothesis:	Obs.	F-statistic	Prob.
DLNG_SPEN does not Granger Cause DLNGDP	11	1.38336	0.3206
DLNGDP does not Granger Cause DLNG SPEN		0.39565	0.6896
DLNTAX_REV does not Granger Cause DLNGDP	11	1.61419	0.2748
DLNGDP does not Granger Cause DLNTAX_REV		0.45966	0.6520
DLNG_SOCIAL does not Granger Cause DLNGDP	11	0.00261	0.9974
DLNGDP does not Granger Cause DLNG SOCIAL		0.00830	0.9917
DLNG_SOCIAL does not Granger Cause DLNGDP	11	0.00261	0.9974
DLNGDP does not Granger Cause DLNG SOCIAL		0.00830	0.9917
DLNTAX_REV does not Granger Cause DLNG_SPEN	11	6.06963	0.0362
DLNG SPEN does not Granger Cause DLNTAX_REV		4.09636	0.0756
DLNG_SOCIAL does not Granger Cause DLNG_SPEN	11	1.64932	0.2687
DLNG SPEN does not Granger Cause DLNG SOCIAL		0.05299	0.9488
DLNGINI does not Granger Cause DLNG_SPEN	11	4.21759	0.0718
DLNG SPEN does not Granger Cause DLNGINI		0.20239	0.8221
DLNG_SOCIAL does not Granger Cause DLNTAX_REV	11	2.05087	0.2095
DLNTAX_REV does not Granger Cause DLNG SOCIAL		0.06331	0.9393
DLNGINI does not Granger Cause DLNTAX_REV	11	2.66491	0.1485
DLNTAX_REV does not Granger Cause DLNGINI		0.79932	0.4923
DLNGINI does not Granger Cause DLNG SOCIAL	11	0.76836	0.5046
DLNG SOCIAL does not Granger Cause DLNGINI		2.60955	0.1530
Summary of Granger Causality test			
GDP 변화	⇒		
정부지출 변화	⇒	세수 변화	
세수변화	⇒	정부지출 변화	
사회복지분야 지출 변화	⇒		
지니계수 변화	⇒	정부지출 변화	

주: DLNG\_EXPEN은 정부지출 (변화율), DLNGDP는 총생산 (증가율), DLNG\_SOCIAL은 사회복지분야 지출 (변화율), DLNTAX\_REV 총 세수입 (변화율), DLNGINI\_COEF는 지니계수 (변화율)을 의미

장기 제로(0) 제약은 상방삼각 장기 제약을 부가하여 장기적으로 해당 변수의 영향이 제로(0)로 수렴하도록 설정하였다. 이러한 제약을 통해 한 변수의 변화(충격)가 각 변수에 단기, 중기, 장기에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누적하여 확인할 수 있게 된다<sup>6)</sup>.

본 연구에서 장기제약의 의미는 먼저 총 세수의 경우  $d12=d13=d14=d15=0$  로 장기적으로 총 세수의 변화(충격)는 정부지출, GDP 변화, 사회복지분야 지출 변화, 지니계수 변화 모두에 영향을 미치는 반면 다른 변수들부터의 영향은 장기적으로 독립적(장기=0)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정부지출 변화의 경우 장기적으로 GDP 변화, 사회복지분야 지출 변화, 지니계수 변화에 영향을 주며 총 세수 변화의 영향만을 받는 것을 의미한다( $d23=d24=d25=0$ ). GDP 변화는 사회복지분야 지출, 지니계수 변화에 영향을 주며 총 세수와 정부지출 지출의 영향을 받는 것으로 제약되어 있다( $d34=d35=0$ ). 사회복지분야 지출의 경우 지니계수 변화에만 영

6) SVAR모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Yang et al(2019)에서 확인 할 수 있다.

향을 주며 나머지 변수들의 영향을 받는 것을 의미한다( $d_{45}=0$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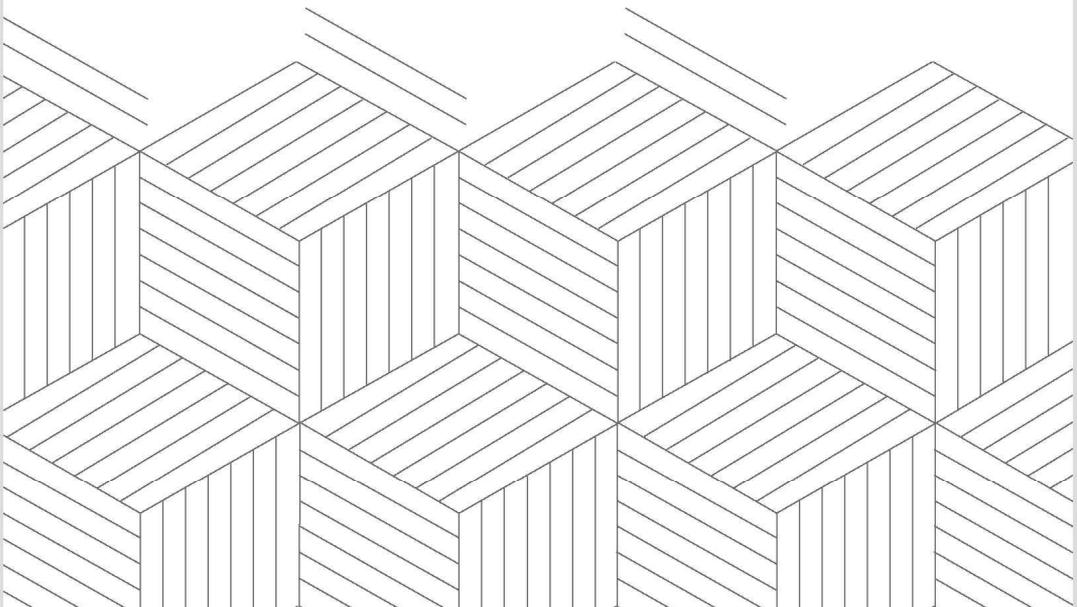
마지막으로 본 연구에서 확인하고자 하는 지니계수의 변화는 각각의 모든 변수로부터 영향을 받는 한편 지니계수 자체의 변화에만 영향을 미치도록 제약이 부가되어 있다.

$$\lim_{s \rightarrow \infty} \begin{pmatrix} \Delta \text{총세수}_{t+s} \\ \Delta \text{정부지출}_{t+s} \\ \Delta \text{GDP}_{t+s} \\ \Delta \text{사회복지분야지출}_{t+s} \\ \Delta \text{지니계수}_{t+s} \end{pmatrix} = D e_t = \begin{pmatrix} d_{11} & 0 & 0 & 0 & 0 \\ d_{21} & d_{22} & 0 & 0 & 0 \\ d_{31} & d_{32} & d_{33} & 0 & 0 \\ d_{41} & d_{42} & d_{43} & d_{44} & 0 \\ d_{51} & d_{52} & d_{53} & d_{54} & d_{55} \end{pmatrix} \begin{pmatrix} \varepsilon_t^g \\ \varepsilon_t^s \\ \varepsilon_t^t \\ \varepsilon_t^s \\ \varepsilon_t^{gn} \end{pmatrix}$$



# 제5장 지니계수 추정 및 소득격차

제1절 한국 지니계수  
제2절 수원시 및 유사규모 자치단체 지니계수





## 제5장 지니계수 추정 및 소득격차

지니계수의 추정은 데이터 부분에서 언급한 것처럼 한국노동패널조사(KLIPS) 9차(2006년)부터 22차(2019년) 데이터를 활용해 추정하였다.

한국 지니계수의 경우 통계청이 가계동향조사 소득과 가계금융·복지조사의 소득을 기준으로 산출한 결과를 공식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그러나 최제민(2016), 김낙년·김종일(2013) 등의 연구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가계동향조사 소득의 경우 상위 소득이 누락되어 있고 1인 가구 소득이 포함되지 않는 등 소득 데이터에 한계가 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2011년부터 추가적으로 실시한 가계금융·복지조사 소득 데이터의 경우 누적 시계열 정보가 충분하지 않아 지니계수 산출 후 다양한 분석에 활용하기 어려운 점이 있다. 또한 가계동향조사와 가계금융·복지조사의 경우 지역 구분이 가능하지 않아 수원시 등 지역별 분석에 적합하지 않은 한계를 갖는다.

가계조사가 가지고 있는 이러한 한계점들을 개선하기 위해 기존 도시가계조사에서 놓여진 가구를 추가하거나 연간화, 균등화 처리, 1인가구 표본 추가, 소득결과를 행정자료로 보완하는 등 점진적 개선이 이루어진 것은 사실이다. 한국노동패널조사자료 역시 일반적인 가계조사의 한계성을 가지고 있는 것을 부인할 수 없다. 그러나 Goldberg·Pavcnik(2007), 홍민기 외(2015), 최제민(2016) 등 상당수의 연구에서 이러한 문제점에 있어 노동패널조사가 상대적으로 덜 심각하며 기존 가계동향조사 등의 문제가 보완된 개선된 조사로 평가하고 있다. 특히 한국노동패널조사의 경우 기초자치단위 지역의 소득을 구분해 확인 가능한 장점이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한국노동패널조사(KLIPS) 소득자료를 활용해 한국지니계수와 수원시 및 유사규모 자치단체 지니계수를 추정하고 소득원천별 지니계수 분해분석을 실시한다. 노동패널자료는 9차(2006년)부터 22차(2019년) 소득 데이터가 이용되었다.

지니계수의 추정은 STATA 통계 패키지를 활용해 수행하였다.

## 제1절 한국 지니계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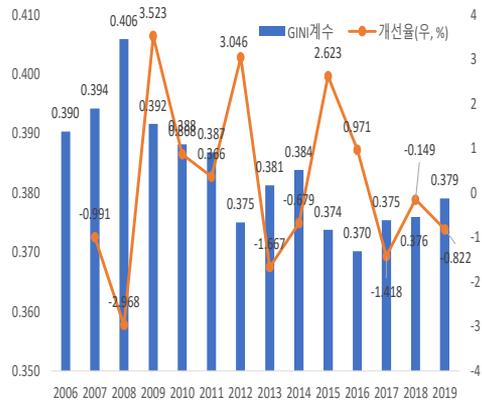
### 1. 지니계수

한국 지니계수는 2019년 기준 0.379로 전년대비 0.003p 증가하며 0.822% 악화된 것으로 확인된다. 전 기간 평균 0.384 보다는 개선되었으나 2017년 이후 최근 3년래 지속적인 증가 추이를 보이고 있다.<sup>7)</sup> ‘소득격차 보통’으로 해석할 수 있는 수준으로 영국(0.366), 미국(0.390), 성남시(0.360) 등과 동일한 평가단위에 속하고 있으나 ‘소득격차가 높은 편’으로 해석되는 0.4 바로 이전 단계에 해당한다. 코로나19 영향이 나타난 2020년 이후 국내 소득격차가 더 확대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어 소득격차 해소를 위한 정책적 노력이 필요해 보인다. 가계동향복지조사 소득 데이터로 추정한 통계청 지니계수(0.339)보다 0.040p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표 5-1〉 한국 지니계수 및 개선율

구분	한국 GINI계수	개선율(우, %)
2006	0.390	
2007	0.394	-0.991
2008	0.406	-2.968
2009	0.392	3.523
2010	0.388	0.868
2011	0.387	0.366
2012	0.375	3.046
2013	0.381	-1.667
2014	0.384	-0.679
2015	0.374	2.623
2016	0.370	0.971
2017	0.375	-1.418
2018	0.376	-0.149
2019	0.379	-0.822

〈그림 5-1〉 한국 지니계수 및 개선율



주: 개선율은 -(전년대비 증가율), 지니계수는 낮을수록 개선율은 높을수록 격차가 개선되었음을 의미

### 2. 소득원천별 지니계수 분해

Lerman·Yitzhaki(1985) 방식의 지니계수 분해방법이 적용되었으며 각 소득원천별 전체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 $S_k$ ), 해당소득 지니( $G_k$ ), 총 소득 내 해당소득 지니상관계수( $R_k$ ), 해당소득의 불평등 기여도(합=1, Share), 각 소득이 1% 증가할 때 지니계수의 % 변화(%)

7) 가계금융·복지조사를 활용해 산출한 통계청 GINI 계수의 경우 최근 3년 지니계수가 하락하는 추이를 보인다.

change, 한계효과)를 확인할 수 있다. 2019년 지니계수를 대상으로 분석하였다.

전체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 $S_k$ )은 근로소득이 93%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이 전소득(0.04%), 부동산소득(0.02%), 금융소득(0.004%) 순의 규모를 보이고 있다.

해당소득이 소득 불평등에 기여하는 정도(share)를 중심으로 살펴보면 근로소득을 제외할 경우 부동산 소득(0.0376)이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며 이전소득(-0.0206) 기여도가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난다. 이전소득 기여도는 음(-)의 방향성을 보이고 있어 소득불평등을 낮추는데 기여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소득원천별 한계 효과를 나타내는 % change는 양(+)의 부호일 경우 해당 소득의 변화가 지니계수를 높이는 부정적인 역할을 하는 것을 의미하며 음(-)의 부호일 경우 해당 소득의 변화가 지니계수를 낮추는 긍정적인 역할을 의미하게 된다. 따라서 한국 근로소득과 부동산 소득의 경우 지니계수를 높여 국내 소득 불평등을 확대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반면 금융소득과 이전소득은 국내 소득격차를 낮추는 긍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표 5-2〉 한국 소득원천별 지니계수 분해

Source	Sk	Gk	Rk	share	% Change
inc_labor	0.9296	0.3839	0.9795	0.9614	0.0318
inc_fin	0.0037	0.9515	0.3062	0.003	-0.0007
inc_est	0.023	0.9751	0.6088	0.0376	0.0146
inc_tran	0.0437	0.7842	-0.0206	-0.0019	-0.0457

Sk : 소득원천별 전체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

Gk : 해당 소득 지니

Rk : 총 소득 내 해당 소득 지니상관계수

Share : 해당 소득의 불평등 기여도 (합= 1)

% Change 각 소득이 1%증가할 때 지니계수의 % 변화, 한계효과  
2019년 기준

## 제2절 수원시 및 유사규모 자치단체 지니계수

### 1. 지니계수

수원시를 비롯한 유사규모 자치단체 지니계수는 한국지니계수보다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으며 전반적으로 불평등 정도가 개선되는 추이를 보인다.

수원시 지니계수는 2019년 기준 0.338로 산출되는데 같은 기간 한국 지니계수는 0.379로 국내 기준 상대적으로 건전한 상황인 것으로 평가된다. 성남시, 고양시, 화성시, 용인시 역시 각각 0.360, 0.340, 0.218, 0.323으로 나타나 불평등 정도가 상대적으로 양호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화성시 지니계수의 경우 전체 기간 전반적으로 낮은 규모를 보이고 있는데 ‘소득격차가 대단히 적고’ 거의 ‘완전 평등’ 수준의 결과로 샘플의 오류로 판단된다. 따라서 화성시의 경우 지니계수 현황을 확인해 보았다는데 이의를 두고 앞으로 진행되는 분석에서는 제외하고자 한다.

2019년 수원시 지니계수 0.338은 ‘소득격차가 적은 편’에 해당하는 결과로 2018년 0.379 대비 0.041p 하락하였다. 또한 전기간 평균 0.360 ‘소득격차 보통’ 수준 대비로도 0.022p 하락하는 등 전반적으로 소득불평등 정도가 개선된 것으로 확인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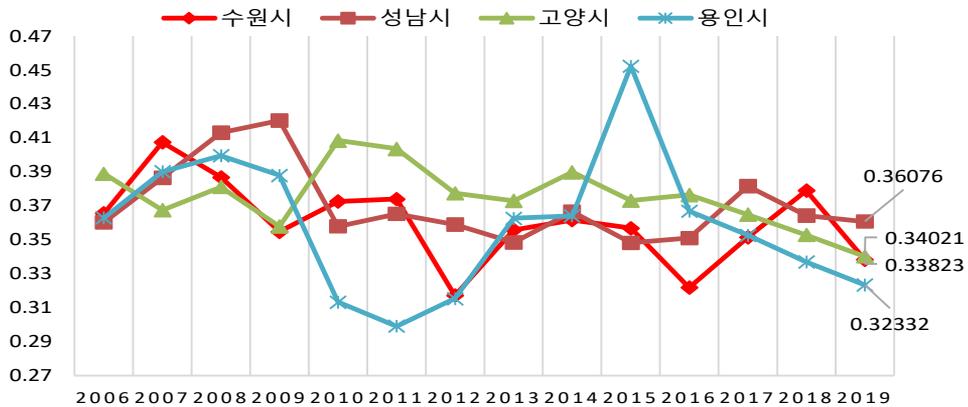
화성시를 제외한 4개 지역 중 전 기간 평균 소득격차가 가장 크게 나타나는 지역은 고양시(0.375)이며 가장 낮은 지역은 용인시(0.323)로 확인된다. 2019년 기준으로는 성남시(0.361)가 가장 높게 나타난다.

〈표 5-3〉 주요 자치단체 GINI 계수 추정 결과

구분	수원시	성남시	고양시	화성시	용인시
2006	<b>0.36556</b>	0.36030	0.38893	0.22721	0.36289
2007	<b>0.40742</b>	0.38649	0.36750	0.19585	0.39000
2008	<b>0.38686</b>	0.41301	0.38105	0.17875	0.39945
2009	<b>0.35475</b>	0.42016	0.35786	0.20252	0.38788
2010	<b>0.37257</b>	0.35793	0.40845	0.27351	0.31325
2011	<b>0.37399</b>	0.36528	0.40352	0.23454	0.29914
2012	<b>0.31721</b>	0.35897	0.37741	0.17356	0.31531
2013	<b>0.35576</b>	0.34836	0.37290	0.22957	0.36265
2014	<b>0.36163</b>	0.36644	0.38984	0.24162	0.36405
2015	<b>0.35681</b>	0.34819	0.37312	0.25863	0.45218
2016	<b>0.32179</b>	0.35097	0.37638	0.22586	0.36685
2017	<b>0.35148</b>	0.38163	0.36479	0.22058	0.35266
2018	<b>0.37898</b>	0.36429	0.35290	0.20397	0.33687
2019	<b>0.33823</b>	0.36076	0.34021	0.21782	0.32332
평균	<b>0.36022</b>	0.3702	0.37535	0.22029	0.35904

시계열 추이를 보면 전반적으로 등락을 거듭하고 있으나 한국지니계수가 상승추이를 보인 것과 달리 최근 3년래 하락 추이를 보이고 있다(수원시 증가 후 하락). 용인시의 경우 등락 폭에 급격한 변화를 보이고 있어 지역 소득 격차가 정책변화 및 대·내외 환경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지역인 것으로 보여진다.

〈그림 5-2〉 주요 자치단체 GINI 계수 추이



개선율 측면에서는 2019년 기준 4개 지역 모두 전년대비 소득격차 개선이 이루어진 것으로 확인된다. 수원시의 경우 전년대비 10.75%(0.041p)로 가장 크게 개선이 이루어졌으며 성남시 0.97%, 고양시 3.60%, 용인시 4.02% 등의 개선율을 보인다.

전 기간 평균 기준으로는 수원시와 고양시, 용인시에서만 격차가 완화된 것으로 확인되며 성남시의 경우 격차가 악화된 것으로 나타난다(-0.2%). 개선율은 -(전년대비 증가율)로 산출하였으며 지니계수는 낮을수록 소득격차 개선율, 개선율은 높을수록 격차가 개선되었음을 의미한다.

〈그림 5-3〉 주요 자치단체 GINI 계수 추이 및 개선율



주: 개선율은 -(전년대비 증가율), 지니계수는 낮을수록 개선율은 높을수록 격차가 개선되었음을 의미한다.

## 2. 소득원천별 지니계수 분해

전반적으로 전체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 $S_i$ )은 근로소득이 93%에서 99%대를 차지하고 있다. 나머지 소득은 규모의 차이는 있으나 4개 지역 모두 이전소득, 부동산소득, 금융소득 순의 비중을 나타낸다.

### 1) 수원시

해당소득이 소득 불평등에 기여하는 정도(Share)를 중심으로 살펴보면 수원시의 경우 근로소득을 제외할 경우 부동산 소득(0.0261)이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며 금융소득(0.0023) 기여도가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난다.

이러한 결과는 소득원천별 한계 효과를 나타내는 % change를 통해서도 동일한 결과가 확인된다. % change가 양(+)의 부호일 경우 해당 소득의 변화가 지니계수를 높이는 부정적인 역할을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수원시의 경우 근로소득과 부동산 소득이 높아질 경우 지역 소득격차가 확대되는 것으로 확인된다. 반면 수원시 금융소득 및 이전소득의 증가는 지역 소득격차를 낮추는 긍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표 5-4〉 수원시 소득원천별 지니계수 분해

Source	Sk	Gk	Rk	share	% Change
inc_labor	0.935	0.3748	0.981	0.9645	0.0294
inc_fin	0.0043	0.9489	0.1986	0.0023	-0.0020
inc_est	0.0192	0.9686	0.4996	0.0261	0.0069
inc_tran	0.0414	0.8146	0.075	0.0071	-0.0343

Sk : 소득원천별 전체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

Gk : 해당 소득 지니

Rk : 총 소득 내 해당 소득 지니상관계수

share : 해당 소득의 불평등 기여도 (합= 1)

% Change 각 소득이 1%증가할 때 지니계수의 % 변화, 한계효과

2019년 기준

이하 3개시 동일하게 적용

## 2) 성남시

성남시 역시 수원시와 유사한 소득구조를 보인다. 4가지 소득원천 중 근로소득 외에 부동산소득(0.0276)이 소득 불평등 기여도가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이전소득의 경우는 음(-0.0514)의 값을 가지며 불평등을 해소하는 역할을 하는 것으로 확인된다. 마찬가지로 한계효과(% change) 역시 근로소득과 부동산 소득은 성남시 소득 불평등을 높이고 있는 반면 금융소득과 이전소득은 낮추는 긍정적인 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표 5-5〉 성남시 소득원천별 지니계수 분해

Source	Sk	Gk	Rk	share	% Change
inc_labor	0.9307	0.4306	0.9851	0.9729	0.0421
inc_fin	0.0049	0.9564	0.321	0.0037	-0.0012
inc_est	0.0238	0.9573	0.491	0.0276	0.0038
inc_tran	0.0406	0.8059	-0.0514	-0.0041	-0.0447

## 3) 고양시

고양시의 경우 수원시 및 성남시와 다소 다른 결과가 확인된다.

고양시 부동산 소득의 경우 소득 불평등(share) 기여도 비중이 높게 나타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계효과는 음(-)의 방향성을 나타내고 있다. 금융소득 역시 소득불평등 기여도 자체는 부동산 소득 대비 상대적으로 낮으나 한계효과는 양(+)의 방향성을 보인다. 이는 고양시 부동산

소득의 경우 소득 불평등을 낮추는 역할을 하고 있으나 2019년 현재 소득 불평등 기여도가 높아 향후 불평등을 악화시킬 여지가 있음을 시사한다. 금융소득은 비중은 낮으나 소득 불평등 기여도가 양(+)의 규모를 보이고 있으며 한계효과 역시 양(+)의 방향성을 보이고 있어 금융소득의 증가는 지역 소득격차를 확대시키는 요인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전소득은 수원시와 성남시와 동일하게 지역 소득 불평등을 낮추는 역할을 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표 5-6〉 고양시 소득원천별 지니계수 분해

Source	Sk	Gk	Rk	share	% Change
inc_labor	0.937	0.3666	0.9721	0.9797	0.0427
inc_fin	0.0035	0.955	0.3746	0.0037	0.0002
inc_est	0.018	0.963	0.331	0.0168	-0.0012
inc_tran	0.0415	0.7888	-0.0021	-0.0002	-0.0417

#### 4) 용인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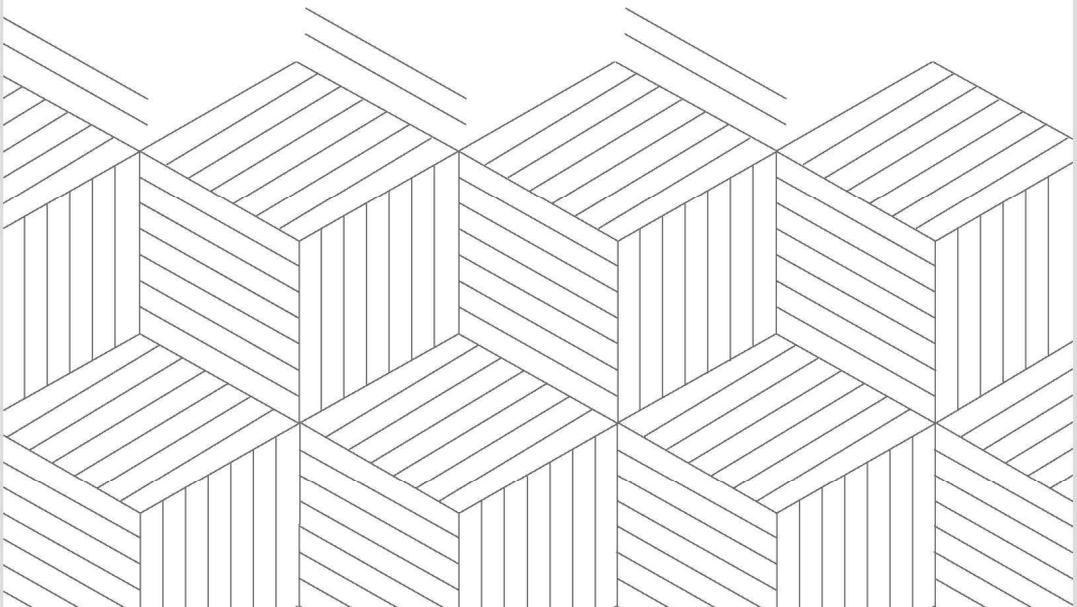
용인시는 4개시 대비 구분되는 결과를 보이고 있다. 불평등기여도(share) 및 한계효과(% change)에서 확인 할 수 있는 것처럼 용인시의 경우 근로소득만이 지역 소득격차를 확대시키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며 금융소득 및 부동산소득, 이전소득 모두 지니계수를 낮춰 지역 소득격차 완화에 긍정적인 역할을 하는 것으로 확인된다.

〈표 5-7〉 용인시 소득원천별 지니계수 분해

Source	Sk	Gk	Rk	share	% Change
inc_labor	0.9857	0.3146	0.9972	1.0248	0.039
inc_fin	0.0001	0.9909	-0.0836	0	-0.0001
inc_est	0.0021	0.9899	-0.3724	-0.0026	-0.0047
inc_tran	0.0121	0.9065	-0.6105	-0.0222	-0.0343

# 제6장 실증분석 결과

제1절 전국데이터  
제2절 지방자치단체 데이터





## 제6장 실증분석 결과

### 제1절 전국 데이터

전국 데이터는 장기제약이 부가된 SVAR분석을 통해 한 변수의 변화(충격)가 다른 변수에 미치는 장·단기 동태분석을 수행하였다. 상관계수분석, 충격반응분석, 예측오차 분산분해분석 등을 수행하였으며 충격은 특별한 부호제약을 지정하지 않은 상태로, 구조적 충격이 양(+)의 positive sign이 부가되어 있다. LM-test 결과 오차항간 상관성(serial correlation)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 1. 상관계수 분석

상관계수는 각 변수의 구조적 충격이 해당변수를 포함한 다른 변수들에 미치는 상호영향이 반영되어 있으며 본 연구에서는 장기제약을 통해 장기적인 누적 영향을 확인하고자 한다.

변수순서는 모형부분에서 언급된 것처럼 총 세수, 재정지출, GDP, 사회복지분야 지출, 지니계수 순으로 설정하였다.

먼저 총 세수의 확대(변화)는 정부지출을 유의한 수준에서 증가시키는 것으로 확인된다. 또한 지니계수를 90% 유의수준 하에서 증가시켜 국내 소득격차를 확대시키고 있다.

재정지출 확대는 국내 GDP 총생산 활동을 위축시키는 반면 사회복지분야 지출은 늘리는 것으로 확인된다. 지니계수 변화에는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 국내 재정지출이 국민 소득격차를 완화시키는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국내 GDP 증가는 사회복지분야 지출을 늘리고 지니계수를 낮추는 긍정적인 역할을 하는 것으로 확인된다. 즉 국내 GDP 1단위 증가는 지니계수를 0.67% 낮춰 국내 소득격차를 완화시키고 있다. 사회복지분야 지출 확대는 지니계수를 낮추는 방향성이 나타나고 있으나 유의성은 없는 것으로 분석된다.

따라서 국내 재정지출 및 사회복지분야 지출의 확대는 장기적으로 소득격차 완화에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 반면 세수 증대는 지니계수를 높여 소득격차를 확대시키는 부정적 역할을 하는 것으로 평가된다. 이러한 결과는 국내 재정지출의 정책 방향성이 소득격차

완화에 적절히 전달되지 못하고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국내 변수의 경우 국내총생산(GDP) 확대만이 소득격차를 완화시키는 긍정적 역할을 하고 있다.

〈표 6-1〉 전국데이터 SVAR 상관계수

Type of shocks		Coefficient	Std. Error	z-Statistic	Prob.
Tax_rev (총세수)	To Tax_rev	0.050005	0.010207	4.898957	0.0000
	To G_spen	0.048497	0.011535	4.204270	0.0000
	To GDP	0.006865	0.004821	1.423912	0.1545
	To G_social	-0.005193	0.013363	-0.388619	0.6976
	To Gini_coef	0.008358	0.004489	1.861697	0.0626
G_spen (재정지출)	To G_spen	0.020511	0.004187	4.898978	0.0000
	To GDP	-0.012854	0.003794	-3.387675	0.0007
	To G_social	0.032530	0.011548	2.816960	0.0048
	To Gini_coef	0.001165	0.004146	0.281091	0.7786
GDP	To GDP	0.009495	0.001938	4.898979	0.0000
	To G_sicial	0.022456	0.008262	2.718124	0.0066
	To Gini_coef	-0.006680	0.003908	-1.709283	0.0874
G_social (사회복지분야 지출)	To G_social	0.023810	0.004860	4.898979	0.0000
	To Gini_coef	-0.003096	0.003607	-0.858157	0.3908
Gini_coef (지니계수)	To Gini_coef	0.012303	0.002511	4.898979	0.0000

## 2. 충격반응 분석

〈그림 6-1〉은 각 변수의 구조적 충격에 대한 변수별 장기 누적 반응을 나타내고 있다. 각 칼럼별로 총 세수 확대(충격), 정부지출 확대, GDP 증가, 사회복지분야 지출 확대, 지니계수 증가에 대한 각 변수의 영향을 확인할 수 있다.

신뢰구간이 0을 포함하지 않는 일부 변수만이 유의성이 인정되거나 상관계수 부분의 유의성 검증을 고려해 충격반응 분석에서는 충격의 영향이 각 변수에 장, 단기적으로 어떠한 흐름을 보이는지 분석하는데 의의를 두고자 한다.

먼저 첫 번째 칼럼의 총 세수 증대는 정부지출을 단기적으로 확대시킨 후 일정 규모를 유지하며 중, 장기 전반적으로 양(+)의 방향성을 보이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GDP 역시 단기에는 영향이 없으나 중, 장기적으로 증가하는 방향성을 보인다. 반면 세수의 확대는 단기에 사회복지분야 지출을 떨어뜨리고 시간이 지날수록 회복되기는 하나 장기적으로 음(-)의 방향성을 나타내고 있다. 지니계수는 충격 초기부터 전체 기간동안 양(+)의 방향성이 유지되고 있어 세수 확대가 전반적으로 지니계수를 높여 소득격차를 확대시키는 역할을 하는 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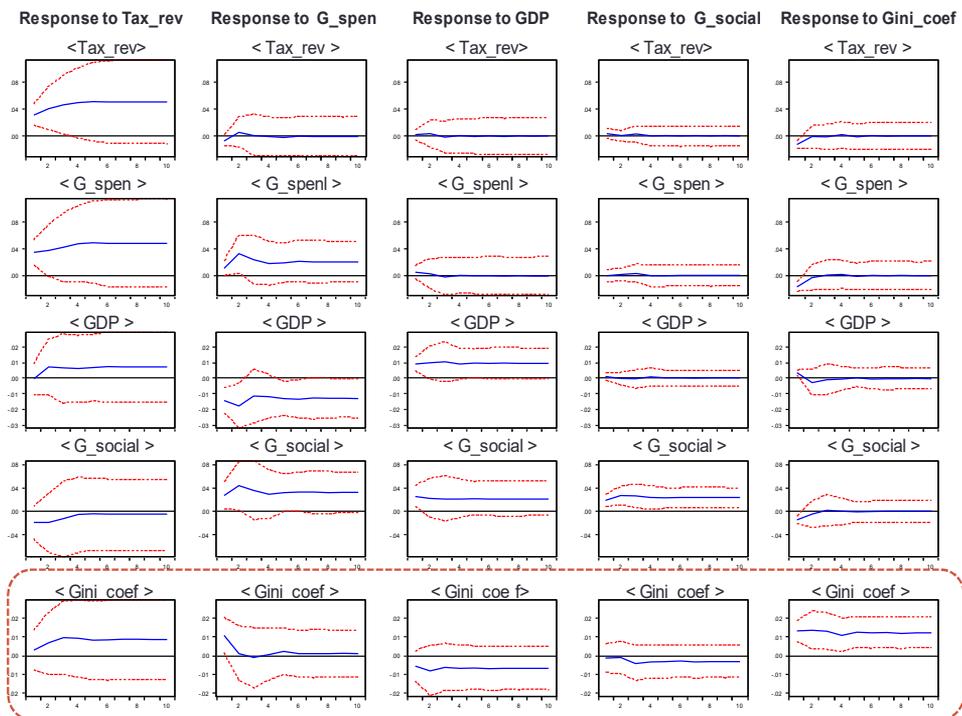
으로 확인된다.

두 번째 칼럼의 총 지출 확대의 경우 전 기간 유의성을 보이며 GDP를 낮추는 것으로 확인된다. 또한 사회복지분야 지출을 늘리는 것으로 나타난다. 지니계수에 대한 영향은 초기 지니계수를 높이고 있으나 다음 기부터 감소하며 점차 그 영향이 소멸되고 있다.

세 번째 칼럼의 GDP 증가는 장기계약이 부가된 세수 및 정부지출에 대한 영향을 제외하고 충격 초기 사회복지분야 지출을 증가시킨 후 일정 수준을 유지하며 장기적으로 긍정적인 역할을 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지니계수의 경우 단기적으로 하락한 후 유사한 수준을 유지하며 국내 소득격차가 단기, 중기, 장기 전반적으로 완화되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사회복지분야 지출 확대의 경우 장기적으로 지니계수에만 영향이 확인되는데 단기에는 크게 영향을 미치지 못하나 중기에 하락하며 소득격차를 완화시키는 영향을 미치고 있다. 총 지출(재정지출)이 충격 초기 지니계수를 높이는 영향을 나타낸데 반해 사회복지분야 지출은 중, 장기로 갈수록 지니계수를 낮추고 있어 GDP 이외에 사회복지분야 지출 분야에서 소득격차 완화를 확대시킬 수 있는 여지가 있음을 보여준다.

〈그림 6-1〉 전국 데이터 누적 충격반응함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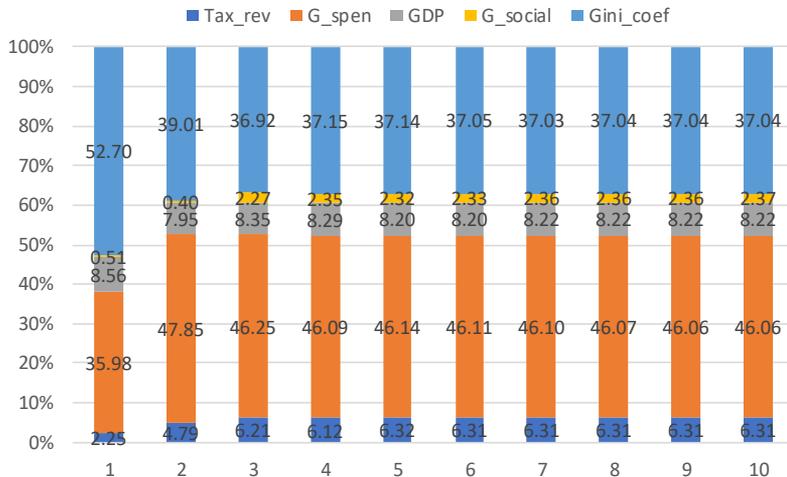
### 3. 예측오차분산분해 분석(FEVD: Forecast Error Variance Decomposition)

분산분해분석은 과거 데이터 변화(분산)에 각 변수의 변화(분산)가 차지하는 정도를 나타내는 역사적 분산분해분석과 향후 각 변수의 변화에 모형내 변수들이 미치는 영향의 비중을 분석하는 예측오차분산분해분석이 있다. 이중 본 연구에서는 모형에 포함된 변수들 중 지니계수를 중심으로 시간의 변화에 따라 각 변수들이 어떠한 규모로 영향을 미치게 될지 예측오차분산분해분석을 실시한다.

전국 지니계수의 경우 단기적(1기)으로 지니계수 자체의 영향이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치고 있으나 2기(2년) 이후부터는 재정지출 변화의 영향을 가장 크게 받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그 외에 GDP, 총 세수 및 사회복지분야 지출 순으로 영향을 받고 있다.

흥미로운 점은 일반적으로 자체 변화가 그 변수의 변화에 가장 큰 요인이 되는데 반해(아닌 경우도 물론 있다) 한국 지니계수는 2기부터 자체 변화보다도 재정지출의 변화가 지니계수 변화의 더 큰 요인이 되고 있다는 점이다. 이러한 결과는 앞부분에서 확인한 상관계수 및 충격반응분석 결과와 종합해 볼 때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준다. 두 가지 분석 결과 국내 재정지출은 지니계수를 높이는 방향성을 보이고 있으나 유의성은 없는 것으로 나타나 국내 소득격차 완화에 아무런 역할을 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러나 향후 지니계수의 변화에는 가장 큰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따라서 국내 재정정책의 내용과 방향성을 장기적으로 소득격차를 해소할 수 있는 방향으로 변화시킬 필요가 있으며 그러한 변화가 이루어질 경우 소득격차 해소에 유의성 있는 현격한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보여진다.

〈그림 6-2〉 전국 지니계수 분산분해(FEVD)



## 제2절 지방자치단체 데이터

### 1. 시차분포모형 추정결과

#### 1) 단기 영향

단기적으로 지역 소득격차 변화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는 4가지 변수 중 지방재정지출과 사회복지 분야 지출로 확인된다. 두 변수 모두 95% 유의수준 하에서 지니계수와 음의 상관관계를 보이고 있다. 이는 단기적으로 지방정부들이 재정지출을 늘리고 사회복지분야 지출을 늘릴 경우 지역 소득격차를 줄이는데 유의미한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규모면에서 볼 때 지방재정지출을 한 단위 증가시킬 경우 지니계수를 줄이는데 25.13%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사회복지분야 지출을 한 단위 증가시킬 경우 지니계수를 줄이는데 13.08% 영향을 미치고 있다.

지방세수의 증가는 지역소득 격차를 확대시키고 GRDP 증가는 지역소득 격차를 줄이는 방향성을 나타내고 있으나 통계적 유의성은 없는 것으로 나타나 두 변수의 경우 단기적으로 지역 소득격차 변화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확인된다.

#### 2) 장기 영향

장기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변수 역시 단기와 동일하게 지방재정지출과 사회복지분야 지출인 것으로 나타난다. 그러나 지방재정지출을 한 단위 증가시킬 경우 장기적으로 지니계수를 높이는데 68.88% 영향을 미치며 단기영향과 상반된 결과를 보이고 있다. 사회복지분야 지출 역시 지출 확대 시 지니계수를 높이는데 21.16% 영향을 미치고 있다. 따라서 지방재정지출 및 사회복지분야 지출은 단기에는 지역 소득격차를 완화시키는 긍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으나 장기로 갈수록 지역 소득격차를 악화시키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된다.

이는 지방재정 지출 및 사회복지분야 지출을 단기적인 소득불균형(격차) 해소를 위한 사업에 치중하기보다 장/단기 균형을 고려한 장기적 관점에서 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또한 현재까지 추진해온 사업 방향성의 점진적인 전환이 필요하다는 점을 시사하고 있다. 새로운 사업의 추진 역시 장기적 관점에서 소득 불균형을 해소할 수 있는 방향을 고려하는 등 지방재정지출 및 사회복지분야 지출의 구성과 성격에 변화를 가져올 필요가 있다.

지방세수 및 GRDP는 소득격차를 낮추는 방향성을 보이고 있으나 유의성이 확인되지 않아 장기 및 단기 전반적으로 소득격차 변화에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표 6-2〉 지방자치단체 데이터 시차분포모형 추정 결과

Variable	Coefficient	Std. Error	t-Statistic	Prob.*
<b>Short Run Equation</b>				
D(DLNG_EXPEN)	-0.251262	0.124730	-2.014440	0.0576
D(DLNG_SOCIAL)	-0.130824	0.034692	-3.771003	0.0012
D(DLNLOCALTAX_REV)	0.355595	0.213729	1.663770	0.1117
D(DLNGRDP)	-0.154003	0.246356	-0.625125	0.5390
C	-0.037548	0.007498	-5.007516	0.0001
<b>Long Run Equation</b>				
DLNG_EXPEN	0.688798	0.227536	3.027203	0.0067
DLNG_SOCIAL	0.211587	0.060649	3.488691	0.0023
DLNLOCALTAX_REV	-0.397392	0.252753	-1.572254	0.1316
DLNGRDP	-0.091857	0.153958	-0.596637	0.5574

### 3) 단기 횡단면 상관계수 분석(지역별 단기 영향)

수원시를 포함한 4개 개별 패널변수의 단기 횡단면 상관계수 분석으로 각 지역별 변수들이 해당 지역소득격차에 미치는 단기적인 영향을 살펴보고자 한다.

#### 1) 수원시

수원시의 경우 95% 유의수준 하에서 모든 변수에서 유의한 결과가 나타나고 있다. 4개 지역 통합 패널 결과와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단기적으로 지역 소득격차를 낮추는데 사회복지분야 지출만이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된다. 그 외에 지방재정지출과 지방세수, GRDP 변수의 경우 오히려 지역 소득격차를 확대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다.

특히 수원시 GRDP가 증가할 경우 지역소득격차가 증가하고 있어 수원시의 경우 경제성장이 고르게 이루어지지 못하고 불균형한 성장과 분배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이러한 요인의 하나로 소득원천별 지니계수분해에서 확인된 바와 같이 지역 경제성장 과정에서 근로소득과 부동산소득의 불균형이 확대되며 전반적인 소득격차로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수원시 지방재정 지출이 단기적으로 지역 소득 불균형을 확대시키는 반면 사회복지분야 지출이 소득 불균형을 완화시키고 있는 결과와 관련해서는 사회복지분야 지출 중 기초생활보장 등 저소득층을 위한 지원 및 이전사업의 규모가 격차를 완화시키는 수준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반면 사회복지분야 지출 이외의 재정지출은 일부 계층의 소득 증대에 더 크게 영향을 미치는 구조로 구성되어 있을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 재정지출의 영향이 분배보다 성장과 효율성에 방향성이 있는 경우 이러한 결과가 도출될 수 있다. 또한 높은 사회복지분야 지출 비중에도 불구하고 소득격차를 낮출 정도로 충분하지 못해 사회복지분야 지출 비중을 확대할 여지가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로 해석될 수 있다.

지방소득세수 확대가 수원시 소득격차를 확대시키는 원인은 많은 연구에서 지적하고 있는 것처럼 소득세의 누진도가 낮은 데 따른 결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성명재(2015) 등이 주장하는 것처럼 누진도는 높지만 세수가 작아 세수가 충분히 지방재정지출 및 사회복지분야 지출을 통해 소득재분배에 효과를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경우로 볼 수도 있다.

따라서 수원시 소득격차 완화를 위해 이러한 결과와 원인을 고려한 수원시 경제 및 재정정책의 내용과 방향을 재정립할 필요가 있다.

## 2) 성남시

성남시의 경우 지방세수를 제외한 모든 변수들이 지역 소득격차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흥미로운 점은 수원시와 달리 지방재정지출, 사회복지분야 지출, GRDP가 증가할 경우 각각 지니계수를 낮춰 성남시 지역 소득격차를 낮추는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다는 점이다. 특히 지방재정지출의 경우 한 단위 변화가 지역소득격차를 변화시키는데 42.51%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GRDP의 증가 역시 59.39% 기여하는 등 규모면에서도 영향이 크게 나타나고 있다. 이는 성남시 재정정책 및 경제정책의 영향이 단기적으로는 지역의 소득격차를 완화시키는데 일정 규모 이상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음을 의미한다. 또한 지방세수의 경우 지니계수 변화에 아무런 영향이 없어 아직 지방세를 통한 정책활용의 범위가 클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 3) 용인시

용인시의 경우 규모의 차이는 있으나 성남시와 동일한 방향성을 보이고 있다. 즉 지방세수를 제외한 모든 변수들이 용인시 지역 소득격차를 낮추는데 유의미한 긍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 4) 고양시

고양시의 경우 지방세수 및 GRDP의 변화는 지역 소득격차 완화에 아무런 영향이 없는 반면 지방재정지출 및 사회복지분야 지출은 지역 소득격차를 줄이는데 긍정적인 역할을 하는 것으로 확인된다. 따라서 고양시의 경우 지방세를 통한 정책 및 경제정책 활용을 통해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전환시키는 노력을 할 필요가 있다.

#### 5) 종합분석

전반적으로 4개 지역 사회복지분야 지출은 단기적으로 지역 소득격차를 완화시키는데 긍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또한 수원시를 제외한 성남, 용인, 고양시의 지방재정지출 역시 지역 소득격차를 완화시키는 긍정적 요인이 되고 있다.

수원시의 경우 다소 다른 결과가 확인되는데 타 지역 대비 사회복지분야 지출을 제외한 재정 및 경제정책이 지역소득격차를 오히려 악화시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따라서 수원시의 경우 정책 수립시 단기적으로 수원시 소득격차 해소가 가능한 정책의 내용 및 방향성을 고려해야 할 필요성이 더욱 크게 존재한다. 또한 앞서 분석한 4개 지역 패널 장기영향에서 확인된 것처럼 장기적으로 재정지출 및 사회복지분야 지출의 영향이 지역소득격차를 확대시키고 있어 장기적인 측면에서도 소득격차를 완화시킬 수 있는 내용과 방향의 정책 수립이 필요하다.

〈표 6-3〉 수원·성남·용인·고양시 단기 횡단면 상관분석

Variable	수원시		성남시		용인시		고양시	
	Coefficient	Prob. *						
D(DLNG_EXPEN)	0.115	0.0131	-0.425	0.0007	-0.305	0.0118	-0.391	0.0051
D(DLNG_SOCIAL)	-0.080	0.0000	-0.098	0.0001	-0.113	0.0001	-0.233	0.0000
D(DLNLOCALTAX_REV)	0.903	0.0000	-0.062	0.2771	0.472	0.4395	0.109	0.2815
D(DLNGRDP)	0.416	0.0013	-0.594	0.0003	-0.536	0.0086	0.098	0.1828
C	-0.046	0.0000	-0.020	0.0000	-0.030	0.0002	-0.053	0.0000

## 2. 예측오차분산분해분석(FEVD: Forecast Error Variance Decomposition)

지방자치단체 예측오차분산분해분석은 한국 데이터의 경우와 동일한 방식으로 추정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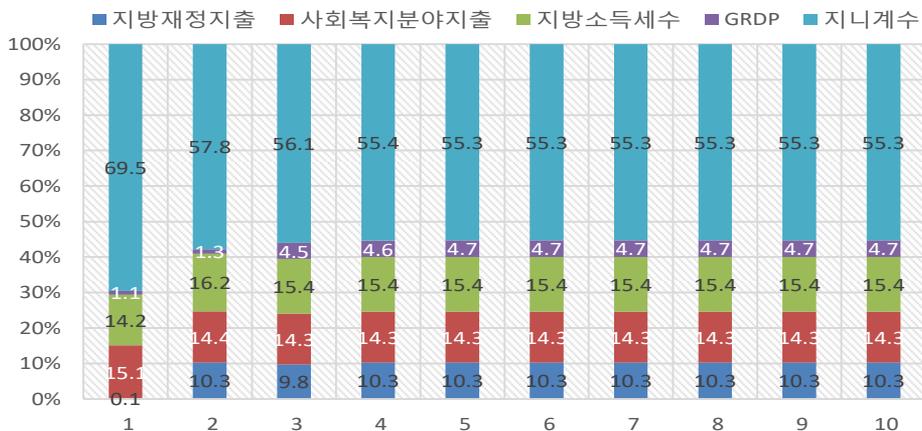
먼저 지방자치단체 패널데이터의 causality test를 통해 변수의 순서(order)를 정하고 시차(lag selection)를 결정하였다. 변수순서는 그랜저 검증결과와 연구의 방향성을 고려해 지방재정지출, 사회복지분야 지출, 지방소득세수, GRDP, 지니계수 순으로 설정하였다. 적용 시차는 LR test(sequential modified LR test statistic), AIC 테스트 등의 결과 95% 유의 수준 하에서 2차 시차가 최적 차수로 확인됨으로써 2차 시차를 적용하였다.

또한 장·단기 영향을 확인하기 위해 장기 제로(0)제약을 부가한 패널 구조적 VAR(SVAR) 모형을 구축해 한국 데이터 분석과 동일하게 예측오차 분산분해를 실시하였다.

〈그림 6-3〉은 지방자치단체 지니계수의 구조적 분산분해 결과이다. 시간의 변화에 따라 지니계수 변화에 각 변수들이 어떠한 규모로 영향을 미치게 될지 보여 주고 있다.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지니계수 변화(분산)를 일으키는 가장 큰 요인은 자체 변화 외에 사회복지분야 지출과 지방소득세수 변화인 것으로 확인된다. 단기와 중, 장기적으로 다소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 1기(1년)에는 사회복지분야 지출의 비중이 지방소득세수 변화보다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나 2기부터는 지방소득세수의 영향이 더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또한 1기에 거의 영향을 미치지 않던 지방재정지출 역시 2기부터는 영향력이 커져 지방소득세수(16.2%), 사회복지분야지출(14.4%), 지방재정지출(10.3%), GRDP(1.3%) 순의 영향을 나타내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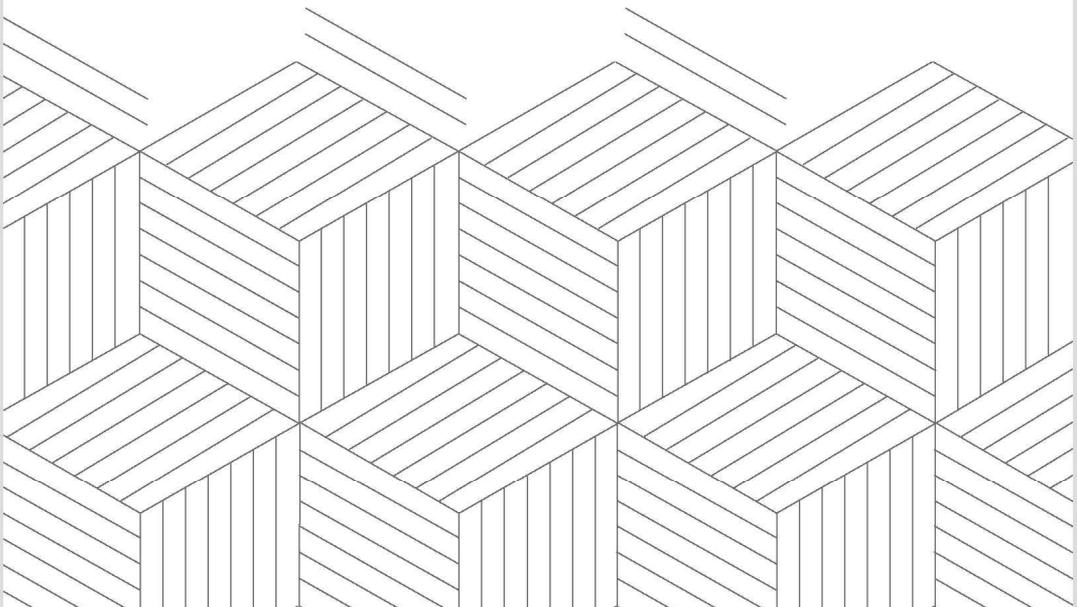
〈그림 6-3〉 지방자치단체 지니계수 분산분해



결론적으로 지방자치단체 소득격차는 단기(1기)에는 사회복지분야 지출, 중·장기적으로는 지방소득세수의 영향을 가장 크게 받고 있다고 정리할 수 있다. 따라서 앞의 분석에서 확인된 각 변수와 소득격차 간 영향의 방향성을 고려할 때 단기적으로 사회복지분야 지출을 늘리는 것이 소득격차를 낮추는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중장기적으로는 세수증대가 소득격차를 완화(또는 악화)시킬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한다. 또한 장기영향에서는 사회복지분야 지출 및 지방재정지출이 지역 소득격차를 오히려 확대시키는 결과로 확인되었던 점을 고려할 때 중·장기적인 사회복지분야 지출 및 지방재정지출의 영향이 격차 확대로 이어질 가능성이 나타난다. 따라서 사업의 내용과 방향성이 중·장기적으로 소득격차 해소에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정책적 전환이 필요해 보인다.

# 제7장

## 종합 및 시사점





## 제7장 종합 및 시사점

본 연구는 다양한 분야에서 다루어질 수 있는 격차의 문제를 소득관점에서 살펴보고 격차 해소를 위한 정부 및 지방정부 재정정책의 실효성 분석을 목표로 한다. 이를 위해 일차적으로 국내 및 수원시를 비롯한 유사규모 자치단체들의 지니계수를 추정하고 소득원천별 불평등 기여도 및 한계효과를 분석하였다. 또한 이렇게 산출된 지니계수 변화에 정부 및 지방재정지출, 사회복지분야 지출, 총 세수(지방소득세) 변화 등 재정정책과 경제성장(GDP, GRDP) 변화를 통한 정부정책의 영향을 분석하였다.

분석방법은 전국 데이터의 경우 시계열 자료를 활용한 구조적 VAR(SVAR) 분석, 기초자치단체 데이터의 경우 패널시차분포모형(ARDL) 분석을 활용하였다.

지니계수의 산출은 한국노동패널(KLPS) 9차~22차년도(2006년~2019년) 전국소득자료와 수원시, 성남시, 고양시, 화성시, 용인시 소득자료를 활용하였다.

### 1. 한국데이터

지니계수 추정결과 한국 지니계수는 2019년 기준 0.379로 2017년부터 지속적인 상승 추이를 보이고 있다. 이는 가계금융복지조사 소득자료를 활용한 통계청 발표 지니계수 대비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을 보이는 결과이다. 통계청 발표자료의 경우 2017년 이후 지니계수가 하락하며 최근 3년래 국내 소득격차가 하락하는 추이를 보이고 있다. 국내 공표 지니계수가 가진 '지니퍼즐'<sup>8)</sup>의 문제, 상위층 소득변화를 빠르게 반영하지 못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한국노동패널 소득자료를 통해 산출한 본 연구의 결과를 분석해 볼 필요가 있다.

소득원천별 지니계수 분해 결과 한국은 근로소득과 부동산소득 불평등 문제가 가장 심각한 것으로 나타난다. 소득 불평등의 문제는 성별 임금격차, 교육수준, 연령, 종사상 지위, 업종에 따른 소득격차 등 다양한 원인에 의해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근로소득 부분의 불평등 해소를 위해 이러한 다양성을 고려한 세심하고 디테일한 노동 및 임금정책이 수립될 필요가 있다. 그와 더불어 저소득층에 대한 공적부조, 사회보장제도와 같은 이전소득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8)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다른 OECD 국가들에서 지니계수가 높아지며 소득격차 확대 추이가 나타났던데 반해 한국 지니계수의 경우 감소하는 현상을 보이는 경우를 최제민(2016) 등은 '지니퍼즐'로 명명하고 있다.

소득재분배 효과를 극대화시키는 노력이 필요하다.

부동산소득의 불평등 문제는 부동산 가격 안정화를 위한 정책, 조세정책 등을 통해 개선방법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가격 안정화의 경우 공급과 수요의 문제, 투기성 자산성격의 문제, 정책의 파급효과 불확실성 등 고려해야 할 부분에 복합적인 어려움이 있다. 조세정책의 경우 역시 가격 안정화와 연계될 수 밖에 없으며 조세저항에 직면할 가능성을 고려해야 한다. 때문에 이러한 방법 외에 부동산 분야 소득을 격차 완화에 효과를 보이고 있는 금융소득으로 전환시킬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하거나 이전소득을 확대해 불평등 구조를 개선하는 방안이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한국 지니계수와 정부지출, 사회복지분야 지출, 총 세수, GDP 변수로 구성된 SVAR분석 결과 장기적으로 국내총생산(GDP) 확대만이 소득격차를 완화시키는 긍정적 역할을 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국내 재정지출 및 사회복지분야 지출의 확대는 장기적으로 소득격차 완화에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 반면 세수 증대는 지니계수를 높여 소득격차를 확대시키는 부정적 역할을 하는 것으로 확인된다.

충격반응 분석을 통해서도 사회복지분야 지출이 중, 장기로 갈수록 지니계수를 낮추는 반응을 보이고 있어 GDP 이외에 사회복지분야 지출을 통해 소득격차 완화를 확대시킬 여지가 있음이 확인되었다.

지니계수의 예측오차분산분해 결과 지니계수 변화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변수가 지니계수 자체의 변화보다 정부 재정지출의 변화가 더 큰 요인으로 확인되었다. 따라서 현재까지 재정지출이 소득격차 완화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 이유는 재정지출의 규모가 충분하지 못했거나 재정지출 중 사회복지지출 및 이전지출부분의 규모가 상대적으로 부족함에 따른 영향으로 보이며 향후 이를 개선하고 재정지출의 내용과 방향성을 소득격차 완화에 초점을 맞춘다면 소득격차 해소에 현격한 변화를 가져올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 2. 수원시 및 유사규모 자치단체 데이터

지니계수 추정결과 수원시를 비롯한 유사규모 자치단체 지니계수는 한국보다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또한 한국 지니계수가 최근 증가 추이를 보이는데 반해 전반적으로 하락하며 소득 불평등이 개선되는 추이를 보인다. 2019년 기준 수원시 지니계수는 0.338로 성남시(0.360), 고양시(0.340) 대비 소득격차가 낮은 것으로 확인되며 화성시(0.218), 용인시(0.323) 보다는 소득격차가 높은 것으로 나타난다.

원천소득별 지니계수 분해 결과 수원시와 성남시의 경우 한국 데이터와 유사하게 근로소득과 부동산소득 불평등도가 높으며 소득 격차를 악화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다. 근로소득의 불

평등은 한국 데이터의 경우와 같이 성별 임금격차, 교육수준, 연령, 종사상 지위, 업종에 따른 소득격차 등 다양한 원인이 있을 수 있다. 따라서 기초자치단체 차원에서 대처할 수 있는 근로 및 노동정책, 임금정책, 관련사업 등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 부동산소득 불평등 해소의 문제는 국가정책에 의존하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 그러나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정부정책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자체 방안 마련이 필요해 보인다. 이전소득 및 금융소득의 경우 두 지역 모두 소득 불평등도가 낮고 소득 격차를 낮추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따라서 지자체 차원의 이전소득 확대 방안을 통해 근로소득 격차와 부동산소득 격차에서 발생하는 소득 불평등을 일정수준 완화시킬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패널 ARDL 분석결과 지역 소득격차 변화에 단기 및 장기적 영향을 미치는 변수는 지방재정지출과 사회복지분야 지출 두 변수로 확인되었다. 그러나 단기적으로는 두 변수 모두 소득 격차를 줄이는데 유의미한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반면 장기적으로는 지니계수를 높여 지역 소득격차를 악화시키는 부정적 역할을 하는 것으로 확인된다. 이는 재정 및 사회복지분야 지출에 포함된 사업의 성격, 방향성 등이 성장을 통한 분배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데 따른 결과로 보여진다.<sup>9)</sup> 따라서 지방재정 지출 및 사회복지분야 지출을 단기적인 소득불균형(격차) 해소를 위한 사업에 치중하기보다 장/단기 균형을 고려한 장기적 관점에서 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으며 현재까지 추진해온 사업 방향성에 점진적인 전환이 필요하다는 점을 시사한다. 새로운 사업의 추진 역시 장기적 관점에서 소득 불균형을 해소할 수 있는 방향을 고려하는 등 지방재정 및 사회복지분야 지출의 구성과 성격에 변화를 가져올 필요가 있다.

단기 횡단면 분석을 통해 각 자치단체별 지니계수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한 결과 수원시의 경우 사회복지분야 지출만이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지방재정지출과 지방세수, GRDP 변수의 경우 오히려 지역 소득격차를 확대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다. 이는 수원시의 경우 경제성장이 고르게 이루어지지 못하고 불균형한 성장과 분배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시사하는 부분이다. 소득원천별 지니계수분해에서 확인된 바와 같이 지역 경제성장 과정에서 근로소득과 부동산소득의 불균형이 확대되며 전반적인 소득격차로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수원시 지방재정 지출이 단기적으로 지역 소득 불균형을 확대시키는 반면 사회복지분야 지출이 소득 불균형을 완화시키고 있는 결과와 관련해서는 사회복지분야 지출 중 기초생활보장 등 저소득층을 위한 지원 및 이전사업의 규모가 격차를 완화시키는 수준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사회복지분야 지출 이외의 재정지출은 일부 계층의 소득 증대에

9) 세부사업별 분석이 필요한 부분으로 후속연구가 필요하다.

더 크게 영향을 미치는 구조로 구성되어 있을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 재정지출의 영향이 분배보다 성장과 효율성에 방향성이 있는 경우 이러한 결과가 도출될 수 있다. 또한 높은 사회복지분야 지출 비중에도 불구하고 소득격차를 낮출 정도로 충분하지 못해 사회복지분야 지출 비중을 확대할 여지가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로 해석할 수 있다.

지방소득세수 확대가 수원시 소득격차를 확대시키는 원인은 많은 연구에서 지적하고 있는 것처럼 소득세의 누진도가 낮은 데 따른 결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성명재(2015) 등이 주장하는 것처럼 누진도는 높지만 세수가 작아 세수가 충분히 지방재정지출 및 사회복지분야 지출로 이어져 소득재분배 효과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경우로 볼 수도 있다.

따라서 수원시 소득격차 완화를 위해 이러한 결과와 원인을 고려해 단기 및 장기적인 측면에서 수원시 경제 및 재정정책의 내용과 방향을 재정립할 필요가 있다. 특히 수원시의 경우 기타 유사지역들과 상이한 결과를 보이고 있어 경제정책과 재정정책, 정책별 세부사업에 대한 제고가 필요해 보이며 세부사업별 분석이 포함된 후속연구가 필요해 보인다.

성남시의 경우 수원시와 달리 지방재정지출, 사회복지분야 지출, GRDP가 증가할 경우 각각 지니계수를 낮춰 성남시 지역 소득격차를 낮추는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용인시는 규모의 차이는 있으나 성남시와 동일한 방향성을 보이고 있다. 고양시의 경우 지방세수 및 GRDP의 변화는 지역 소득격차 완화에 아무런 영향이 없는 반면 지방재정지출 및 사회복지분야 지출은 지역 소득격차를 줄이는데 긍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표 7-1〉 4개 자치단체 단기 개별 영향 요약

구분	지방재정지출	사회복지분야지출	지방세수	GRDP
수원시	부정적	긍정적	부정적	부정적
성남시	긍정적	긍정적	효과없음	긍정적
용인시	긍정적	긍정적	효과없음	긍정적
고양시	긍정적	긍정적	효과없음	효과없음

주: 시차분포모형의 단기 횡단면 상관계수 분석 결과, 각각 지니계수(소득격차)에 미치는 단기 영향

패널 SVAR 장기 제약을 통한 예측오차 분산분해분석 결과 지방자치단체 소득격차 변화는 단기(1기)에는 사회복지분야 지출, 중·장기적으로는 지방소득세수의 영향을 가장 크게 받고 있다. 따라서 패널ARDL 분석에서 확인된 각 변수와 소득격차 간 영향의 방향성을 고려할 때 단기적으로 사회복지분야 지출을 늘리는 것이 소득격차를 낮추는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중장기적으로는 세수증대가 소득격차를 완화(또는 악화)시킬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

한다. 또한 장기영향에서는 사회복지분야 지출 및 지방재정지출이 지역 소득격차를 오히려 확대시키는 결과로 확인되었던 점을 고려할 때 중·장기적인 사회복지분야 지출 및 지방재정 지출의 영향이 격차 확대로 이어질 가능성이 나타난다. 따라서 사업의 내용과 방향성이 중·장기적으로 소득격차 해소에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정책적 전환이 필요하다.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한계점을 갖는다. 결과를 통한 시사점이 세부적이고 적용 가능한 정책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정부지출 및 지방재정지출 사업별 세부 내용 분석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 또한 코로나 영향이 반영된 2020 및 2021년 데이터가 미 반영되어 있다. 이러한 한계점을 보완할 수 있는 후속 연구가 필요하다.



## | 참고문헌 |

## 〈국문 자료〉

- 감사원(2021.5), 2020회계연도 국가결산검사보고 I, II
- 강병구 외(2008), 도시와 농촌의 가구빈곤율 차이에 대한 요인분석, 사회보장연구, 24권 1호, pp. 73-93
- 강한 경제, 민생 버팀목 「2022년 예산안」 및 「2021~2025 국가재정운용계획」(2021.08.31.)
- 고제이 외(2014), 조세지출과 재정지출의 소득재분배 효과 및 경제적 파급효과 분석,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국회예산정책처(2020.10), 2021년도 예산안 총괄 분석 I, 국회예산정책처
- 국회예산정책처(2021.8), 2020회계연도 결산 총괄분석 I, II
- 기획재정부(2021.8.27), 2022년 예산안 주요내용  
 \_\_\_\_\_(2021.8.27), 강한경제 민생버팀목 「2022년 예산안」  
 \_\_\_\_\_(2021.8.31), 「2021~2025 국가재정운용계획」
- 김경아(2008), 국내 노인가구의 소득불평등 현황 및 공적 연금의 소득불평등 개선효과에 관한 연구, 한국사회복지정책학회, 32권 1호, pp.9-107
- 김군수 외(2013), 경기도 정책시뮬레이션 모형개발연구, 경기연구원
- 김낙년·김종일(2013), 한국 소득분배 지표의 재검토, 한국경제의 분석, 19권 2호, pp.1-50
- 김미경(2013), 조세체제와 자본주의 다양성, 국제정치논총, 53권 4호, pp.225-257
- 김성순(2014), 재정정책이 경제성장과 소득분배에 미치는 영향-VEC Approach-, 한국재정학회, 11권 3호, pp.255-280
- 김승래 외(2009), 부문별 재정지출의 거시경제적 효과에 관한 연구, 한국조세연구원
- 김홍균·박승준(2012), SVEC 모형을 이용한 재정정책 효과 분석, 한국재정학회, 5권 1호, pp.1-35
- 박중서 외(2017),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미래 가족 변화의 사회경제적 영향과 정책과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성명재(2015), 재정건전성 확보와 경제활성화를 위한 세제개편 과제, 건진재정포럼 정책토론회 자료
- 여유진 외(2005), 빈곤과 불평등의 동향 및 요인 분해, 연구보고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오병기(2006), 서울시 사회개발비 및 경제개발비와 지역소득 사이의 동태적 인과관계 검증: 케인즈 모형과 바그너 가설을 중심으로, 서울도시연구, 7권 3호, pp.131-147
- 이강국(2014), 피케티의 『21세기 자본』과 한국경제, 경제논집, 53권 2호, pp.195-203
- 이기동 외(2016), 지방재정지출이 지역경제 성장 및 소득격차에 미치는 영향, 한국은행
- 이상은·최유석(2010), 서울시 강남과 비강남 지역간 소득 및 재산 격차와 요인분해, 韓國社會福祉學,

62권 3호, pp.31-58

이영성(2009), 시·군·구의 사회개발비가 지역내총생산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실증분석, 한국지역학회, 25권 3호, pp.5-23

이창근(2013), 지방재정지출의 지역별 효과분석, 지방재정논집, 18권 2호, pp.57-81

임병인(2010), 보험료 공제제도의 소득재분배 효과, 재정학연구, 3권 2호, pp.125-156

장연주 외(2011), 한국의 지역별 가구소득불평등 분해 분석, 지역사회연구, 19권 3호, pp.1-20

전규식 외(2016), 조세 및 재정지출 정책의 소득재분배 효과 분석, 한국응용경제학회, 18권 2호, pp.125-165

전병목 외(2017), 저성장 시대의 조세정책 방향(1) -소득재분배를 중심으로-, 한국조세연구원, 275권, pp.57-60

정성호, 김완희(2016), 정부기능별분류(COFOG)의 체계적 고찰, 한국조세제정연구원

조경엽(2008), 재정지출의 형평성과 효율성에 관한 실증분석 연구, 한국경제학회, 56권 2호, pp.91-137

\_\_\_\_\_유진성(2013), 무상복지의 소득재분배 효과, 한국경제연구원, 2012권 9호, pp.1-19

최제민(2016), 금융위기 이전과 이후 지니계수 변화 추이와 소득원천별 지니계수 분해: 전국 및 지역별 분석, 성균관대학교 학위논문

한중석 외(2018), 소득재분배 정책의 거시경제적 효과-이질적 경제주체 모형분석, 한국조세연구원

허식이성원(2008), 서울시 강남지역과 강북지역간 지가격차에 관한 연구, 감정평가연구, 18권 2호, pp.125-144

홍민기 외(2015), 노동패널자료 연구[I]-패널자료 비교연구를 중심으로, 한국노동연구원

홍석철·전한경(2013), 인구고령화와 소득불평등의 심화, 한국금융연구원, 19권 1호, pp. 71-122

## 〈영문 자료〉

Eunsun Yang, Sunghyun Henry Kim, Maria H Kim & Doojin Ryu, (2018) Macroeconomic shocks and stock market returns: the case of Korea, Applied Economics, Vol 50, No. 7, pp. 57-773

Goldin and Katz, (2008) The Race Between Education and Technology, Belknap Press for Harvard University Press

Lerman, R. I., & Yitzhaki, S, (1985) Income inequality effects income source: a new approach and applications to the United States, The review of economics and statistics, pp.151-156

PK Goldberg, N Pavcnik, (2007) Distributional Effects of Globalization in Developing Countries, Journal of economic Literature Vol.45 No.1, pp.39-82

〈홈페이지〉

고양시, <http://www.goyang.go.kr>

기획재정부, <https://www.moef.go.kr>

성남시, <https://seongnam.go.kr>

수원시, <https://suwon.go.kr>

용인시, <https://www.yongin.go.kr>

지방재정365, <https://lofin.mois.go.kr>

정책브리핑 [www.korea.kr](http://www.korea.kr)

한국노동패널조사, <https://www.kli.re.kr>

화성시, <https://www.hscity.go.kr>



# Abstract



## The Effect of Government and Local Government Expenditure on Easing Income Inequality

This study discusses on the issue of mitigating polarization which are dealt with in various fields in terms of income. The study aims to analyze the effectiveness of government and local government fiscal policies to ease the gap. To do this, the Gini coefficients of similar sized local governments to Suwon city and the national coefficient are estimated, and the contribution and the marginal effects of inequality by income source were analyzed. In addition, the impact of government policies through marginal changes in fiscal and economic growth (GDP, GRDP) such as changes in government and local fiscal expenditures, social welfare expenditures, and total tax revenue (local income tax) was analyzed on the change in the Gini coefficient calculated. Structural VAR (SVAR) analysis is used for national data, and panel lag distribution model (ARDL) analysis is used for local government data. The Gini coefficient was calculated using the national income data for the 9th ~ 22nd years (2006 ~ 2019) of the Korea Labor Panel (KLPS) and the income data from Suwon, Seongnam, Goyang, Hwaseong, and Yongin City.

As a result of the estimation of the national data, the Gini coefficient of Korea is 0.379 as of 2019, showing a continuous upward trend since 2017.

The decomposition of the Gini coefficient by income source shows the inequality in wage and real estate income is serious in Korea. The problem of earned income inequality can be caused by various causes such as the gender wage gap, education level, age, occupational status, and income gap by industry.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the meticulous and detailed policies for labor and wage that take this diversity into account to resolve inequality in the wage

and salary sector. In addition, efforts are needed to maximize the effect of income redistribution by actively utilizing transfer income such as public assistance to the low-income class and the social security system.

The problem of inequality in real estate income can be improved through policies for stabilizing real estate prices and tax policies. However, in the case of price stabilization, there are complex difficulties to be considered, such as supply and demand problems, the nature of speculative assets, and uncertainty about the ripple effect of policies. Tax policy must also be linked to price stabilization, and the possibility of facing tax resistance must be considered. Thus, in addition to these methods, it is necessary to think about ways to convert real estate income into financial income that is effective in narrowing the gap or to improve the inequality structure by expanding transfer income.

The result of SVAR analysis consisting the national Gini coefficient shows government spending, social welfare expenditure, total tax revenue, and GDP variables, it is confirmed that in the long run, only the expansion of gross domestic product (GDP) plays a positive role in bridging the income gap. Expansion of domestic fiscal and social welfare expenditures has no effect on mitigating the income gap in the long run, and it is confirmed that an increase in tax revenue plays a negative role widening the income gap raising the Gini coefficient.

The Gini coefficients of the local governments with similar size of population to Suwon city are lower than that of Korea. In addition, while the Gini coefficient of Korea has recently shown an upward trend, they have generally declined, showing a easement in income inequality.

As of 2019, the Gini coefficient of Suwon is 0.338, which is confirmed to be lower than Seongnam-si and Goyang, and the income gap was higher than that of Hwaseong and Yongin. Since the Gini coefficient of Hwaseong City was too low, it was excluded from the analysis. As a result of decomposition of the Gini coefficient by income source, Suwon City and Seongnam City have steep income inequality on wage and real estate, similar to the Korean data, and are confirmed as an exacerbating factor of the income gap.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consider labor and labor policies, wage policies, and related projects that can be dealt with

at the level of local government. Although the issue of resolving the real estate income inequality is within the limits of the national policy, it is necessary to prepare its own measures to respond to the changes in government policy through continuous monitoring. Both transfer and financial income show the low income inequality and narrow the income gap. Therefore, it seems that income inequality can be alleviated to a certain level through the transfer income expansion plan.

As a result of the panel ARDL analysis, the variables that have short-term and long-term effects on the changes in regional income inequality are identified as two variables: local financial expenditure and social welfare expenditure.

However, in the short run, both variables have a significant effects on reducing the income gap, while in the long run, they appear to exacerbate the regional income gap raising the Gini coefficient. This suggests that local fiscal and social welfare expenditures need to be pursued from a long-term perspective considering the long-term/short-term balance rather than focusing on short-term disparities, and that a gradual shift in the direction of the project is required. The promotion of new projects also needs to bring about changes in the composition and nature of local finance and social welfare spending, considering the income inequality from a long-term perspective.

As a result of the short-term cross-sectional analysis for each local government, the effect on the Gini coefficient of Suwon shows that only social welfare expenditure has a positive effect. The variables, however, such as local fiscal expenditure, local tax revenue, and GRDP, appear to be rather factors that widen the regional income gap.

Unlike Suwon, the increase in local financial expenditure, social welfare, and GRDP plays a positive role on easing the regional income gap lowering the Gini coefficient in Seongnam. The case of Yongin shows the same direction with Seongnam while Yongin has a different size. Lastly local financial expenditure and social welfare expenditure in Goyang have positive impacts on lessening the regional income inequality.

Keyword : Income inequality, Gini coefficient, Local financial expenditure, Panel ARDL, Panel SVAR
---

| 저자 약력 |

양은순

경제학박사

수원시정연구원 도시경영연구실 연구위원(현)

E-mail : nell7508@suwon.re.kr

주요 논문 및 보고서

「수원시 자동차서비스복합단지 도입 필요성 연구」 (2021, 수원시정연구원)

「수원시 경제 및 재정동향 모니터링」 (2020, 수원시정연구원)

「지방재정지출이 지역경제 및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 (2020, 수원시정연구원)

「코로나19로 인한 국내 및 수원시 산업별 실업 추정」 (2020, 수원시정연구원)

「코로나19로 인한 수원시 및 국내 경제손실액 추정」 (2020, 수원시정연구원)

「최저임금 인상이 수원시 고용 및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 (2019, 수원시정연구원)

「2019 수원시 주요 재정사업 평가」 (2019, 수원시정연구원)

「도시교통체계 변화에 따른 원도심 상권영향 분석 연구: 수원지역을 중심으로」 (2019, 수원시정연구원)

「수원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형 적정업체 수 산정」 (2019, 수원시정연구원)

「수원산업단지 발전 방안 연구」 (2019, 수원시정연구원)

「민간투자사업 적격성 분석을 위한 수원시 재정건전성 분석」 (2019, 수원시정연구원)

「현재가치 승수로 측정한 정부지출 증가의 거시경제 효과 분석」 (2019, 국제경제연구)

성수현

수원시정연구원 도시경영연구실 위촉연구원

E-mail : sushyun@nate.com

주요 논문 및 보고서

「수원시 자동차서비스복합단지 도입 필요성 연구」 (2021, 수원시정연구원)

「수원시 경제 및 재정동향 모니터링」 (2020, 수원시정연구원)

「지방재정지출이 지역경제 및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 (2020, 수원시정연구원)



